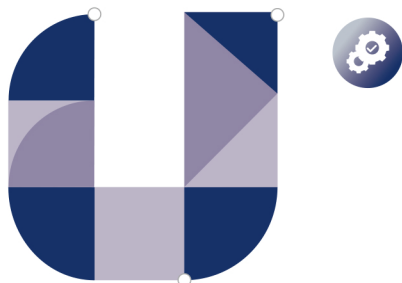


#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 Eran Halperin | 최훈석  
권영미 | 이하연 | 서정길





#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연구책임자

박주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Eran Halperin(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교수)

최훈석(성균관대학교 교수)

권영미(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이하연(성균관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서정길(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선임연구원)



##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사업(4/4년차)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KINU 연구총서 21-31-02

---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저자	박주화, Eran Halperin, 최훈석, 권영미, 이하연, 서정길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I S B N	979-11-6589-085-8 94340 979-11-6589-063-6 (세트)
가격	11,500원

---

©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례

요약 .....	13
I. 서론 .....	25
II. 글로벌 차원 요인의 메커니즘 .....	37
1.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대북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	39
2. 불평등의 이데올로기가 탈북민 편견에 미치는 영향 .....	68
III. 남북관계 차원 요인의 메커니즘 .....	87
1. 사회정체성 역동이 대북인식과 제로섬 신념에 미치는 효과 .....	89
2. 북한에 대한 공감감이 대북인식과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	128
IV. 국내 차원 요인의 메커니즘: 통일태도 및 사회적 규범 지각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	153
1.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	155
2. 구성개념 및 측정 문항 .....	167
3. 분석 .....	173
4. 논의 .....	198

V. 결론 .....	209
참고문헌 .....	221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45

# 표 차례

〈표 II-1〉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 문항들의 반응 빈도 및 백분율 .....	47
〈표 II-2〉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47
〈표 II-3〉 코로나19 관련 대북정책지지 하위집단별 개인특성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49
〈표 II-4〉 인구통계변수 및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의 기술통계치 및 구성개념 간 상관 .....	50
〈표 II-5〉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0
〈표 II-6〉 연령 하위집단별 개인특성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1
〈표 II-7〉 연령과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1
〈표 II-8〉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개인특성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	52
〈표 II-9〉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에 대한 회귀분석 .....	55
〈표 II-10〉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 문항들의 반응 빈도 및 백분율 .....	57
〈표 II-11〉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	58
〈표 II-12〉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및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의 기술통계치 및 구성개념 간 상관 .....	59
〈표 II-13〉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의 기술통계치 ..	59

〈표 II-14〉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61
〈표 II-15〉 구성개념 평균 및 표준편차	77
〈표 II-16〉 구성개념 간 상관	77
〈표 II-17〉 기술통계(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r), EFA 요인부하량	80
〈표 III-1〉 구성개념 평균 및 표준편차	105
〈표 III-2〉 구성개념 간 상관	108
〈표 III-3〉 남한 상대적 전형성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예측효과	109
〈표 III-4〉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예측효과	110
〈표 III-5〉 남한동일시, 한민족동일시, 남한 상대적 중심성의 남한 상대적 전형성에 대한 예측효과	117
〈표 III-6〉 남한동일시, 한민족동일시, 남한 상대적 중심성의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	118
〈표 III-7〉 2020년 측정변수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139
〈표 III-8〉 측정된 변수 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145
〈표 III-9〉 집단 간 감정, 믿음 이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145
〈표 III-10〉 협력적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6
〈표 III-11〉 통일지향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47
〈표 III-12〉 대안적 모델: 적합도 지수 및 모델 간 비교	149



〈표 IV-1〉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174
〈표 IV-2〉 통일에 대한 정서적 태도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175
〈표 IV-3〉 통일에 대한 태도 (19문항) 요인분석 결과	175
〈표 IV-4〉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 (9문항) 요인분석 결과	176
〈표 IV-5〉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177
〈표 IV-6〉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요인분석 결과	177
〈표 IV-7〉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178
〈표 IV-8〉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179
〈표 IV-9〉 대북정책 지지 요인분석 결과 (3요인)	179
〈표 IV-10〉 대북정책 지지 요인분석 결과 (2요인 지정)	180
〈표 IV-11〉 통제변수 평균 및 표준편차	180
〈표 IV-12〉 통일에 대한 태도 하위 차원 간 상관	181
〈표 IV-13〉 통일에 대한 태도 및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 협력적/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기술통계치 및 구성개념 간 상관	183
〈표 IV-14〉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	184
〈표 IV-15〉 연령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	184
〈표 IV-16〉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원 분산분석 결과	185
〈표 IV-17〉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치	186

〈표 IV-18〉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188
〈표 IV-19〉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	189
〈표 IV-20〉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 하위차원 및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의 회귀분석 결과 .....	192
〈표 IV-21〉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 하위차원 및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의 회귀분석 결과 .....	194
〈표 IV-22〉 성별/연령 하위집단 별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 상관계수 .....	195

# 그림 차례

〈그림 I -1〉 이념의 갈등 재생산 메커니즘 .....	31
〈그림 I -2〉 과제의 구성도 .....	34
〈그림 II -1〉 6요인 GFE 구조(확인적 요인분석) .....	79
〈그림 II -2〉 가치지향성과 자기관의 상호작용에 따른 GFE 점수 .....	83
〈그림 III -1〉 남북한 구성원들의 총소된 사회정체성 .....	91
〈그림 III -2〉 연구모형(이중 정체성,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과 외집단 인식 및 집단 간 합영 관계 신념 예측모형) .....	100
〈그림 III -3〉 남한 상대적 전형성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예측효과 .....	109
〈그림 III -4〉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예측효과 .....	111
〈그림 III -5〉 이중 정체성,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북한 지원대상 인식의 매개모형 .....	112
〈그림 III -6〉 이중 정체성과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매개모형 .....	113
〈그림 III -7〉 이중 정체성과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북한 경계대상 인식의 매개모형 .....	114
〈그림 III -8〉 이중 정체성과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북한 적대상 인식의 매개모형 .....	114
〈그림 III -9〉 이중 정체성과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남북 간 합영 관계 신념의 매개모형 .....	115

〈그림 Ⅲ-10〉 남한 상대적 중심성이 낮은 경우에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 동일시의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	119
〈그림 Ⅲ-11〉 남한 상대적 중심성이 높은 경우에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 동일시의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	119
〈그림 Ⅲ-12〉 구조 방정식 모델의 결과	148
〈그림 Ⅳ-1〉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185
〈그림 Ⅳ-2〉 성별에 따른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의 관계	197
〈그림 Ⅳ-3〉 연령에 따른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의 관계	197



북한, 통일, 대북·통일정책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태도가 성격과 같은 개인의 내적 속성에도 영향을 받지만(Hatemi et al. 2009), 분단과 같은 현저한 물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 구성원의 정치적 태도는 갈등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살펴보면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와 미중 전략경쟁, 남북관계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도발 등 비핵화 협상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의, 공정, 능력주의 등 사회적 담론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미치는 영향과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는 주로 국제정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 후자는 심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대한 정책환경 분석은 정치·사회적 환경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보다는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태도를 연결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치·사회적 맥락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규명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팬데믹 시기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대북지원 및 통일 관련 정책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2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한국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의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이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3에서는 국가정체성과 한민족정체성이 내집단 투사와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남북관계에 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4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감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5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ATU-K)를 활용하여 통일 태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전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강하게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중도층에 대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평등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팬데믹 시기 남북 화해와 협력이 우호적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20~30대 남성들의 심리특성을 고려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과 재난 상황에서 정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 특수적인 정책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소극적 지지층과 적극적 지지층을 구분하는 것이 정책 홍보 및 담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통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ATU-K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의 차별적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의 통일태도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연령과 성별, 교육 수준 등에 따른 사회 하위집단들 간의 통일태도를 세분화하여 정책 수립 및 홍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정치성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이라는 특수한 장면에서는 개인의 정치성향보다도 통일태도의 예측력이 더

높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태도를 구성하는 신념과 정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 즉,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는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신념과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역할을 고려하여 미디어의 영향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 내에서의 통일담론 등이 개인의 통일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민족정체성과 국가(남한)정체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사회정체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통일 교육 및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우호적인 남북한 간 상호인식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민족과 국가에 모두 강하게 동일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내외집단으로 구분되는 하위범주보다는 공동의 상위범주가 더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 및 홍보에서 두 정체성을 함께 증진하는 방안과 이에 더해 한민족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범주로 여겨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예: 한민족정체성)은 강화하고 다른 정체성(예: 남한정체성)은 약화하는 형태로의 개입 전략은 효과성이 크지 않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는 교류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남북한이 한민족이고 공동범주에 포함되어있다는 인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민족이 어떤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했는지, 남북한이 각각 한민족의 어떤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왜 한민족을 규정



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들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사회의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신념의 교정과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타파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저지위 낙인 집단을 평가절하하고 불평등 상황을 고착시키는 차별적 신념이 GFE(Group-Focused Enmity)의 현상적 특징임을 감안하면, 집단주의 가치를 숭상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성숙, 발전에 대해 심리적으로 몰입하고 자기-개념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강하게 지각하여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범으로부터 자신을 심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동시에 충족될 때 GFE를 경감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사회의 소수 약자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의 통합과 안녕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그리고 평등과 정의, 통합이 이 시대를 규정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GFE에서 관찰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관의 긍정적 상승효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의 다양한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공동체 가치를 고양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개인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의 교육과 계몽이 요구된다. 이는 장차 남북의 심리적 통합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체로서 평화와 화해를 증진하는 데에도 요구되는 심리적 조건일 수 있다.

**주제어:** 분단의 심리, 화해, 고착화된 갈등, 코로나19, 축소된 정체성, 공감, 북한이탈주민

# 2021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The public attitudes on North Korea, unification, and policy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re shaped mainly by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s. The political attitudes of the public in a society under profound physical conflicts, such as the division, are shaped not only by individual's innate qualities, such as one's characteristics (Hatemi et al. 2009) but also by the politic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onflicts. There are a diverse range of political and social events, which affect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t the global and national levels: COVID-19;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ter-Korean summit; and various events stemming from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such as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North Korea's provocations. Political and social events at the domestic level include a change in social discourse on specific issues, such as conflicts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over Korean Peninsula issues, justice, equality, and meritocracy.

How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effects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the peace process of the

Korean Peninsula is inevitably different from how such an environment shapes the public attitudes on the same issues. The former takes the form of primarily international politics, while the latter is distinctively characterized by psychological traits. Analyzing the policy environment under which the public attitude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is formed requires identifyi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linking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to the public attitudes, rather than assessing the direct attitudes on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itself. This research focuses on identifyi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induce changes under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in the public attitude.

In detail, Research 1 analyzes the public perception of COVID-19 under the pandemic era and evalu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policy and the intentions for behaviors. Research 2 analyzes the structure of prejudice on the lower-class stigmatized group in Korean society,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It also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 orient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nd the prejudice toward the lower, stigmatized group. Research 3 assesses the effects of national identity and one ethnic identity on in-group projection, perception on North Korea, and the faith in inter-Korean relations. Research 4 identifies the role of empathy toward North Korea. Lastly, Research 5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ttitude on unification and the public support for North Korea policy, utilizing the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ATU-K).

Policy implications drawn fro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olicy aimed at swing voters who neither strongly support nor oppose the policy on aiding North Korea for the COVID-19 pandemic. It is also crucial to establish social dialogue favorable to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during the pandemic era by facilitating social discussions on egalitarianism and communitarianism. In particular, it is worth accounting for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men in their 20s and 30s when reviewing the policy on coronavirus-related aid to North Korea. Building a public consensus on the policy for coronavirus-related assistance toward North Korea requires education to raise the awareness of a sense of nationalit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time-specific policy to earn the public trust of the government under the disaster situation. Moreover, differentiating passive supporters from active supporters could help promote the policy on assistance toward North Korea and develop the public discourse.

Seco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ATU-K for the national perception survey on unification. In particular, establishing and promoting policy should reflect the following: considering the differentiated effects of attitudes on unification

between the perception level and the emotional level in accurately grasping the individual attitudes on unification; and categorizing the attitudes on unification between lower social classes, divided by age, gender, the level of education. Although the individual political inclination is a vital element that affects the response to the government's polic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attitudes on unification have higher predictability than the individual political inclination under the unique context of the North Korea policy. Therefore, changing one's faith and exposing one to the emotional experiences that make up for attitudes on unification would be a more direct and effective approach to increase the public's trust and support for North Korea policy. In other words, the cooperative North Korea policy should focus on helping the public have faith in positive results accompanied by unification and positive emotions on unification. As for the public attitudes on the hostile North Korea policy, it is essential to focus on reducing the negative sentiment on unific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the media and the unification discourse within one's social group affect creating and changing the individual attitudes on unification, considering the subjective norms for unifi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ynamic interactions of the two social identities under the co-existence of one ethnic identity and national(South Korean) identity and reflect such an understanding in promoting unification-related education and building the public discourse. Improving favorable mutual

percep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ter-Korean relations not only requires making society's members strongly identify themselves with a sense of ethnicity and the nation but also making them feel that a common higher category is more essential than the lower category classified as the in- and out-group. Thus, the direction of education and policy should be set to enable enhancing two identities for unification-related education and promotion and help community members consider one ethnic community to be an important social category. An intervention strategy that allows for strengthening one identity(e.g., one ethnic identity) and weakening another identity(e.g., identity as South Koreans) is not that effective. Solely focusing on the community and its importance also has its limits for community members. Carrying out and promoting detailed and direct education is required as opposed to inducing people into believing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are one ethnicity and are included into a common category through the exchange of one dimensional and temporary events as follows: how the one ethnicity has come to acquire certain characteristics against a certain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how such characteristics have remained in place or changed under the contemporary society; what kinds of unique ethnic characteristics South and North Korea have; and why South and North Korea are the main parties to define one ethnic identity.

Fourth, enhancing the perception of ethnic identity alone might not be enough to reduce the negative stereotype and

prejudice on North Korean defectors. It also requires the tasks of correcting one's perceived faith that justifies the discrimination toward the lower-class group and tackling the ideology that condones inequality. The discriminatory faith that undervalues the lower-class, stigmatized group in society and fixates the unequal situation is distinctive characteristic of the GFE. Given such a fact,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psychological conditions to either reduce or resolve the GFE can only be created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when one can psychologically separate oneself from discriminatory norms toward the lower class while psychologically focusing on the community's integration, progression, and the development by respecting collective values and strongly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and uniqueness of the self-concept. The collective value orientation witnessed in the GFE, and the reinforced positive effects of independent self-view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given that overcoming the prejudice against the minority group in society, including North Korea defectors, is indispensable for the integration and the well-being of society and that the notions of equality, justice, and integration are the zeitgeist defining the contemporary era. In other words, education and enlightenment should be promoted in a direction that encourages the community values on one hand and recognizes individual uniqueness and independence on the other hand to overcome the prejudice on various low-class, stigmatized groups in Korean society,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achieve social integration. These can be psychological conditions required to facilitate the psychological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enhance peace and reconciliation as one ethnic community.

**Keywords:** Psychology of Division, Reconciliation, Intractable Conflict, COVID-19, Nested Identity, Empathy, North Korean Defector





# I. 서론





한반도 문제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은 해묵은 남남갈등으로 시작하였다. 정부가 2018년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로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야당 대표의 발언을 기점으로 야당은 특검과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야당의 주장을 혹세무민, 북풍공작 등으로 강력히 대응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물정치’로 규정했다. ‘이적행위’ 논란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2021년 1~2월의 한국의 풍경은 평화공감대 확산 정책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는 정치엘리트의 의혹 제기만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일관성과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분단의 본질, 북한은 협력의 대상이자 남한의 실존적 위협이라는 분단의 야누스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적대적 분단이 지속되는 한 야누스의 어느 쪽 문을 여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은 요동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북한과 관련된 갈등, 소위 남남갈등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남남갈등은 적대적 국가관계를 평화적 국가관계로 전환해야 하는 목표를 가진 국가의 숙명이기도 하다. 평화 조성(peace building) 시기는 국민들은 평화의 희망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끼는 이중성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조성하려는 집단은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내 평화 조성을 지지하는 그룹과 평화로운 해결로의 타협을 거부하는 그룹을 분리하려는 분파주의를 피할 수 없다(Bar-Tal et al. 2015). 같은 맥락에서 평화 교육과 화해가 평화 협정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Bar-Tal and Rosen 2009).

한반도 문제의 야누스적 특성은 갈등의 복잡성을 더욱 가중시킨다.

구체적으로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북한과 위협의 대상인 북한의 특성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한반도의 이중성이 개인 간 갈등(inter-personal conflict)이자 개인 내 갈등(intra-personal conflict)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평화의 희망과 불안감의 공존은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와 같은 외부적 단서들이 야누스의 두 측면 중 어느 쪽을 자극하느냐에 따라 집단과 개인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평화공감대 형성 정책의 가장 큰 도전 요소 중 하나이다.

이중성의 시기에 따른 양극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남남갈등은 일종의 통과외레이자 고정비용이며, 해결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로 봐야할 것이다. 관리의 핵심은 이중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평화의 희망을 제기하며 안보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들 수 있다. 상대가 우리를 안보적으로 불안하게 한다면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상대가 평화적 방식으로 나온다면 호응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리의 방식은 이중성의 한 측면이 지배적일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상대에 대한 불안감이 지배적일 때,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상대적으로 평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상황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관계 개선이 지배적일 때에는 상대적으로 안보적 불안감에 대한 대처를 통해 진전의 장애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교착 국면에서는 어떤 정책적 지향성을 설정하더라도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평화 협상에 있어, 특히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조치 중 하나인 선제적 조치, 모험을 감수하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Tagar et al, 2011).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적 접근은 갈등의 본질을 외면함으

로써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 이후 본격화된 남남갈등은 죽고 죽이는 식의 이분법적 갈등, 대화와 타협을 포기한 채로 진행되는 갈등으로 악화되고 있다(정영철 2018; 채진원 2017). 한편으로는 남남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대방의 신념구조와 프레임을 바꾸겠다는 접근이 비현실적이고 상호 증오감과 적대감을 키웠다는 것이다(채진원 2017). 다른 한편으로는 김갑식(2007)의 지적대로 남남갈등이 북한에 대한 시각, 대북정책이라는 쟁점에 대한 갈등으로 표면화되지만, 갈등의 근원은 근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의 충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남남갈등의 본질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이념의 충돌이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적대와 배제의 싸움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남갈등의 파괴적 경로는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감정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감정적 양극화는 정치적 쟁점에 대한 찬반이 아닌 정치적 반대 집단에 대한 혐오가 강해지는 현상을 지칭한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심화된 감정적 양극화는 정치적 쟁점의 차이를 넘어, 심지어 쟁점에 있어 차이가 없더라도 상대 집단 자체에 대한 반감과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Mason 2018). 또한 감정적 양극화는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 온라인 데이트 상대 선택, 친구 및 동료 선택, 경제적 판단, 입사자 평가, 동료 평가, 거주지 선택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정치적 엘리트의 갈등 심화 및 동원, 갈등을 촉진하는 정치적 메시지 등 감정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핵심이 이념의 대결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념 대결의 중심은 정체성(identity)이다. 즉 ‘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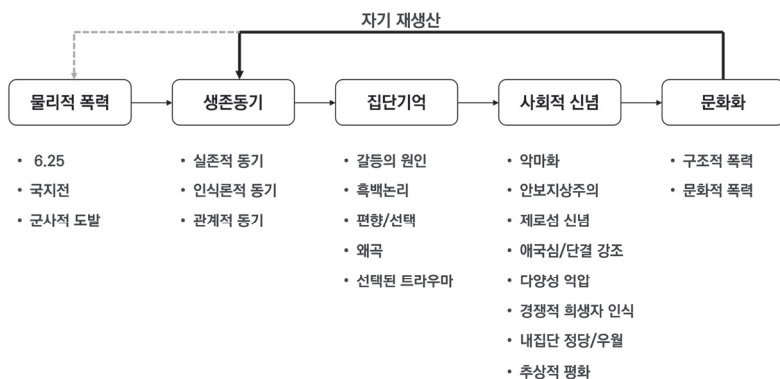
누구인가?', '미국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와 같은 정체성의 갈등이 감정적 양극화의 핵심인 것이다. 결국 감정적 양극화는 정체성의 양극화인 것이다. 감정적 양극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공화-민주의 당파적 정체성, 인종적 정체성, 지역적 정체성, 성적 정체성 등이 진보-보수의 이념적 정체성으로 수렴되면서 정체성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Iyengar et al. 2019). 남남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미국의 감정적 양극화의 증거로 열거하는 현상에 매우 친숙할 것이다. ‘빨갱이’, ‘태극기’, ‘꼴보수’, ‘대깨문’ 등 상대를 혐오하는 표현은 한국사회에서 큰 거부감 없이 사용되어 왔다. 어떤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감정적 양극화가 만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정적 양극화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진보와 이념의 갈등이 단순히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이념의 갈등, 정체성의 갈등이기 때문에 한국사회 전체의 분열과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공감대 확산정책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것, 또는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평화공감대 확산정책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책이 한국과 국민의 정체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갈등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것은 먼저 갈등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는 것이다. 갈등을 중심으로 이념과 정체성이 구성되었을 때 갈등의 악순환은 필연적이다(〈그림 1-1〉). 갈등에서 승리라는 목표를 위해 구성된 다양한 신념들은 외부의 정보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틀(frame)’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갈등을 경험하는 집단은 객관적이고 모호한 정보들조차 상대의 악마화·불법화,

안보 우선주의, 그리고 다양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처리방식이 누적되면서 이념은 ‘갈등의 문화’로 사회에 내재화된다(Bar-Tal et al, 2015). 본드(Bond 2004, 62)는 문화를 “삶의 요건을 제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한 그룹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신념(사실 인 것), 가치(중요한 것), 기대, 특히 짜인 행동 순서 및 행동의 의미(주어진 행동에 관여하여 내포되는 것)에 대한 공유된 체계, 특히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가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을 줄이고 문화 구성원 간의 의미 전달 및 행동 조정을 향상시키는 체계”로 정의하였다. 어떤 측면에서 갈등의 문화는 갈등 속에서 형성된 이념의 자동화된 체계로 볼 수 있다.

〈그림 1-1〉 이념의 갈등 재생산 메커니즘<sup>1)</sup>



갈등의 문화 속에서 상대에 대한 의심은 커지며, 상대의 언어와 행동을 오지각(誤知覺)하게 된다. 또한 협상 또는 화해의 과정에서 상대에 의해 기만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화는 상대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여 생존에 대한 동기를 강

1) 별도의 설명이 없는 그림은 저자들이 작성하였음.



화시키거나(<그림 1-1>에서 실선), 상대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여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한다(<그림 1-1>에서 점선). 생존을 위한 이념, 심리사회적 신념체계가 역설적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호그(Hogg 2004)는 갈등의 악순환 속에서 이념은 변화에 저항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호그(Hogg 2004)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갈등을 혐오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 기억과 사회적 신념체계에 의해 다른 상태보다 더 쉽게 예측된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은 착각이지만 갈등에 대해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이념은 불확실한 평화의 영역으로 움직이는 그 어떠한 위협을 감수하지 않은 채 분쟁을 지속시키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익숙하고 친숙한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고착화된 갈등 이론이 제안하는 이념과 갈등의 악순환은 백낙청의 분단체제론과 맞닿아 있다. 박순성(2012)은 분단체제론이 한반도에서만 관찰되는 특수한 체제인지 갈등을 경험하는 국가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적대관계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고착화된 갈등 이론은 적어도 제도적, 국가 단위의 체제가 아닌 국민들의 심리 속에서 작동하는 분단체제(division regime)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분단체제의 자기 재생산 능력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다. 백낙청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단체제”(백낙청 2012, 142), 의식/무의식 속에 내재화된 작동원리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쟁이 또 나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게 낫다는 생각”(백낙청, 2012, 142),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단괴물”(백낙청 2009, 141), 매사를 상대방 책임으로 돌리고 정당한 비판이나 성찰도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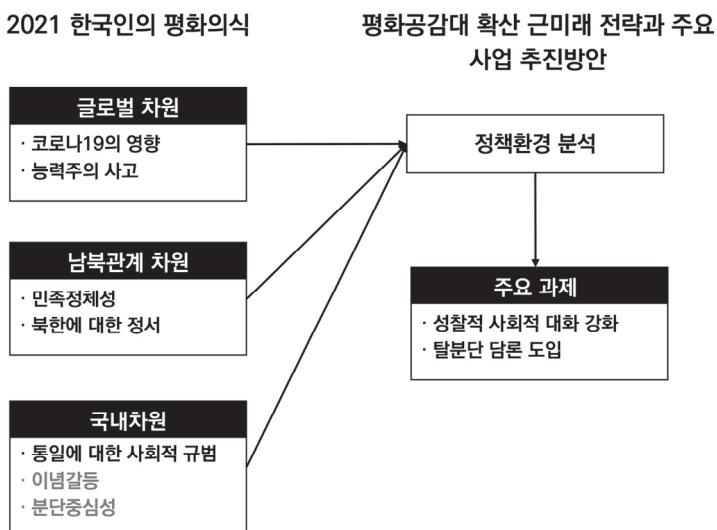
매도하기가 유달리 편해지도록 만들고, 때로는 분단현실에 대한 인식을 억누르면서 “북의 존재를 되도록 무시하면서 남한만의 발전을 꿈꾸는 것”(백낙청 2009, 271) 등의 분단체제적 사고의 뿌리는 <그림 I-1>에서 제시한 이념의 갈등 재생산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갈등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것은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갈등을 직면해야 한다. 분단체제의 극복이 ‘바깥의 괴물을 이겨내는 일’과 ‘내 마음속의 괴물을 퇴치하는 일’의 동시 수행을 요구하며, 후자의 경우 ‘일그러진 사고와 감정의 쇄신’을, ‘우리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온갖 형태로 뿌리 내린 분단체제의 극복’을 요구한다면 이념의 문제, 즉 집단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한 것임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본 과제의 1권,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의 핵심은 국민들에게 분단체제에 뿌리를 둔 우리사회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방식을 통해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본 과제의 2권,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의 목표는 전자, 갈등의 메커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차원, 남북관계 차원, 국내적 차원에서 갈등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갈등의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 측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본 과제의 1권,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의 정책환경 분석에 활용되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코로나19와 능력주의 신념의 영향력,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민족정체성의 다차원성과 북한에 대한 정서, 구체적으로 공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원에서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 압력, 분단이 자신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탈분단),

진보와 보수의 정서적 양극화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의 핵심과제인 성찰적 사회적 대화, 탈분단 담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분단이 자신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탈분단), 진보와 보수의 정서적 양극화의 영향력은 1권에 제시하였다.

〈그림 1-2〉 과제의 구성도



갈등의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는 2021년 3~4월 두 차례 진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할당되는 표본의 수가 통계적 분석에 유의미한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충청남도에 포함시켰다. 표본의 수는 1,600명이며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되었다. 조사는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진행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응답자들 중 30%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실제 조사 참가 여부와 면접 내용을 검증하였다. 원자료는 편집, 코딩, 입력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자료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전산자료는 통일연구원의 심의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서론과 결론은 통일연구원의 박주화가 집필하였다. II장 1절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대북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성균관대학교 서정길이 집필하였으며 2절 불평등의 이데올로기가 탈북민 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성균관대학교 최훈석이 집필하였다. III장 1절 사회정체성 역동이 대북인식과 제로섬 신념에 미치는 효과는 성균관대학교 이하연이 집필하였으며 2절 북한에 대한 공감의 대북인식과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의 Eran Halperin과 Nimrod Nir가 집필에 참여하였다. 연구책임자의 착오로 Nimrod Nir가 공동연구자에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 Nimrod Nir에게 사과드린다. IV장 통일태도 및 사회적 규범 지각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성균관대학교 권영미가 집필하였다.



## II. 글로벌 차원 요인의 메커니즘





# 1.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이 대북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2020년 1월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변이를 반복하며 현재까지도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 정세, 특히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4/4분기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무역을 중단함에 따라, 북한의 산업생산이 둔화되고 주민의 후생이 악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호·최유정(2021, 2)은 2021년 1/4분기 기준으로 북한이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지는 않으나, 상당수의 기업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와 같이 당국의 정책적 선택이 재난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북지원은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라는 보편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인도적인 목적에서 한반도 재난(감염병, 식량난)에 북한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남북협력은 기존의 남북관계 맥락에서 한 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교착 국면에 들어선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여지가 있다. 2021년 8월에 실시된 KBS 국민통일의 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6%가 ‘이전처럼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19.1%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다(KBS 남북교류협력단 2021.8.14.). 과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식이 있는 식량 지원에 비해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의 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량 지원과 같은 기존의 대북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남북이 공동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 화해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관련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점검하고, 이러한 인식의 근간을 이루는 심리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학술적, 실용적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합의를 지닌다.

최근 사회심리학 및 유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집단 간 갈등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일군의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집단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 중 하나가 나와 같은 집단에 속해 있지 않은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배척이라는 것이다. 통상 외집단 구성원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에 비해 새로운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하는 것이 감염 위협을 낮추고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상과 일관되게,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을 크게 지각할수록 아시아인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편견을 보였으며(Huo 2020), 다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협을 크게 지각할수록 사회집단 간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ucher et al, 2020).

반면,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외집단과의 화해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상황이 위협적일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 역시 증대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일관되게 한 연구에서는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경감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으며(Rigoli 2020),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민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감소함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편견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Dennison and Geddes 2020).

상기한 결과들은 코로나19 상황과 남북협력 간에 일차원적인 상관관계를 추론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이와 일관되게 박주화·강혜석 외(2020)는 코로나19 상황이 남북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공존하며, 어떤 영향이 발현되는지는 코로나19 상황인식이 어떠한 심리적 경로를 따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감과 북한에 대한 공포를 활성화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증폭될 수 있는 반면, 코로나19 상황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감과 북한 상황에 대한 공감을 활성화시킬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협력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코로나19 상황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를 따지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 어렵다. 그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남북협력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예측모형을 토대로 해당 심리 요인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전략을 개발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남북협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감염병 대응 행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감염병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및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요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 특수적인 정책지지에 대한 타당한 예측모형의 구축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대북 지원정책지지에 대한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남북 간 화해 및 협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특성변수 및 코로나19 관련 변수들을 예측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구성개념과 측정 문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나. 구성개념 및 측정 문항

### (1) 준거변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지원 항목을 1) 방역물품(예: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2) 의료진 지원, 3) 백신 지원, 4)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항목을 북한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정도를 6점 척도(1점="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6점="매우 지지한다")로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네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5$ ).

본 연구에서는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행동을 할 의도를 측정하여 준거변수로 사용하였다.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와 그 대상과 관련된 행동의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Ajzen and Fishbein 2005). 즉,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이와 관련된 행동을 할 의도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정책지지를 예측하는 심리변수들이 행동의도 역시 예측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예측모형의 타당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행동의도는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나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북한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나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북한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할 의향이 있다”, “나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북한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6점 척도(1점=“전혀 없다” ~ 6점=“매우 강하다”)로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세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5).

## (2) 예측변수

### (가) 개인특성변수

선행연구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성향을 측정하였다. 측정에는 네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각 사회적 이슈(예: 낙태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에서의 진보-보수 성향, 경제적 이슈(예: 세금법, 복지제도 등)에서의 진보-보수 성향, 정치적 진보-보수 성향 및 전반적인 진보-보수 성향을 물었다(Skitka et al. 2002). 질문지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총 7개의 범주(“매우 진보적”, “다소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

수적”, “다소 보수적”, “매우 보수적”)를 제시한 후 해당하는 칸에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분석에는 1~7점 사이에서 숫자가 클수록 진보적인 것으로 점수화하여, 네 개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0$ ).

사회적 지배성향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집단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개인의 태도로서,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 간에 차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보다 혜택을 누리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이러한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집단들이 모두 평등하며 서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 지배성향은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나 집단 간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을수록 인종 차별적인 정책에는 찬성하고, 소수집단에 대한 복지정책에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근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이라는 집단 간 갈등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배성향이 유용한 예측변수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배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호 외(Ho et al., 2015)의 척도에서 8개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예: “이상적인 사회란 여러 집단 간에 상대적 우위가 정해져 있는 사회이다.”,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성공을 위한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역)”,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점=“매우 동의한다”). 분석에는 8개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1$ ).

사회정체성이란 자신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자기 인식을 의미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을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집단(외집단)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긍정성을 유지하고 신장시키려는 경향을 지니며, 이러한 정체성 인식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화해와 협력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체성 동일시란 자신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인식하는 정도와 해당 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으로 정의되는데, 사회정체성 이론에 기반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정체성 동일시 수준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어 왔다. 특히 남북관계는 남한이라는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상위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맥락을 제공한다. 통일연구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는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화해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호그와 하인스(Hogg and Hains 1996)의 척도 문항 중 네 개를 선별하여 한민족 및 남한정체성 동일시를 측정하였다. 네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한민족의 구성원/남한 국민으로서 한민족/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귀하는 한민족/남한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십니까?”, “귀하는 당신이 한민족의 구성원/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귀하는 한민족/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십니까?”.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느껴지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사이에서 응답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는 국가정체성 Cronbach's  $\alpha = .95$ , 한민족정체성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분석에는 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 (나) 코로나19 관련 변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준거변수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

과 관련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책지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닐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 경제적 염려, 감염 취약성 지각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정서를 측정하였다. 우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신뢰를 네 문항(예: “나는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식을 신뢰한다”)으로 측정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염려를 네 문항(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으로 측정하였다. 개인의 감염 취약성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세 가지를 제시하고(예: “코로나19에 감염된다”), 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1점=“가능성이 전혀 없다” ~ 7점=“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안을 세 문항(예: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초조함을 느낀다”)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측정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정부 신뢰=.97, 경제적 염려=.82, 감염 취약성 지각=.80, 불안=.90).

## 다. 분석 1: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에 대한 예측모형

### (1) 기초 분석

본 절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을 응답자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기초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를 네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분포를 <표 II-1>에 제시하였다.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데는 64.2%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정책을 지지한다

고 응답한 반면, 백신 지원과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고(각각 50.5% 찬성, 51.4% 찬성), 의료진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찬성 41.4%).

〈표 II-1〉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 문항들의 반응 빈도 및 백분율

문항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다소 지지한다	상당히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1) 방역물품 지원	172	126	276	669	225	132
	10.8%	7.9%	17.3%	41.8%	14.1%	8.3%
(2) 의료진 지원	277	159	502	431	147	84
	17.3%	9.9%	31.4%	26.9%	9.2%	5.3%
(3) 백신 지원	272	137	383	521	165	122
	17.0%	8.6%	23.9%	32.6%	10.3%	7.6%
(4)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	235	127	417	576	153	92
	14.7%	7.9%	26.1%	36.0%	9.6%	5.8%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아 네 문항이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네 문항을 평균하여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 지수를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 = .95$ ). 개별 문항 및 정책지지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I-2〉에 제시하였다.

〈표 II-2〉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코로나19 방역물품(예: 마스크, 손소독제)	3.65	1.34
(2) 코로나19 대응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지원	3.17	1.37
(3) 코로나19 백신 지원	3.34	1.44
(4)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	3.35	1.34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 (전체 평균)	3.38	1.27

주: 응답 범위: 1점(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6점(매우 지지한다).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 지수의 평균값은 3.38로, 척도의 중간점인 3.5보다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응답분포를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9%가 3점(별로 지지하지 않는다)과 4점(다소 지지한다) 사이에 분포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태도가 확고하게 조형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북지원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집단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하위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3>에 제시하였다. 척도의 중간점인 3.5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정책 반대 하위집단은 44.1%( $n=706$ ), 찬성 하위집단은 46.1%( $n=738$ )이었다. 중립 하위집단( $n=156$ )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에 비해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았고,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 수준은 낮았다. 즉, 대북지원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사회 내 위계에 따른 불평등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며, 한민족의 일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러한 양상은 후술할 정책지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서, 진보-보수 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및 남한 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특성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인구통계변수와 정책지지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은 한 변수의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수준도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방법이다. 상관분석의 결과로 상관계수가 산출되는데, 이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니며, 계수의 부호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숫자는 관계의 강도를 나타낸다.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지니면 한 변수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의 수준도 함께 증가함을 의미하며, 계수가 음의 값일 경우는 한 변수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수는 반대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II-3〉 코로나19 관련 대북정책지지 하위집단별 개인특성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반대 하위집단		찬성 하위집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치성향	3.83	1.00	4.55	0.94
사회적 지배성향	2.83	0.95	2.50	0.94
한민족정체성 동일시	4.22	1.38	4.98	1.09
남한정체성 동일시	4.86	1.28	5.28	1.10

그리고 계수의 절댓값이 커질수록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II-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월평균 가구 소득은 정책지지와 관련이 없었으며, 연령과 정책지지 간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를 연령대별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하위집단 간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 간에는 정책지지 수준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40대, 50대와 60대 상호 간에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20~30대와 40~60대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20~30대보다 40~60대가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정책지지 평균은 <표 II-5>에 제시하였다.

<표 II-4> 인구통계변수 및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의 기술통계치 및 구성개념 간 상관

구성개념	1	2	3	4
1. 성별	1	.02	-.03	-.01
2. 연령		1	-.00	.18**
3. 월 평균 가구 소득			1	-.03
4.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				1
평균(표준편차)	-	44.52(13.30)	8.30(3.88)	3.38(1.27)

주: \*  $p < .05$ , \*\*  $p < .01$ .

<표 II-5>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20대	292	2.94	1.26
30대	291	3.07	1.21
40대	354	3.59	1.22
50대	370	3.67	1.26
60대	293	3.48	1.27

20~30대와 40~60대 간 차이의 원인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 두 하위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하위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I-6>에 제시하였다. 평균 비교를 위한  $t$  검증 결과, 20~30대는 40~60대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배성향, 낮은 한민족 동일시 및 낮은 남한 동일시를 보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찬성/반대 하위집단 간 비교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서 사회적 지배성향과 한민족 및 남한 동일시가 정책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단, 정치성향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60대의 보수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정책지지와 관련된 응답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구분에서 한 발 나아가 사회정체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단, 상기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II-6〉 연령 하위집단별 개인특성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20~30대		40~60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치성향	4.16	0.94	4.22	1.06
사회적 지배성향	2.88	0.97	2.55	0.92
한민족정체성 동일시	4.13	1.27	4.87	1.19
남한정체성 동일시	4.65	1.15	5.31	1.14

다음으로, 최근 한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20대 남성의 보수화 현상이 코로나19 관련 대북정책지지와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하위집단을 세분화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부터 60대까지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20대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20대 남성이 20대 여성보다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책지지의 평균값은 〈표 II-7〉에 제시하였다.

〈표 II-7〉 연령과 성별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연령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대	2.70	1.35	3.21	1.08
30대	3.09	1.21	3.05	1.21
40대	3.70	1.27	3.47	1.15
50대	3.77	1.32	3.58	1.19
60대	3.53	1.34	3.44	1.20

다음으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간 차이의 원인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 두 하위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하위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I-8>에 제시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한  $t$  검증 결과, 20대 남성은 20대 여성보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높은 사회적 지배성향 및 낮은 남한 동일시를 보였다. 즉, 20대 남성은 20대 여성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으며, 사회적 위계와 차등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남한 국민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약했다. 흥미롭게도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한민족 동일시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상기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요한다.

<표 II-8>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개인특성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성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정치성향	3.92	1.00	4.44	0.86
사회적 지배성향	3.04	1.04	2.76	0.91
한민족 동일시	4.02	1.37	4.28	1.20
남한 동일시	4.49	1.25	4.84	1.04

## (2) 심층 분석

본 절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에 대한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둘 이상의 예측변수로 하나의 준거변수를 설명하는 최적의 공식을 찾는 중다회귀분석의 한 유형이다. 통상 중다회귀분석에서는 둘 이상의 예측변수 각각이 준거변수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가 회귀계수로 산출된다. 회귀계수는 예측변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준거변수가 얼마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측을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를 통계적 유의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이에 더하여 예측변수를 각 변수의 속성에 따라 둘 이상의 변수군으로 구분하고, 각 변수군이 추가됨에 따라 준거변수 변량의 얼마만큼이 추가로 설명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 다시 말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면 준거변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특정 변수군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를 예측하기 위해 세 가지 유형의 변수군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였다. 첫째는 인구통계 변수로서 기초분석에서 준거변수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연령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였다. 둘째는 개인특성변수로서 기초분석을 통해 그 중요성이 확인된 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및 남한 동일시를 예측변수로 투입하였다. 셋째는 코로나19 관련 변수로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을 예측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검증을 통해,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책지지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이러한 예측력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 지각을 통계적으로 고려한 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II-9〉의 1단계 예측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연령은 정책지지의 전체 변량의 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예측모형에서는 추가로 투입된 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및 남한 동일시의 회귀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한민족 동일시가 높을수록, 남한 동일시가 낮을수록 대북 지원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2단계에서 추가로 투입된 개인특성변수군은 전체 변량의 22%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심리학 분야에서 9%의 설명변량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본 모형에서 투입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정책지지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 가능하다. 특히,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가 반대 방향으로 정책지지를 예측하는 점은 두 변수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임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어떻게 하면 남한 동일시로 인한 역기능은 상쇄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지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3단계 예측모형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추가로 투입된 코로나19 변수들은 전체 변량의 12%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을 신뢰할수록 대북지원정책 역시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대한 염려, 개인의 감염 취약성 지각 및 코로나19로 인해 유발된 불안 수준은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 정책에 대한 순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보인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대한 염려나, 개인의 감염에 대한 염려, 개인의 불안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적, 개인적 상황에 대한 염려나 불안보다는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정부 정책

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믿을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II-9〉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에 대한 회귀분석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지지		
			$\beta$	$t$	adjusted $R^2$
1단계	인구통계변수	연령	0.18	7.37***	.03***
2단계	인구통계변수	연령	0.11	4.79***	.25***
	개인특성변수	정치성향	0.35	15.54***	
		사회적 지배성향	-0.07	-2.87**	
		한민족 동일시	0.31	10.49***	
		남한 동일시	-0.10	-3.34***	
2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22***					
3단계	인구통계변수	연령	0.11	5.05***	.37***
	개인특성변수	정치성향	0.18	7.78***	
		사회적 지배성향	-0.02	-1.01	
		한민족 동일시	0.23	8.39***	
		남한 동일시	-0.11	-4.02***	
	코로나19 변수	코로나19 관련 정부 신뢰	0.40	16.70***	
		국가 경제에 대한 염려	-0.03	-1.15	
감염 취약성 지각		0.01	0.51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0.01	-0.60	
3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1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N=1,600$ .

또한 3단계에서 코로나19 관련 변수들을 투입한 후에도 대부분의 개인특성변수의 회귀계수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응답자들은 진보적인 성향일수록, 한민족 동일시가 높을수록, 남한 동일시가 낮을수록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사회적 지배성향의 회귀계수는 코로나19 관련



변수들을 투입한 후에는 더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지지에 있어서는 사회적 지배성향보다 정치성향 및 정체성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면, 정치성향, 한민족 및 남한 정체성 동일시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책지지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통계적으로 고려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즉, 상황 특수적인 정책에 대한 지지에는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시에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일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정부가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 라. 분석 2: 북한 주민에 대한 도움행동의도에 대한 예측모형

### (1) 기초분석

본 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움행동의도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조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세 문항은 각각 “나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북한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 “나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북한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부할 의향이 있다”, “나는 코로나19에 취약한 북한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로서,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6점 척도(1점=“전혀 없다” ~ 6점=“매우 강하다”)에서 응답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분포를 <표 II-10>에 제시하였다.

<표 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주민지원 단체에 자원봉사를 제공할 의도에서는 71.4%, 북한 주민을 위한 기부 의도에서는 65.6%, 북한주민지원 단체에 가입할 의도에서는 76.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에서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난 데 반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도움행동에 수반되는 물질적, 심리적 비용을 고려할 때 납득 가능한 양상이다.

<표 II-10>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 문항들의 반응 빈도 및 백분율

문항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별로 없다	다소 강하다	상당히 강하다	매우 강하다
(1) 자원봉사 의향	321	196	624	328	84	47
	20.1%	12.3%	39.0%	20.5%	5.3%	2.9%
(2) 기부 의향	314	183	552	419	86	46
	19.6%	11.4%	34.5%	26.2%	5.4%	2.9%
(3) 단체 가입 의향	374	206	636	278	66	40
	23.4%	12.9%	39.8%	17.4%	4.1%	2.5%

세 문항에 대해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높아 세 문항이 같은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세 문항을 평균하여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 지수를 산출하였다(Cronbach's  $\alpha = .95$ ). 개별 문항 및 대북도움행동의도 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II-11>에 제시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의 평균값은 2.85로, 척도의 중간점인 3.5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답분포를 확인한 결과, 정책 지지와 유사하게 전체 응답자의 53.9%가 3점(별로 지지하지 않는다)과 4점(다소 지지한다) 사이에 분포하였다. 이를 통해 응답자

들이 평균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에 다소 부정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의도가 확고하게 조형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II-11〉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자원봉사 의향	2.87	1.26
(2) 기부 의향	2.95	1.28
(3) 단체 가입 의향	2.74	1.25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 (전체 평균)	2.85	1.21

주: 응답 범위: 1점(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6점(매우 지지한다).

대북도움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집단 간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척도의 중간점인 3.5점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부정 하위집단은 72.3%( $n=1,157$ ), 긍정 하위집단은 27.7%( $n=443$ )였다. 중립 하위집단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도움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았고,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 수준은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앞서 살펴본 정책지지에 대한 찬성-반대 하위집단 간 비교와 일관되며, 정책지지와 도움행동의도가 같은 심리적 기제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인구통계적 특성과 대북도움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의 결과는 〈표 II-1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행동의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행동의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북도움행동의도가 강한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의 행동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성별, 연령, 소득수준 및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의 기술 통계치 및 구성개념 간 상관

구성개념	1	2	3	4
1. 성별	1	.02	-.03	-.05*
2. 연령		1	-.00	.16**
3. 월평균 가구소득			1	-.03
4.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				1
평균(표준편차)	-	44.52(13.30)	8.30(3.88)	3.38(1.27)

주: \*  $p < .05$ , \*\*  $p < .01$ .

연령에 따른 차이를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를 연령대별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하위집단 간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지지에서의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20~30대와 40~60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연령대별 정책지지 평균은 〈표 II-13〉에 제시하였다.

〈표 II-13〉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의 기술통계치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20대	292	2.51	1.24
30대	291	2.57	1.20
40대	354	3.01	1.15
50대	370	3.13	1.17
60대	293	2.93	1.17

정책지지에서 확인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차이가 행동의도에서도 관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지지와는 달리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행동의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으며,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간에도 행동의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20대 남성이 20대 여성보다 대북지원 정책에는 강하게 반대하나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의도가 낮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움행동의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 모형을 검증하기로 한다.

## (2) 심층 분석

본 절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지를 예측하는 모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개인의 도움행동의도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II-14>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책지지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에 대한 도움행동의도 역시 개인특성변수와 코로나19 관련 변수가 모두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정책지지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달리 2단계 예측모형에서 사회적 지배성향 및 남한 동일시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행동에 있어서는 정치성향과 한민족 동일시가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 예측모형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신뢰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정책지지와 일관되나, 정책지지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감염 취약성 지각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스스로 감염 가능성과 감염으로 인한 위협을 높게 지각할수록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도가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크게

지각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표 II-14〉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코로나19 관련 대북도움행동의도			
			$\beta$	$t$	adjusted $R^2$	
1단계	인구통계변수	연령	-0.19	-3.22**	.03**	
2단계	개인특성변수	인구통계변수	연령	-0.14	-2.72**	.20***
		정치성향	0.20	3.67***		
		사회적 지배성향	-0.02	-0.35		
		한민족 동일시	0.37	5.58***		
		남한 동일시	-0.07	-1.05		
2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18***						
3단계	개인특성변수	인구통계변수	연령	-0.16	-3.04**	.26***
		정치성향	0.11	1.84		
		사회적 지배성향	-0.02	-0.35		
		한민족 동일시	0.29	4.32***		
		남한 동일시	-0.06	-0.96		
	코로나19 변수	코로나19 관련 정부 신뢰	0.26	4.25***		
		국가 경제에 대한 염려	-0.03	-0.55		
		감염 취약성 지각	0.15	2.09*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0.06	-0.97				
3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07***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N=1,600$ .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도움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데는 정책지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일반적인 심리적 특성과 상황 특수적 인식이 모두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일부 변수들의 예측효과가 정책지지와 도움행동의도에서 비일관되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한민족 동일시와 정부 신뢰가 두 분석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마. 논의

### (1) 결과 요약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재난 상황에서의 대북지원정책지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응답자들의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현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정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태도가 강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과 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및 남한 동일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대북지원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보였으며, 사회 내에 차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한민족의 구성원 또는 남한 국민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경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술할 예측모형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와도 일관된 것으로서 해당 심리변수들이 대북지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통계변수와 대북지원정책지지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일련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정책지지 간에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대북지원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성별 및 소득수준은 정책지지와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하위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20대와 30대 간에는 정책지지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고, 40대, 50대, 60대 상호 간에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20~30대가 40~60대보다 정책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 하위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20~30대는 40~60대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배성향, 낮은 한민족 동일시 및 낮은 남한 동일시를 보였다. 이는 상기한 정책 찬성-반대 하위집단 비교 결과와 일관된다. 흥미롭게도 20~30대와 40~60대는 정치성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60대의 보수적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정치성향만으로는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 지배성향이나 한민족 및 남한 동일시와 같은 심리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에 더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20대 남성의 보수화 현상이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에서도 관찰되었다. 20대 남성은 20대 여성에 비해 대북지원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었고,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배성향 및 낮은 남한 동일시를 보였다. 반면, 흥미롭게도 한민족 동일시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강한 반대가 민족의식의 부재 때문이라기보다 보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20대 남성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대북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도 해당 하위집단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책지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이에 대한 예측모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및 남한 동일시의 개인특성변수군이 정책지지 전체 변량의 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정책지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치성향이 진보



적일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한민족 동일시가 높을수록, 남한 동일시가 낮을수록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변수들 중에서는 한민족 동일시의 예측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동일시가 다른 방향으로 정책 지지를 예측했다는 점이다. 향후 두 변수의 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변수군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경제에 대한 염려, 감염 취약성 지각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은 정책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국민들과 투명하고 진정성있는 방식으로 소통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인식을 조형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장에서는 상기한 분석을 북한 주민에 대한 도움행동의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도움행동의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대북지원정책지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관되나, 몇 가지 차이점 역시 관찰되었다.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에 비해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행동의도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편이었으나, 정책지지와 마찬가지로 약 50%의 다수가 중립적인 의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도 정책지지와 일관되게 20~30대와 40~60대 간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 비해 대북지원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의도가 낮은 것은 아니었다.

도움행동의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역시 정책지지에 대한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관되나, 감염 취약성 지각이 높을수록 북한 주민에 대한 도움행동의도도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각할수록 북한 주민을 돕겠다는 의도도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남북 화해에 대한 코로나19의 건설적 경로(박주화·강혜석 외 2020)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 (2) 정책적 함의

상기 결과들을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강하게 찬성하지도 강하게 반대하지도 않는 중도층에 대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52.9%에 달하는 다수의 응답자들은 정책에 강하게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한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가 강한 사람들에 비해 설득 메시지에 쉽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에 우호적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하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특화된 설득 메시지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의 비교에서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및 남한 동일시가 중요한 차이점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에 관한 담론이 주목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대북화해협력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정책 홍보에 더하여 평등주의,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협력에 대한 인식에서의 세대 분절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형성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의 분석 결과 20~30대는

40~60대에 비해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고, 북한 주민을 돕겠다는 의도도 낮았으며, 자신을 한민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남성은 20대 여성보다도 낮은 정책지지 수준을 보였다. 남북을 한민족공동체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강한 20~30대에게 민족통일에 기반한 기존 남북협력론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동시에 요구된다. 한편으로는 20~30대의 공동체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설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추상적 통일담론에서 벗어나 남북 화해협력의 가져올 수 있는 득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민족의식 고취를 비롯한 일반적 통일 교육과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 특수적 정책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장의 예측모형에서는 한민족 동일시와 코로나19 관련 정부 신뢰가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우선, 한민족 동일시의 예측효과는 상위범주의 정체성 인식이 집단 간 편견 및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심리학 분야의 연구를 고려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경우 상위범주의 정체성 인식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민족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공동의 상위범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세대 분절과 연결 지어 생각해 보면, 특히 젊은 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 문화 활동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표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

성과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깊이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연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심리적 기전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소극적 지지층과 적극적 지지층을 구분하는 것이 정책 홍보 및 담론 형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찬성/반대와 북한주민에 대한 도움행동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해 보면, 대북지원정책에 찬성하는 51.1%의 응답자 가운데 23.4%는 북한 주민을 직접적으로 돕는 데에는 회의적이었으며, 27.7%는 북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대북지원정책에 찬성하면서 직접적인 도움행동의도도 높은 27.7%는 대북지원활동에 실제로 참가함으로써 사회적 담론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적극적 지지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들이 어떤 심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지닌 적극성을 정책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지지층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적극적 지지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에 대한 찬/반 구분이라는 일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실질적인 담론 형성 과정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불평등의 이데올로기가 탈북민 편견에 미치는 영향

###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편견의 본질에 관한 올포트(Allport 1954)의 시원적 분석 이래 심리학 및 유관 학문 분야에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편견의 선행변수와 결과에 관하여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Brown 2011; Dovidio and Gaertner 2010; Paluck et al. 2021). 편견에 관한 대다수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은 편견을 집단-특유적(group-specific) 현상으로 가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은 발생 배경과 전개 양상, 그리고 결과가 각기 다르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소수인종에 대한 편견을 각각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취급하고, 각 집단과 고유하게 연합되어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과 집단 간 갈등의 역사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과거 접근법과 달리, 사회심리학 분야의 최근 연구에서는 편견의 심리적 근원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다수집단의 편견을 GFE(Group-Focused Enmity, 집단-초점 약감정: Heitmeyer 2002; Zick et al. 2008)라는 공통 성분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GFE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집단들은 차별받아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왜곡된 불평등 신념을 말하며, 극빈자, 여성, 난민,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또는 저지위 낙인집단(stigmatized group)에 대한 편견의 핵심 성분이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들을 포함하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이 GFE라는 구조적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시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한국에서 GFE 신드롬(syndrome)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한 최초의 시도이다. 한국은 전쟁의 폐해를 극복하고 반세기라는 짧은 시간에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경제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위계화가 전개되고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극단적 능력주의, 성차별, 난민에 대한 편견 차별, 노인에 대한 편견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은 사회의 다양한 저지위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관통하는 GFE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목적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GFE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관계를 분석한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 중 하나이며, 집단 간 관계에서 외집단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관련성을 지닌다. 편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배경향성,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개인차 변수들을 주요 예측변수로 다루었으나, 문화적 지향성으로서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또한 한국인의 사회정체성이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본 연구는 일부 보고되었으나(박주화·최훈석 외 2020), 사회정체성과 문화적 지향성으로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를 개념적으로 혼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괄하여 다양한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의 근원에 해당하는 GFE와 개인주의-집단주의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편견에 관한 학술연구는 물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조건을 상세화한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 집단-초점 악감정(Group-Focused Enmity: GFE)

GFE의 근간을 이루는 왜곡된 불평등 신념은 편견의 표적이 되는 대상자의 개인 특성이 아니라 소수자 집단이나 낙인집단 등 통상 외 집단(outgroup)으로 인식되는 다양한 집단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표출된다. 유럽에서 보고된 선행연구에 따른 GFE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GFE는 불평등에 관한 일반화된 이데올로기로, 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신드롬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둘째, GFE 신드롬은 전형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세력이 약한 낙인집단에 대한 악감정이나 적대감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선진 민주사회의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GFE 신드롬은 사회에서 소수집단이나 저지위 낙인집단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평가절하하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 간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힘으로 작용한다(Küpper and Zick 2014).

GFE의 핵심 특징들은 유럽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지크 외(Zick et al. 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 외국인,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소수인종, 성소수자, 신입성원, 노숙자 등 8개 집단에 대한 독일인들의 편견을 GFE라는 공통요인이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GFE 구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이며, GFE 점수가 높을수록 8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 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쿠퍼와 지크(Küpper and Zick 2014)의 연구에서는 유럽의 8개 국가에서 소수인종,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 6개 표적 집단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견으로 구성된 GFE 구조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민자들에 의해 초래된 집단 간 위협, 다양성의 가치에 반하는 신념, 그리고 사회적 지배경향성은 GFE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이민자와의 접촉빈도, 보편주의가치, 그리고 신뢰는 GFE를 부적으로 예측함을 보고했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외집단으로 인식되는 전형적인 낙인집단 가운데 하나임을 고려하면, GFE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편견의 형성과 고착화에도 중요한 관련성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심리적 본질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공통분모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개인주의-집단주의와 GFE

국가 수준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의 본질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사회에 공유된 신념을 말한다(Triandis 1995; Triandis and Gelfand 2012).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국가 수준의 문화적 특징을 요약하는 지표로서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팀,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도 규정할 수 있다. 즉, 한국은 국가 수준에서는 집단주의 사회로 분류되지만, 한국사회의 개인들은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존재한다. 특히 최근 문화심리학에서는 국가 수준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사회행동을 분석하려는 접근법의 한계를 인식하여, 개인 수준의 점수를 사용하여 집단 내 및 집단 간 상황에서 사람들의 사회행동을



예측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훈석과 동료연구자들(Choi et al. 2018; Choi et al. 2019; Choi and Euh 2019; Choi and Yoon 2018; Lee and Choi 2020)은 개인주의-집단주의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Brewer and Chen 2007; Oyserman et al. 2002)을 기반으로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을 두 가지 핵심 성분으로 구분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 중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관한 가치지향성(value orientation)과 개인이 자신을 정의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말하는 자기-개념(self-concept)이라는 두 가지 핵심 성분으로 구성된다.

소수자 집단은 차별받을만한 이유가 있다는 왜곡된 신념이 GFE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시하고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숙고와 몰입을 강조하는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주의 가치는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 편파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충분조건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주의-집단주의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성분에 해당하는 개인의 자기-개념(self-concept)은 사람들이 자신을 타인과 분리된 고유한 개체로 인식하는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와 중요타인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역할책임을 중심으로 자기를 정의하고 이해하는 상호의존적 자기로 구분된다. 사회심리 및 문화심리학 분야에서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 독립적 자기는 상호의존적 자기에 비해서 다수의 압력이나 영향을 극복하고 개인의 가치와 신념, 태도에 입각하여 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촉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Cross et al, 2011; Kitayama et al, 2007).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우세하며 그들에 대한 지원이 내국인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볼 때(박주화 외 201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수가 지니고 있는 편견이나 규준적 입장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태도에 따라서 행위를 실행하는 독립적 자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안녕과 성숙에 대한 가치몰입과 자신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독립적 자기관이 조합되었을 때 탈북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덜 지니고 그들을 지원하려는 행동의도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3) 연구 문제

만약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대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이 GFE의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이는 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부정적 태도가 사회 내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공통의 심리적 원천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집단 간 편견에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관의 긍정적 상승효과를 규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 조건을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와 GFE의 관계를 검증한다.

## 나. 구성개념 및 측정 문항

### (1) 예측변수

개인주의-집단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을 개인

주의-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2차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치지향성을 측정하는 8개 문항과 자기관을 측정하는 8개 문항의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가치지향성 8개 문항은 목표우선성(개인목표 대 집단목표)을 측정하는 네 문항(예: “개인의 성공 없이 집단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 대 “집단의 성공 없이 개인의 성공은 의미가 없다”)과 경쟁 대 협동지향을 측정하는 네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예: “경쟁 없이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대 “협력 없이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자기관 8개 문항은 자기 고유성 대 타인과의 유사성을 묻는 네 문항(예: “나는 주위사람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이 중요하다” 대 “나에게는 주위사람들과 공유하는 공통된 특징이 중요하다”)과 자기 정의의 일관성 대 가변성을 측정하는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예: “나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사람이다” 대 “내가 누구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상대적 우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양극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응답자들은 두 가지 상충하는 진술문 가운데 본인이 동의하는 방향을 선택하고 동의 정도를 1점=“다소 동의” ~ 3점=“매우 동의” 사이에 응답하였다. 자기관 역시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의 상대적 우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양극척도를 제시하였으며 응답방식은 가치지향성 문항과 동일했다. 양극척도 상의 응답을 가치지향성 문항은 점수가 클수록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의미하도록, 자기관 문항은 점수가 클수록 독립적 자기관을 의미하도록 6점 척도로 변환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시에는 집단주의 가치지향성(Cronbach's  $\alpha = .81$ )과 독립적 자기관(Cronbach's  $\alpha = .81$ )의 각 8개 문항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 (2) 준거변수

### (가) GFE

GFE척도를 사용하여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공통성분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GFE척도에는 북한이탈주민, 여성,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노숙자, 신입성원, 난민, 성소수자, 노인, 및 장애인 등 10개의 저지위 낙인집단(Chun 2010)을 포함시켜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사하였다(예: “여성들은 본인의 일을 갖는 것보다 가정에서 내조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한국 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구걸하는 노숙자들을 보행자구역에서 쫓아내야 한다”, “어디서든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많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유입은 실업, 이탈 등의 사회문제를 증가시킨다”, “한국사회에 들어 난민들이 한국인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장소에서 동성 간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불쾌하다”, “노인들은 사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장애인을 마주치면 불쾌하다”, Cronbach's  $\alpha = .79$ ).

10개 표적 집단에 대한 편견이 GFE라는 공통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GFE에 관한 선행연구(Zick et al. 2008)의 분석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10개 표적 집단 각각에 대한 응답자들의 편견을 하위 1차 수준 개념으로, 그리고 GFE를 상위 2차 수준 개념으로 상정하는 모형의 부합도(model fit)를 검증하였다.

### (나) 낙인집단 지원의도 및 차별금지법 지지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왜곡된 신념구조를 반영하는 개념으로써

GFE의 개념적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낙인집단에 대한 지원 의도를 묻는 네 문항(예: “나는 낙인집단 성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나는 곤경에 처한 낙인집단 성원들을 도울 의향이 있다”, Cronbach’s  $\alpha=.92$ )과 차별금지법(“성별, 장애, 나이, 언어, 인종, 국적 등 신체 조건이나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종교, 성적 지향성, 학력, 직업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금지”)에 대한 지지 정도를 묻는 단일문항을 준거변수로 포함시켰다(1점=“매우 반대” ~ 7점=“매우 찬성”)

## 다. 분석

### (1)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조사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은 <표 II-15>, <표 II-16>과 같다. 전체 자료( $N=1,600$ )의 평균으로 보았을 때 예측 변수에 해당하는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관의 평균(표준편차)은 각각 3.96(0.75)과 3.42(0.75)로 척도의 중간점에 가까웠다. 10개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GFE, 평균 3.57, 표준편차 0.79), 그리고 낙인집단 지원의도(평균 4.11, 표준편차 1.07)와 차별금지법지지(평균 4.94, 표준편차 1.47)는 모두 척도 중간점 가까이 위치하였다.

변수 간 상관은 모두 예상과 일관된 방향으로 관찰되었다. 가치지향성과 자기관은 개인주의-집단주의 2차원 모형의 가정과 일관되게 약한 역상관( $r=-.28$ )을 보였다. 가치지향성의 2개 하위 요인(목표우선성, 경쟁-협동지향)과 자기관의 2개 하위 요인(자기 고유성, 자기-정의의 일관성)을 하위 요인으로, 그리고 가치지향성과 자기관을 상위 요인으로 규정하는 위계모형을 검증하여 자료의 모형부합도를

확인하였다(Hu and Bentler 1995),  $\chi^2=546.42$ ,  $p<.001$ ,  $\chi^2/df=5.52$ , CFI=.955, RMSEA(90% CI)=.053(.057~.068), SRMR=.036.

집단주의 가치성향과 독립적 자기관의 상호작용 항은 예상과 일관되게 GFE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r=-.11$ ,  $p<.01$ , 낙인집단 지원의도( $r=.12$ ,  $p<.01$ ) 및 차별금지법 지지( $r=.10$ ,  $p<.01$ )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GFE 총점이 높을수록 낙인집단 지원의도가 낮고( $r=-.29$ ,  $p<.01$ )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도 낮았다( $r=-.34$ ,  $p<.01$ ). 6개 요인을 포괄하는 GFE 구성개념이 사회적 낙인집단에 대한 지지 태도와 행동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함으로써 GFE가 한국에서 집단 간 편견에 관한 연구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5〉 구성개념 평균 및 표준편차

구성개념	평균	표준편차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3.96	0.75
독립적 자기관	3.42	0.75
GFE	3.57	0.79
낙인집단 지원의도	4.11	1.07
차별금지법 지지	4.94	1.47

〈표 II-16〉 구성개념 간 상관

구성개념	1	2	3	4	5	6
1. 가치지향성	1	-.28**	.52**	-.09**	.12**	.17**
2. 자기관		1	.64**	-.03	.03*	-.03
3. 가치지향성×자기관			1	-.11**	.12**	.10**
4. GFE				1	-.29**	-.34**
5. 낙인집단 지원의도					1	.23**
6. 차별금지법 지지						1

주: \*  $p<.05$ , \*\*  $p<.01$ . 가치지향성과 자기관은 값이 클수록 각각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관을 의미.

## (2)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GFE 구조

한국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을 포괄하는 GFE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무선적으로 구성된 반분표집을 이용하여 GFE 20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n=800$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n=800$ ).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 II-17>의 요인부하량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노숙자, 신입성원에 대한 응답은 각각 고유요인을 구성하였다. 반면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과 북한이탈주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응답은 각각 하나의 동일 요인을 구성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고유요인을 구성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응답자료를 제외하고 총 6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여 6요인 모형의 부합도를 확인하였다. 부합도 분석결과 RMSEA(90% CI)=.099 (.094~.104)와 SRMR=.080는 수용 가능한 범위였으나,  $\chi^2=1139.03$ ,  $p<.001$ ,  $\chi^2/df=8.83$ , CFI=.845는 수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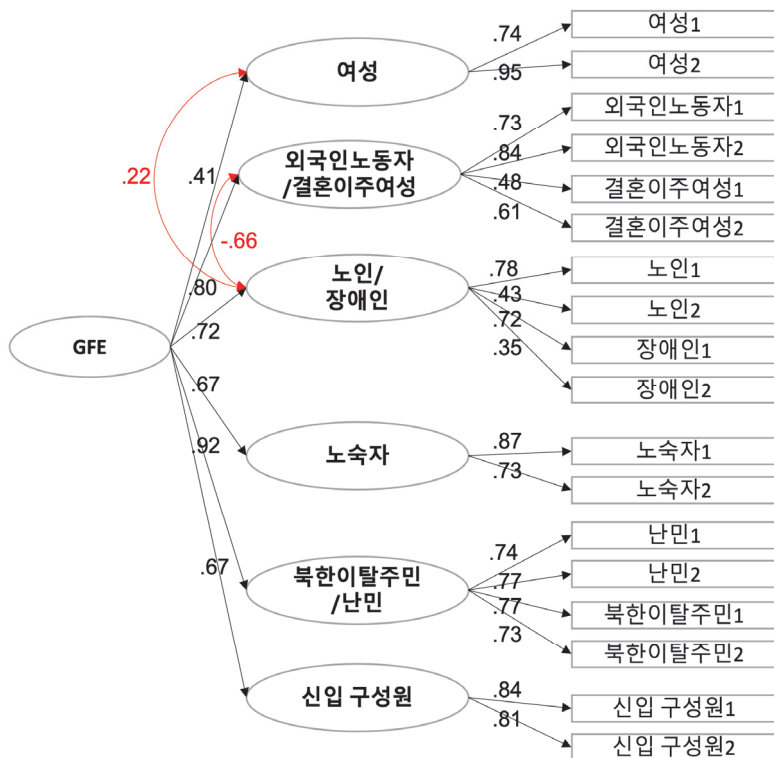
지크 외(Zick et al. 2008)의 연구에서 보고된 방식에 따라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점검한 결과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과 노인/장애인 간에 추가적인 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확인되었다(수정지수=74.72). 따라서 이 경로를 모형에 추가하여 6요인모형의 부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의 부합도는 수용 가능 범위로 개선되었다.  $\chi^2=732.39$ ,  $p<.001$ ,  $\chi^2/df=5.91$ , CFI=.907, RMSEA(90% CI)=.078(.073~.084)와 SRMR=.070(<그림 II-1>). 응답자 별 GFE 점수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제외한 총 18개 문항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alpha=.87$ ).

이 결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편견은 그 자

체로 고유한 요인을 구성하기보다는 난민과 동일한 요인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인과 민족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유입되어 있는 난민들과 다르게 지각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난민에 대한 편견과 동일요인을 이루어 상위수준에서 한국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을 포괄하는 GFE 구조에 포괄됨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다른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평등 신념이라는 심리적 근원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1> 6요인 GFE 구조(확인적 요인분석)





〈표 II-17〉 기술통계(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r$ ), EFA 요인부하량

	평균 (표준 편차)	$r$	EFA 요인부하량					
			여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노숙자	북한이탈 주민/난민	신입 구성원	노인/ 장애인
1.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역할(예: 어머니, 아내)에 충실해야 한다.	3.82 (1.62)	0.39	<b>0.95</b>	0.00	0.00	-0.01	-0.04	0.00
2. 여성들은 본인의 일을 갖는 것보다 가정에서 내조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2.89 (1.45)	0.44	<b>0.66</b>	0.00	-0.02	0.01	0.07	0.21
3. 한국사회에 너무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존재한다.	4.58 (1.46)	0.46	0.02	<b>0.75</b>	-0.07	0.04	-0.01	-0.03
4. 한국 내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외국인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4.03 (1.59)	0.58	0.00	<b>0.85</b>	0.01	0.00	-0.01	0.12
5.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문화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87 (1.31)	0.34	0.29	<b>0.33</b>	0.08	-0.03	0.03	-0.18
6.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 되지 않는다.	3.15 (1.35)	0.62	0.03	<b>0.31</b>	0.10	0.21	0.15	0.20
7. 구걸하는 노숙자들을 보행자구역에서 쫓아내야 한다.	3.71 (1.54)	0.53	0.01	0.10	<b>0.79</b>	-0.03	-0.03	0.09
8. 시내에서 노숙자들을 마주치면 불쾌하다.	4.19 (1.46)	0.46	0.00	-0.03	<b>0.76</b>	0.05	-0.01	-0.02
9.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이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기존 구성원들보다 적은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3.60 (1.38)	0.52	0.06	0.03	-0.01	-0.01	<b>0.76</b>	0.00
10. 어디서든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많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3.50 (1.44)	0.51	0.00	-0.02	-0.02	0.01	<b>0.81</b>	0.05

	평균 (표준 편차)	<i>r</i>	EFA 요인부하량					
			여성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노숙자	북한이탈 주민/난민	신입 구성원	노인/ 장애인
11.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보면 불쾌하다.	3.02 (1.42)	0.65	0.03	-0.03	0.00	<b>0.85</b>	-0.05	0.16
12.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은 실업, 일탈 등의 사회문제를 증가시킨다.	3.24 (1.46)	0.65	0.03	0.02	-0.10	<b>0.91</b>	-0.01	0.03
13. 한국사회에 들어온 난민들은 한국사회에 기여하지 못한다.	3.68 (1.50)	0.64	-0.04	0.23	0.17	<b>0.46</b>	0.11	-0.06
14. 한국사회에 들어온 난민들이 한국인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3.49 (1.50)	0.64	-0.05	0.16	0.17	<b>0.41</b>	0.24	-0.03
15. 동성 간 혼인을 합법화해야 한다. (역문항)	4.77 (1.83)	0.15	0.24	0.11	-0.03	0.07	-0.04	-0.21
16. 공공장소에서 동성 간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불쾌하다.	4.62 (1.84)	0.27	0.20	-0.02	0.15	0.14	0.04	-0.25
17. 노인들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도록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가장 좋다.	2.45 (1.47)	0.48	0.12	0.04	0.17	0.07	0.06	<b>0.53</b>
18.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역문항)	2.44 (1.49)	0.16	-0.08	0.04	-0.10	-0.01	-0.05	<b>0.53</b>
19. 장애인을 마주치면 불편하다.	2.43 (1.43)	0.47	0.00	-0.07	0.17	0.16	0.12	<b>0.45</b>
20.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비장애인에 대한 처우에 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역문항)	2.87 (1.55)	0.19	0.03	-0.01	-0.01	-0.02	-0.02	<b>0.41</b>

주:  $N=1,600$  (EFA 반분표본  $n=800$ );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 전체  $p < .01$  수준에서 유의; 0.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은 진하게 표시.

### (3) 개인주의-집단주의와 G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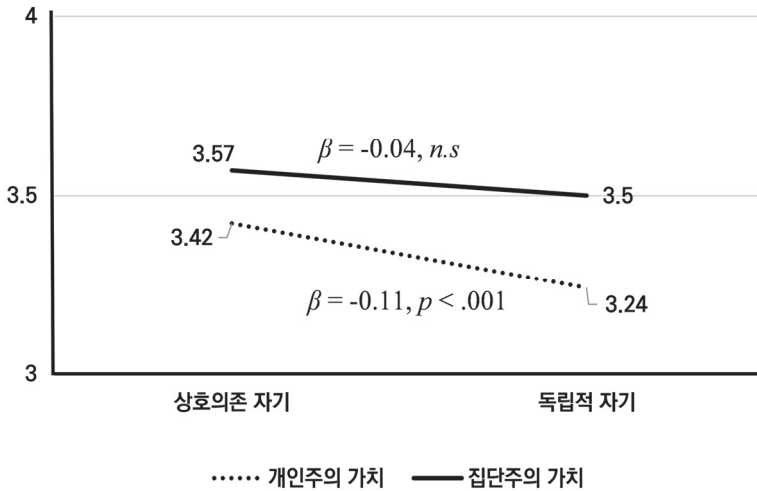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의 조합이 GFE 점수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가치지향성과 자기관의 주효과 항을, 그리고 2단계에는 두 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은 GFE를 부적으로 예측했고,  $b = -.13$ ,  $SE = .03$ ,  $p < .001$ , 독립적 자기관 역시 GFE를 부적으로 예측했다,  $b = -.08$ ,  $SE = .03$ ,  $p = .003$ . 보다 중요하게, 이 두 가지 주효과 항을 통제하고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관의 상호작용 항은 GFE를 부적으로 예측했다,  $\Delta R^2 = .003$ ,  $\Delta F(1, 1596) = 4.427$ ,  $b = -.05$ ,  $SE = .02$ ,  $p = .036$ .

이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은 응답자들의 경우(+1  $SD = 0.75$ ) 독립적 자기관은 GFE를 부적으로 예측한 반면,  $b = -.12$ ,  $SE = .03$ ,  $p < .001$ ,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낮은 경우(-1  $SD = -0.75$ )에는 자기관과 GFE는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b = -.05$ ,  $SE = .04$ ,  $p = .197$  (<그림 II-2> 참고).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정과 일관되게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우세하게 지니고 있으면서 자기의 독립성을 강하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한국사회에서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을 포괄하는 GFE 점수도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11-2〉 가치지향성과 자기관의 상호작용에 따른 GFE 점수



## 라. 논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들에 대한 편견을 불평등에 관한 왜곡된 신념을 반영하는 GFE로 공개개념화할 수 있는지 알아본 최초의 시도이다.

분석 결과, 표적 집단들 가운데 성소수자 집단을 제외한 9개 낙인 집단들에 대한 응답에서 여섯 개의 하위 요인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을 포함하는 이 여섯 개 하위 요인들은 상위수준에서 GFE라는 구성개념으로 포괄됨을 확인하였다.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로 GFE 구조를 보여주는 이 결과는 집단 간 편견에 관한 학술연구는 물론 장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의 심리적 기저를 연구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래전 올포트(Allport 1954)가 주창한대로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서로 분리되고 구분된다기보다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연결의 뿌리를 알아내는 작업은 편견의 근원을 밝힌다는 점에

서 중요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GFE 구조로부터, 한국에서 노숙자에 대해 편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여성, 난민과 북한이탈주민, 노인과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 등과 같은 한국의 저지위 낙인집단들에 대해서도 편견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저지위 낙인집단들에 대한 편견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불평등에 관한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심리적 토대로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 연구에서 GFE 총점이 높을수록 낙인집단에 대한 지원의 도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차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GFE의 개념적 유용성을 보여준다.

연구 4에서 특히 흥미로운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편견이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편견과 동일한 요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유입되어 있는 난민 집단(예: 시리아 난민, 예멘 난민 등)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의 속성과 유입 배경,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정 등에서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편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하나의 동일한 요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소수자나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왜곡된 불평등 신념이라는 공통의 근원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난민에 대한 편견이 하나의 요인을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저지위 낙인집단들에 대한 편견이 상위수준에서 GFE를 통해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

한 통찰을 제공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사회의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신념의 교정과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타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또 다른 주요 결과는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이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의 공통구조인 GFE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 일관되게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높고 독립적 자기관을 우세하게 지니고 있는 응답자들이 낮은 수준의 GFE를 보였다.

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을 평가절하하고 불평등 상황을 고착시키는 차별적 신념이 GFE의 현상적 특징임을 감안하면, 집단주의 가치를 숭상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성숙, 발전에 대해 심리적으로 몰입하고 자기-개념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강하게 지각하여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범으로부터 자신을 심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동시에 충족될 때 GFE를 경감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상 한국과 같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성숙과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자기개념의 독립성이 충분히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약자집단을 차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규범이나 관행, 타인의 영향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기-개념의 독립성을 강하게 인식할수록 저지위 낙인집단에 초점화된 악감정을 덜 지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으로써

터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스스로를 독립성과 고유성에 기반하여 정의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집단에 속한 타인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고유성에 기반한 인식이 우세한 반면 그들이 속한 ‘집단’의 속성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집단-초점 악감정을 덜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독립적 자기관의 긍정적 효과에 더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번영에 강하게 가치몰입을 하는 사람들은 저지위 소수집단에 대한 심리적 배척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덜 지니고 있으리라고 추론하고, 독립적 자기관과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조합이 GFE를 경감시키는 심리적 조건일 것으로 추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사회의 소수 약자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의 통합과 안녕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그리고 평등과 정의, 통합이 이 시대를 규정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GFE에서 관찰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관의 긍정적 상승효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의 다양한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공동체 가치를 고양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개인 각자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의 교육과 계몽이 요구된다. 이는 장차 남북의 심리적 통합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체로서 평화와 화해를 증진하는 데에도 요구되는 심리적 조건일 수 있다.

# Ⅲ. 남북관계 차원 요인의 메커니즘







# 1. 사회정체성 역동이 대북인식과 제로섬 신념에 미치는 효과

##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사회정체성이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범주를 바탕으로 정의하는 정체성을 의미한다(Tajfel 1974; Tajfel and Turner 1986).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국가, 지역, 성별, 종교, 직업 등 다양한 사회 범주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은 여러 사회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개인에게 우세한 사회정체성은 가변적이다(Turner and Reynolds 2012). 예를 들어 한국인으로서 서울에 거주하며 A 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에게서는 한국인, 서울주민, A기업 직장인이라는 다양한 사회정체성이 존재하며, 특정 사회범주가 우세하게 지각되는 상황에 따라 개인이 본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으로부터 이어진 자기범주화(self-categorization) 이론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집단 구성원 간 유사성과 내/외집단 구성원 간 차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범주화와 사회정체성 동일시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Turner 1987). 즉 범주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은 내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상이한 사람들은 외집단이라고 인식하며, 그 결과로 내집단 구성원들과 자신은 집단에서 상호교환 가능한(interchangeable) 개체이며 자신을 내집단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식한다(몰개인화, depersonalization). 특히 자신이 범주화된 집단에 대하여 강한 소속감과 애착, 연결성을 느낄 경우 그 구성원은 집단정체성에 강하게 동일시(identification)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기범주화와 사회정체성 동일시의 결과로 개인은 내집단 선호와 외집단 배척의 집단 간 편향(intergroup bias)을 보인다. 이는 유사한 속성(가치, 목표, 특성 등)을 지닌 내집단 성원들을 선호하고 상이한 속성을 지닌 외집단 성원들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광범위한 연구에서 구성원들이 내집단 성원들과 더욱 협동하고, 공감하며, 외집단 성원에게보다 내집단 성원에게 많은 자원을 분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Ellemers and Haslam 2012). 이는 개인에게 우세한 사회정체성과 그에 따라 경험하는 심리 과정 및 행동 결과가 집단 간 역동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Hogg et al. 2017). 따라서 집단 간 갈등 및 갈등 해소에서 구성원들에게 우세한 사회정체성과 그에 따른 태도와 행동을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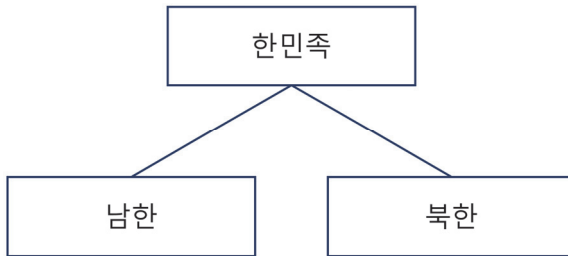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구성원들의 사회정체성과 그 산물이 외집단에 대한 인식과 집단 간 관계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남북한 구성원들은 각 국가에 속한 국민(주민)으로서의 사회정체성(국가정체성)과 한민족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정체성(민족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각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검증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두 사회정체성이 상호작용하여 구성원들의 심리 과정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했다. 특히 장기간 경쟁과 폭력을 수반하며 지속된 남북한 갈등에서(고착화된 갈등, intractable conflict; Bar-tal 2007), 구성원들이 외집단을 적대적이거나 경계대상으로 인식하고, 집단 간 관계를 합영(zero-sum) 관계라고 믿는 것은 집단 간 경쟁적 상호작용과 갈등의 심화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구성원들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 모두 우세할 때 오히려 외집단 인식과 집단 간 합영 관계 신념을 부정적으로 예측함을

보이고, 이를 매개하는 기제와 완화하는 기제를 함께 밝히고자 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사회정체성 강화에 따르는 역효과를 줄이는 처방적 제안을 시도하였다.

### (1) 남북한 구성원들의 층소된 사회정체성

남북한 관계에서 구성원들에게 우세한 사회정체성은 내/외집단(남/북한)으로 구분되는 국가정체성과 남북한이 공동으로 속해 있는 한민족정체성이 존재한다. 이때 남북한 구성원들에게 국가정체성은 보다 상위수준에서 한민족정체성에 완전히 포섭된 위계적 계층구조를 이룬다. 즉 남북한 구성원들은 하위수준에서 국가정체성과 상위수준에서 한민족정체성의 층소된 사회정체성을 지닌다(〈그림 III-1〉, 층소된 사회정체성 이론에 관한 개관은 Crisp and Hewstone 2007을 참고).

〈그림 III-1〉 남북한 구성원들의 층소된 사회정체성



층소된 사회정체성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위집단 정체성이 우세할 때보다 공동의 상위범주 정체성(공동내집단정체성, common ingroup identity)이 우세할 때 외집단에 대한 태도나 행동이 우호적이다. 상위범주 정체성이 우세할 때 외집단을 공동의 내집단으로 재범주화함으로써 내집단 선호가 작동하기 때문이다(이

에 대한 개관은 Dovidio et al. 2007을 참고). 구체적으로, 하위범주 정체성이 우세할 때는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차별 등의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행동이 발생하는 반면, 상위범주 정체성이 우세할 때는 공동 상위범주에 속하는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행동, 집단 간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 발생한다. 남북한 관계에서 축소된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다룬 국내 연구들에서도, 남한사람들의 국가(대한민국)정체성 동일시가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예측한 반면(김혜숙 외 2011), 남한사람들에게 ‘한집단’ 범주(예: ‘우리’, ‘한민족’)를 점화했을 때는 북한사람들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증진되었다(유연재·김혜숙 2000). 또한 남한사람들의 한민족정체성 동일시 수준이 남북한 화해 및 통일 지지를 긍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국가정체성 동일시 수준은 남북한 화해나 통일 지지를 예측하지 못하였다(최훈석 외 2019; Jung et al. 2016).

그러나 축소된 사회정체성을 지녔을 때 구성원들이 자신을 하위수준과 상위수준에 동시에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남한 구성원들이 자신을 남한의 일원(국민)으로서 범주화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상위수준의 포괄적 사회범주(한민족)가 하위범주(남한 또는 북한)의 인식 및 평가의 참조점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상위범주가 지니는 속성을 하위범주도 지니는지, 특히 상위범주에서 전형적인 속성을 하위집단이 얼마나 강하게 지니고 있는지와 같은 인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내/외집단 간 상대적 비교가 이루어진다(Turner 1987). 여기서 전형(prototype)이란, 해당 집단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상적 속성을 의미한다(Oakes et al. 1998). 특히 하위범주가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상위범주의 전형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은 하위범주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가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상위범주에 대한 하위범주의 자격감(entitlement)을 지니게 한다(Wenzel 2004). 자격감은 상위범주의 자원이나 이득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원이 하위범주 내/외집단 간 상위범주에 대한 자격감에서 차이가 있다고 여기게 되면 집단 간에 차별적 태도와 행동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층소된 사회정체성 상황에서 구성원들은 여러 층위의 사회범주에 동시에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상위범주를 참조점으로 하위범주 내외집단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하위범주 내집단(또는 외집단)이 상위범주의 전형적 속성을 얼마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따라서 하위범주가 상위범주의 얼마나 전형적인 집단이라고 인식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때 구성원들이 하위범주 내집단의 속성에 기반하여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상위범주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를 내집단 투사(ingroup projection)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

## (2) 남북한 관계에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

내집단 투사란, 내집단이 고유하게 지닌 속성이 상위범주의 전형적인 속성이라고 인식(투사)하여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상위범주의 전형성과 대표성을 지닌다고 인식하는 편향을 의미한다(Mummendey and Wenzel 1999). 즉 내집단 투사가 발생하면, 공동 상위범주에 속하는 여러 하위집단 중에서도 본인이 속한 내집단이 상위범주를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여기며, 다른 하위집단들은 내집단보다 대표성(전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사람들이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떠올릴 때, 남한사람들이 고유하게 지닌 속성(예: 친절하다, 개성을

존중한다)이 한민족의 ‘전형적인 속성’과 일치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북한사람들이 고유하게 지닌 속성(예: 순박하다, 협동심이 강하다)은 한민족의 ‘전형적인 속성’이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보다 남한사람들이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한민족이라고 생각할 경우 내집단 투사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내집단 투사의 지표로서 상대적 전형성 인식(relative ingroup prototypicality) 정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상위범주에 대한 내집단 전형성 인식과 외집단 전형성 인식의 차이값(내집단 - 외집단)을 통해 산출된다.

그러나 상위범주를 참조점으로 하위범주 집단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전형성 외에 또 다른 주요 차원이 존재한다. 특히 하위범주가 고유하게 지닌 속성이 상위범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필수적’인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하위범주 불가결성(indispensability) 인식으로 정의되며(Verkuyten et al. 2014), 상위범주를 규정하는데 내집단이 지닌 속성이 외집단이 지닌 속성보다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내집단의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relative ingroup indispensability; 내집단 불가결성 인식과 외집단 불가결성 인식의 차이를 통해 산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시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사람들이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떠올릴 때, 남한사람들이 고유하게 지닌 속성(예: 친절하다, 개성을 존중한다)이 한민족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북한사람들이 고유하게 지닌 속성(예: 순박하다, 협동심이 강하다)은 한민족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들보다 남한사람들이 한민족을 규정하는데 필수적인 하위집단으로 인식한다면 내집단의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집단 투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을 주로 다룬 반면 상대적 불가결성에 관해서는 드물게 다루었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하위범주 집단을 포섭하는 상위범주가 공동의 역사나 생활을 공유한 맥락을 다루지 않았다. 여러 지역 출신의 주민 혹은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예: 네덜란드)나, 여러 국가로 구성된 연합체(예: 유럽연합)와 같이 상위범주가 새롭게 형성된 상황이 주로 연구되어왔다(일부 연구에서 구 동/서독 주민들의 내집단 투사를 다룸, 예: Waldzus et al. 2004, 연구 3). 이러한 장면에서는 상위범주의 표상 및 인식도 새롭게 형성됐거나 형성되어가는 상황이고, 따라서 내집단이 지닌 속성을 상위범주의 전형적인 속성으로 투사하여 인식하는 것이 집단 간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관계에서 내집단의 상대적 전형성 뿐만 아니라 불가결성 인식이 외집단 인식 및 태도를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단 이전부터 남북한 구성원들은 한민족공동체에 소속되어 고유한 문화와 역사, 특성들을 오랫동안 공유하며 생활해왔다. 동시에 분단 이후에는 일반인들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각 하위범주 집단에서 한민족의 특정 속성은 유지 또는 강화된 반면 다른 속성은 약화되거나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때 각 국가의 사람들이 한민족의 어떤 ‘전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속성이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한민족을 규정하는데 얼마나 ‘필수적’인가의 인식이 동반될 것을 추론 가능하다.

또한, 남북한 관계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남한사람들에게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인식은 불가결성 인식보다 편향되고 견고할 가능성이 크다. 남한은 북한보다 인구 규모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사회경제적으로 고지위 집단에 해당한다. 상위범주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무엇이 ‘전형적’인가를 인식할 때는 다수이거나 고지위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지닌 속성이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 다수-고지위 집단이 지닌 속성이 소수-저지위 집단이 지닌 속성보다 일반적으로 상위범주에서 전형적인 것으로 여겨졌다(Waldzus et al. 2004). 또한 고지위 집단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privilege)를 합리화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동기화될 가능성이 크며(Jost et al. 2004) 이를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인식을 높게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Wenzel et al. 2017). 반면 어떤 속성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인식은 집단의 규모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비교적 독립적으로 인식되는 차원이다. 상위범주 정체성을 퍼즐에 비유하면, 퍼즐에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의 조각이라도 필요한 것처럼 상위범주를 규정하는 데 소수이거나 저지위 집단이 지닌 속성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Verkuyten et al. 2014). 따라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개입 전략을 고려했을 때에도, 상대적 전형성 인식을 경감하는 것보다 불가결성 인식을 경감하는 것(남북한 사람들이 지닌 속성이 대등하게 한민족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이라는 상위범주 공동체와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집단 투사의 단면으로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을 함께 조명하고, 두 구성개념 간 관계와 외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층소된 사회정체성 상황에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및 불가결성 인식을 함께 다룬 일부 연구에 따르면 두 차원은 상관되지만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며(실증연구에서 상관계수 .50 내외), 각 차원이 독립적으로 외집단

태도 및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g Tseung-Wong and Verkuyten 2010; Verkuyten et al. 2014). 이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구성원들의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이 상호 독립적이며 각 차원이 외집단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3)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의 예측요인과 준거요인: 이중 정체성과 외집단 인식 및 집단 간 관계 신념

사회정체성 이론에서는 개인이 독특하고 긍정적인 사회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동기화된다고 전제한다(Tajfel 1974; Tajfel and Turner 1986). 따라서 축소된 사회정체성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상위수준 집단에 범주화/동일시함과 동시에 하위범주에 강하게 동일시할 때, 상위범주를 참조점으로 하여 하위범주 내집단을 또 다른 하위범주 외집단과는 구분되는 독특하고 긍정적인 집단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동할 수 있다. 이때 구성원들이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정체성에 동시에 강하게 동일시하는 것을 이중 정체성(dual identity)을 지닌 것으로 해석한다.

축소된 사회정체성을 지닌 구성원들에게 이중 정체성이 강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내집단 투사(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먼저 하위범주 동일시가 강할 때 독특하고 긍정적인 하위범주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동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상위범주 동일시가 강할 때, 하위범주를 인식 및 평가하는 데 상위범주가 의미 있는 참조집단으로써 인식된다. 즉, 구성원들에게 상위범주가 유의미한 참조집단인 동시에 하위범주 내집단의 독특성과 긍정성을 유지하고자 동기화될 때, 내집단이 고유하게 지닌 속성이 외집단이 지닌 속성보다 상위범주를 대표하

는 전형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속성이라고 인식하는 편향이 발생하는 것이다(Wenzel et al. 2007). 반면 상위범주가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참조집단으로 인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위범주 정체성이 강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내집단 투사가 발생할 여지가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사람들에게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즉 남한사람들이 이중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때 내집단의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한사람들에게서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 남한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 수준도 높을 것이다. 반면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을 때는 남한동일시 수준에 따라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내집단 투사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인식 수준은 하위범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예측한다(Wenzel et al. 2017). 또한 내집단의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 수준 역시 하위범주 외집단에 대한 평가와 외집단 권익 증진에 대한 지지를 부적으로 예측했다(Ng Tseung-Wong and Verkuyten 2010; Verkuyten et al. 2014). 본 연구에서도 남한사람들의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이 북한에 대한 인식(지원대상/협력대상/경계대상/적대대상)과 남북한 간 합영 관계 신념을 예측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북한 간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도 남한사람들은 북한을 다양한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통일연구원의 평화의식 조사(박주화·강혜석 외 2020)에서 남한사람들에게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지’를 물었을 때,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의 모든 응답에 참가자들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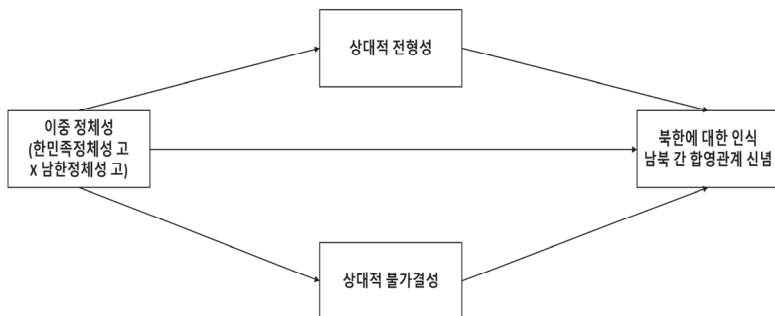
나타났다. 이는 남한사람들에게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하지 않고 다원화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유형을 개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김범수 외 2021, 86)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 유형을 오지선다형으로 선택하도록 물었는데,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8.2%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이 21.0%, ‘적대대상’ 응답이 14.8%, ‘지원대상’ 응답은 11.9%, ‘경쟁대상’ 응답은 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협력대상이라는 응답률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2순위로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는 것은 앞서 통일연구원의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집단의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은 내외집단 간 차이가 우세하게 지각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외집단 배척의 일환으로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인식(지원 또는 협력대상) 수준은 낮고 적대적 인식(경계 또는 적대대상) 수준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하는 심리 기제 중 하나로 합병관계 신념이 존재한다. 이는 집단 간 이득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믿는 것, 즉 두 집단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라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Esses et al. 1998). 집단 간 합병 관계 신념을 예측하는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나, 고지위 집단이 저지위 집단보다 합병 관계 신념을 높게 지니는 경향이 있으며(Stefaniak et al. 2020; Wilkins et al. 2015), 위계적 사회구조를 선호하는 신념인 사회적 지배성향 수준이 합병 관계 신념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Esses et al. 2001). 이는 고지위 집단에 속하거나 집단 간 위계 구

조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서 본인이 지닌 특혜나 많은 자원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석된다. 즉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고지위거나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집단 간 합병 관계 신념이 강해질 것을 추론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로 내 집단의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내집단이 외집단보다 상위범주에 대한 자격감이 큰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내외집단 간 합병 관계 신념 수준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종합하면, 남한 구성원들의 이중 정체성이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 수준은 외집단에 대한 인식과 집단 간 합병 관계 신념을 예측할 것으로 가정했다. 즉 남한사람들의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이, 구성원들의 이중 정체성과 외집단 인식 및 집단 간 합병 관계 신념을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그림 III-2〉 참고).

〈그림 III-2〉 연구모형(이중 정체성,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과 외집단 인식 및 집단 간 합병 관계 신념 예측모형)



#### (4) 이중 정체성과 내집단 투사 간 관계의 조절변수: 정체성 중심성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중 정체성의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에 대한 예측효과를 조절하는 변수를 탐색하고자 했다. 구성원들이 자신을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범주화하더라도, 자신을 규정하고 인식하는데 더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범주(정체성)가 존재할 수 있다. 이때 구성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해당 사회범주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정체성 중심성(identity centrality)이라고 한다(Cameron 2003).

정체성 중심성은 동일시(identification)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중심성은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관한 인식 차원인 반면 동일시는 해당 사회범주에 소속된 것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층소된 사회정체성 상황에서 상위 또는 하위범주 정체성 중심성의 차이에 따라 사회정체성 동일시의 작동 기제가 달라진다(Jung et al. 2018). 이 연구에서는 하위범주 정체성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경감하는 기제로 상위범주 동일시를 가정하였고, 이 효과는 상위범주보다 하위범주 정체성의 중심성이 더 높을 때, 즉 상위범주보다 하위범주가 개인에게 더 중요시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 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을 예측하는 효과가 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하위범주 중심성 - 상위범주 중심성 차이)이 높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모두 범주화 및 동일시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상위범주보다 하위범주 정체성의 중심성이 더 높을 때 앞서 예상했듯이 하위범주 정체성의 독특성과 긍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상위범주에 대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을 높이고자 동기화될 것으로 추론한다. 반면 구성원들에게 하위범주보다 상위범주 정체성의 중심성이 더 높다면, 즉 개인에게 하위범주보다 상위범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하위범주 내집단의 독특성과 긍정성을 충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내집단의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가설화하면 다음과 같다. 남한사람들에게서 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을 때는 이중 정체성이(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가 모두 높을 때)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을 예측할 것이다. 반면 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낮을 때는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 나. 구성개념 및 측정 문항

### (1)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

사회정체성 동일시 수준을 측정하는 호그와 하인즈(Hogg and Hains 1996)의 척도 문항 중 네 개를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네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한민족의 구성원/남한 국민으로서 한민족/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니까?”, “귀하는 한민족/남한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당신이 한민족의 구성원/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귀하는 한민족/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느껴지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사이에서 응답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는 국가정체성 Cronbach's  $\alpha = .95$ , 한민족정체성 Cronbach's  $\alpha = .96$  이었다. 분석 시에는 각 네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했다.

## (2) 하위집단 전형성과 하위집단 불가결성

먼저 상위범주(한민족)에 대한 하위범주(남한과 북한)의 지각된 전형성을 각 두 문항을 사용해 측정했다. 측정 문항은 “남한/북한과 한민족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남한/북한은 한민족을 잘 대표하는 집단이다”, “남한/북한과 한민족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남한/북한은 한민족의 전형적인 집단이다”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서 응답하였다. 남한 전형성을 묻은 두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 북한 전형성을 묻은 두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이었다. 각 두 문항을 평균하여 남한 전형성과 북한 전형성 점수를 산출하고, 하위범주 전형성 간의 차이값(남한 전형성 - 북한 전형성)을 산출하여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값으로 분석에 사용했다(Wenzel et al, 2007). 점수가 클수록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하위집단 불가결성도 남한과 북한에 대하여 “남한사람들이 빠진 한민족은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다”, “북한사람들이 빠진 한민족은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다”의 두 문항을 사용하여 물었다(Ng Tseung-Wong and Verkuyten 2010).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하위범주 불가결성을 측정한 문항 간 차이값(남한 불가결성 - 북한 불가결성)을 산출하여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값으로 분석에 사용했다. 점수가 클수록 내집단의 불가결성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 (3) 정체성 중심성

상위범주(한민족)와 하위범주 내집단(남한) 정체성 중심성을 각각



묻기 위해 “귀하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이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와 “귀하가 남한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의 문항을 사용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 응답했다. 이후 두 응답의 차이값(하위범주 중심성 - 상위범주 중심성)을 산출하여 ‘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 값으로 분석에 사용했다. 점수가 클수록 상위범주(한민족)보다 하위범주(남한) 정체성의 중심성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

#### (4)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이미지)을 묻는 네 개 문항(“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원대상, (2) 협력대상, (3) 경제대상, (4) 적대대상)을 사용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0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 (5) 남북한 간 합영 관계 신념

남북한 관계가 합영(zero-sum) 관계라고 인식하는지를 묻는 네 개 문항(“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손해이다”, “남북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다. 한쪽이 패배해야만 다른 쪽이 승리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배려한다면 그 쪽은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남북관계에서 한국과 북한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충돌한다”)을 사용하여 측정했다(Rózycka-Tran et al. 2015).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였고, 분석 시 네 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했다.

## 다. 분석

### (1) 구성개념 기술통계치

연구에서 측정된 구성개념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III-1>과 같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동일시는 5.07점, 한민족동일시는 4.60점으로 모두 척도의 중간점(4점) 이상이였다.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 인식 값은 1.03점, 그리고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 값도 0.65점으로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북한보다 남한이 한민족의 전형적인 하위집단이며(상대적 전형성) 한민족을 규정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고(상대적 불가결성)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위범주(남한)의 상대적 중심성 값은 0.55점으로, 응답자들이 일반적으로 한민족보다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 구성개념 평균 및 표준편차

구성개념	평균	표준편차
남한동일시	5.07	1.19
한민족동일시	4.60	1.27
남한 전형성	4.77	1.16
북한 전형성	3.74	1.26
남한 상대적 전형성	1.03	1.51
남한 불가결성	4.75	1.40
북한 불가결성	4.10	1.38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0.65	1.31
남한정체성 중심성	5.09	1.31
한민족정체성 중심성	4.54	1.45
남한 상대적 중심성	0.55	1.13
북한에 대한 인식: 지원대상	4.55	2.58
북한에 대한 인식: 협력대상	5.49	2.57
북한에 대한 인식: 경계대상	6.15	2.45
북한에 대한 인식: 적대대상	5.34	2.58
남북 간 합병 관계 신념	3.59	1.04

주: N=1,600.

한편 북한에 대한 네 가지 인식 점수는 경계대상이라고 보는 정도 (6.15점)가 가장 컸고, 그 뒤로 협력대상(5.49점), 적대대상(5.34점), 지원대상(4.55점)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 간 합영 관계 신념 수준은 3.59점으로 중간점(4점) 이하였다.

## (2) 상관분석

연구에서 측정된 구성개념 간 상관은 <표 III-2>와 같다. 주요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 간 강한 정상관( $r=.67$ )을 보였고,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r=.28$ )과 상대적 불가결성( $r=.14$ ) 인식과 정상관을 보였다. 한민족동일시도 마찬가지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r=.12$ )과 정상관을 보였지만 상대적 불가결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한편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간 중간 정도의 정상관을 보였다( $r=.51$ ). 이는 선행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상관되었듯이, 본 연구에서도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지원대상, 협력대상)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지원/협력대상 인식과 상대적 전형성 상관 순서대로  $-.20$ ,  $-.18$ ; 두 변수와 상대적 불가결성 상관 순서대로  $-.23$ ,  $-.21$ ),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경계대상, 적대대상)과 남북 간 합영 관계 신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경계/적대대상 인식, 합영 관계 신념과 상대적 전형성 간 상관 순서대로  $.24$ ,  $.25$ ,  $.21$ ; 세 변수와 상대적 불가결성 상관 순서대로  $.22$ ,  $.23$ ,  $.21$ ).

## (3) 이중 정체성의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

남한사람들이 이중 정체성을 지니고 있을 때, 즉 남한동일시와 한

민족동일시가 모두 높을 때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은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준거변수(남한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남한동일시×한민족동일시)가 유의한지 검증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시 성별, 연령, 월소득수준의 인구통계변수 효과를 통제했으며 모든 예측변수는 평균중심화하여 투입하였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원상호작용효과의 해석을 위해 아이컨 외(Aiken et al. 1991)의 제안에 따라서 단순주효과(기울기)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남한 상대적 전형성 인식에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했다, 남한동일시  $b=.46$ ,  $SE_b=.04$ ,  $t(1593)=10.94$ ,  $p<.001$ ; 한민족동일시  $b=-.17$ ,  $SE_b=.04$ ,  $t(1593)=-4.50$ ,  $p<.001$ . 즉 남한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반면 한민족동일시 수준은 낮을수록 남한 상대적 전형성 인식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b=.07$ ,  $SE_b=.02$ ,  $t(1593)=3.83$ ,  $p<.001$ . 본 연구가설과 일관되게 한민족동일시 수준에 따라 남한동일시가 남한 상대적 전형성을 예측하는 정도가 다른지 검증하는 단순주효과(기울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 $+1SD=1.27$ )에게서 남한동일시의 상대적 전형성에 대한 예측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했다,  $b=.55$ ,  $SE_b=.05$ ,  $t(1593)=10.48$ ,  $p<.001$ . 그리고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은 사람들( $-1SD=-1.27$ )에게서도 남한동일시의 상대적 전형성에 대한 예측효과가 유의했다,  $b=.38$ ,  $SE_b=.04$ ,  $t(1593)=8.77$ ,  $p<.001$ . 이 경우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남한동일시의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에 대한 예측효과가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보다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결과는 <표 III-3>과 <그림 III-3>에 제시했다.

〈표 III-2〉 구성개념 간 상관

구성개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남한동일시	1	.67**	.58**	.21**	.28**	.38**	.26**	.14**	.77**	.56**	.17**	.19**	.22**	.08**	.02	-.05*
2. 한민족동일시		1	.52**	.33**	.12**	.36**	.34**	.03	.60**	.73**	-.28**	.31**	.30**	-.01	-.05	-.11**
3. 남한 전형성			1	.23**	.58**	.51**	.24**	.29**	.53**	.45**	.04	.16**	.17**	.15**	.13**	.09**
4. 북한 전형성				1	-.66**	.12**	.44**	-.34**	.19**	.36**	-.24**	.38**	.36**	-.15**	-.18**	-.17**
5. 상대적 전형성					1	.30**	-.18**	.51**	.26**	.05	.23**	-.20**	-.18**	.24**	.25**	.21**
6. 남한 불가결성						1	.55**	.49**	.37**	.32**	.03	.12**	.15**	.15**	.11**	.06*
7. 북한 불가결성							1	-.46**	.23**	.33**	-.16**	.34**	.35**	-.06*	-.11**	-.14**
8. 상대적 불가결성								1	.15**	-.01	.20**	-.23**	-.21**	.22**	.23**	.21**
9. 남한중심성									1	.67**	.31**	.16**	.17**	.09**	.05*	-.03
10. 한민족중심성										1	-.51**	.35**	.31**	-.06*	-.08**	-.15**
11. 상대적 중심성											1	-.26**	-.20**	.18**	.17**	.15**
12. 지원대상												1	.67**	-.17**	-.28**	-.40**
13. 협력대상													1	-.15**	-.34**	-.46**
14. 경계대상														1	.77**	.35**
15. 적대대상															1	.46**
16. 합영 신념																1

주: \*  $p < .05$ , \*\*  $p < .01$ ,  $N=1,600$ . 상대적 전형성, 상대적 불가결성, 상대적 중심성은 모두 남한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중심성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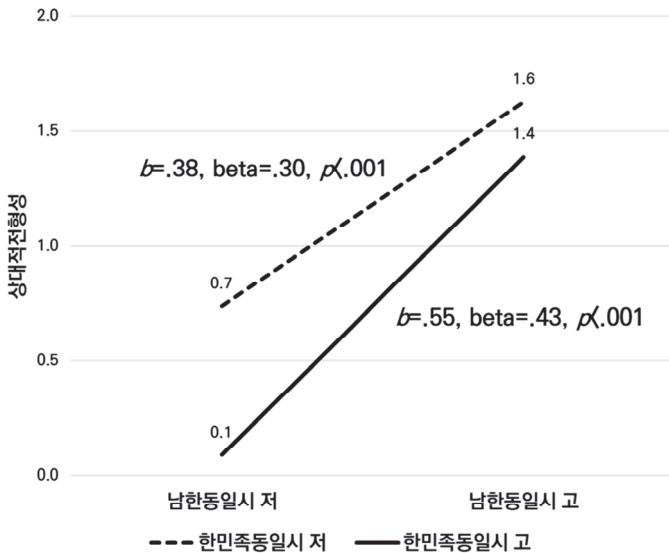
〈표 Ⅲ-3〉 남한 상대적 전형성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예측효과

	남한상대적전형성			
	<i>b</i>	<i>SE<sub>b</sub></i>	<i>t</i>	<i>R<sup>2</sup></i>
성별	-.13	.07	-1.85	.102**
연령	.01	.00	3.65**	
월소득수준	.01	.01	1.33	
남한동일시	.46	.04	10.94**	
한민족동일시	-.17	.04	-4.50**	
남한동일시×한민족동일시	.07	.02	3.83**	

상호작용효과 증분설명량( $\Delta R^2$ )=.008\*\*

주: \*  $p < .05$ , \*\*  $p < .01$ ;  $N=1,600$ .

〈그림 Ⅲ-3〉 남한 상대적 전형성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예측효과



다음으로,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에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 동일시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했다, 남한동일시  $b=.24$ ,  $SE_b=.04$ ,  $t(1593)=6.33$ ,  $p < .001$ ; 한민족동일시  $b=-.13$ ,  $SE_b=.04$ ,  $t(1593)=$

-3.60,  $p < .001$ . 즉 남한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반면 한민족동일시 수준은 낮을수록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b = .06$ ,  $SE_b = .02$ ,  $t(1593) = 3.47$ ,  $p < .001$ . 전과 동일하게 한민족동일시 수준에 따라 남한동일시가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을 예측하는 정도가 다른지 검증하는 단순주효과(기울기)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1SD=1.27)에게서 남한동일시의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했다,  $b = .32$ ,  $SE_b = .05$ ,  $t(1593) = 6.57$ ,  $p < .001$ . 그리고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은 사람들(-1SD=-1.27)에게서도 남한동일시의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가 유의했다,  $b = .18$ ,  $SE_b = .04$ ,  $t(1593) = 4.74$ ,  $p < .001$ . 마찬가지로 이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기 때문에,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남한동일시의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가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보다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결과는 <표 III-4>와 <그림 III-4>에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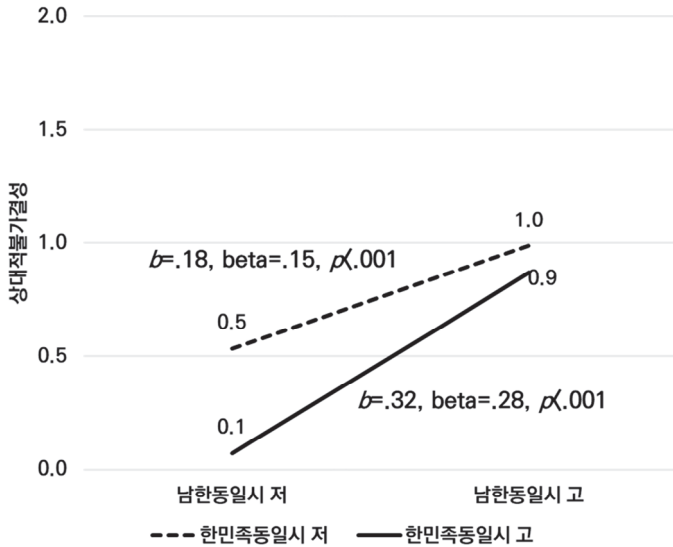
<표 III-4>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예측효과

	남한상대적불가결성			
	$b$	$SE_b$	$t$	$R^2$
성별	.10	.07	1.58	.038**
연령	.00	.00	1.63	
월소득수준	.02	.01	2.25*	
남한동일시	.24	.04	6.33**	
한민족동일시	-.13	.04	-3.60**	
남한동일시×한민족동일시	.06	.02	3.47**	

상호작용효과 증분설명량( $\Delta R^2$ )=.007\*\*

주: \*  $p < .05$ , \*\*  $p < .01$ ;  $N=1,600$ .

〈그림 III-4〉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예측효과



#### (4) 이중 정체성,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의 외집단 인식 및 남북 간 합영 관계 신념에 대한 예측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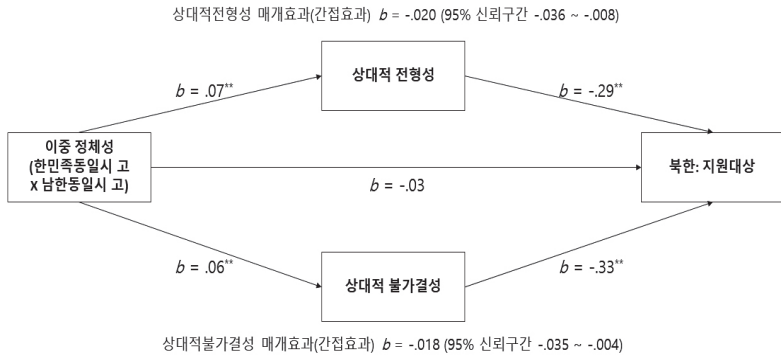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남한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을 거쳐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 간 합영 관계 신념을 예측하는지 검증하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했다.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에서는 모형에서 설정된 각 경로(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남한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을 예측하는 경로,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이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 간 합영 관계 신념을 예측하는 경로)의 유의도와,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매개변수(남한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를 거쳐 준거변수를 예측하는지를 의미하는 매개효과(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는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5,000회 시행을 통해 효과 계수의 95%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했다.

먼저 남한사람들의 이중 정체성(한민족동일시 고×남한동일시 고)이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을 통해 북한 지원 대상 인식을 예측하였다, 상대적 전형성 매개효과  $b = -.020$ , 95% 신뢰구간  $-.036 \sim -.008$ ; 상대적 불가결성 매개효과  $b = -.018$ , 95% 신뢰구간  $-.035 \sim -.004$ . 구체적으로 이중 정체성이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을 각각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순서대로  $b = .07$ ,  $p < .001$ ;  $b = .06$ ,  $p < .001$ ,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이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각각 부적으로 예측했다, 순서대로  $b = -.29$ ,  $p < .001$ ;  $b = -.33$ ,  $p < .001$ . 즉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수준이 낮았다(〈그림 III-5〉 참고).

〈그림 III-5〉 이중 정체성,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북한 지원대상 인식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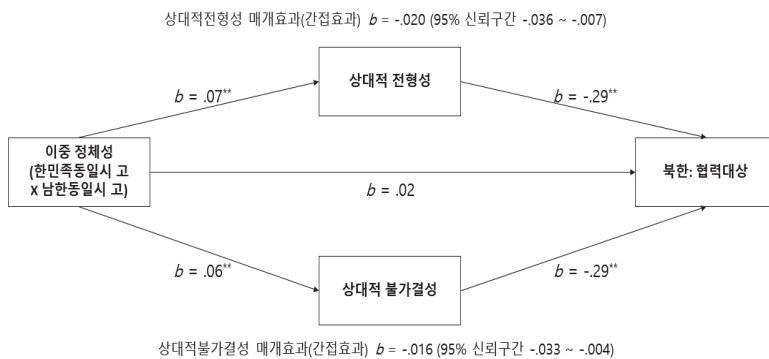


주: \*\*  $p < .01$ ;  $N = 1,600$ .

다음으로 남한사람들의 이중 정체성이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을 통해 북한 협력대상 인식을 예측했다, 상대적 전형성 매개효과  $b = -.020$ , 95% 신뢰구간  $-.036 \sim -.007$ ; 상대적 불가결성 매개효과  $b = -.016$ , 95% 신뢰구간  $-.033 \sim -.004$ . 이중

정체성이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을 예측하는 정도는 이전과 동일하며,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각각 부적으로 예측했다, 순서대로  $b = -.29$ ,  $p < .001$ ;  $b = -.29$ ,  $p < .001$ . 즉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수준이 낮았다 (<그림 III-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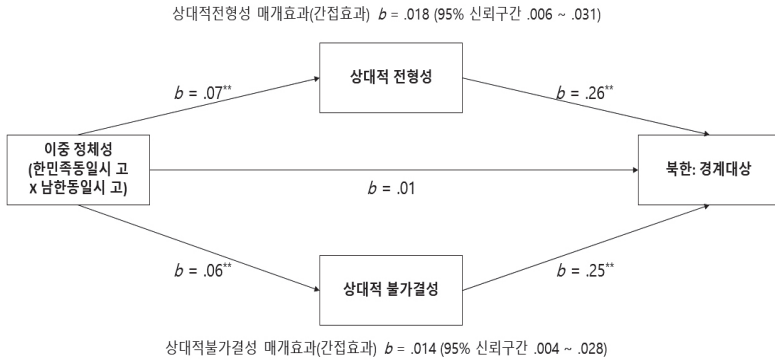
<그림 III-6> 이중 정체성과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매개모형



주: \*\*  $p < .01$ ;  $N = 1,6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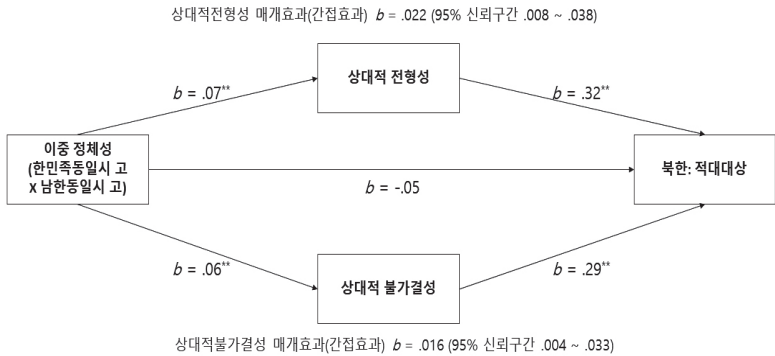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한사람들의 이중 정체성이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을 통해 북한 경계대상 인식을 예측했다, 상대적 전형성 매개효과  $b = .018$ , 95% 신뢰구간  $.006 \sim .031$ ; 상대적 불가결성 매개효과  $b = .014$ , 95% 신뢰구간  $.004 \sim .028$ . 이중 정체성이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을 예측하는 정도는 이전과 동일하며,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이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각각 정적으로 예측했다, 순서대로  $b = .26$ ,  $p < .001$ ;  $b = .25$ ,  $p < .001$ . 즉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수준이 높았다 (<그림 III-7> 참고).

〈그림 III-7〉 이중 정체성과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북한 경계대상 인식의 매개모형



주: \*\*  $p < .01$ ;  $N=1,600$ .

〈그림 III-8〉 이중 정체성과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북한 적대대상 인식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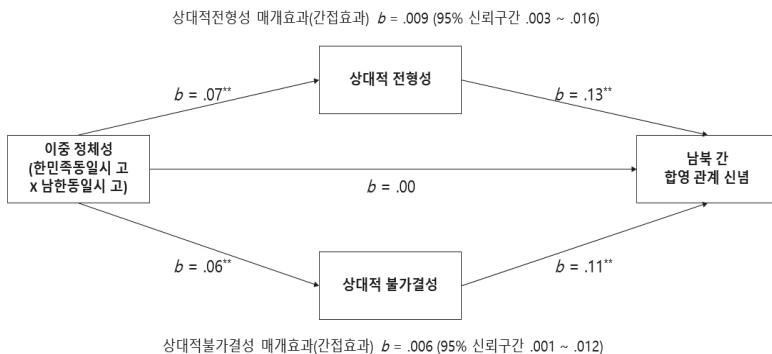
주: \*\*  $p < .01$ ;  $N=1,600$ .

다음으로 남한사람들의 이중 정체성이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을 통해 북한 적대대상 인식을 예측했다. 상대적 전형성 매개효과  $b = .022$ , 95% 신뢰구간 .008 ~ .038; 상대적 불가결성 매개효과  $b = .016$ , 95% 신뢰구간 .004 ~ .033. 이중 정체성이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을 예측하는 정도는 이전과

동일하며,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이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각각 정적으로 예측했다, 순서대로  $b=.32, p<.001$ ;  $b=.29, p<.001$ . 즉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수준이 높았다 (<그림 III-8> 참고).

마지막으로 남한사람들의 이중 정체성이 남한의 상대적 전형성과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을 통해 남북 간 합영 관계 신념을 예측했다, 상대적 전형성 매개효과  $b=.009, 95\%$  신뢰구간  $.003 \sim .016$ ; 상대적 불가결성 매개효과  $b=.006, 95\%$  신뢰구간  $.001 \sim .012$ . 이중 정체성이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을 예측하는 정도는 이전과 동일하며,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이 남북 간 합영 관계 신념 수준을 각각 정적으로 예측했다, 순서대로  $b=.13, p<.001$ ;  $b=.11, p<.001$ . 즉 상대적 전형성 인식과 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남북한 관계가 합영 관계라고 믿는 수준이 높았다 (<그림 III-9> 참고).

<그림 III-9> 이중 정체성과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남북 간 합영 관계 신념의 매개모형



주:  $** p<.01$ ;  $N=1,600$ .

### (5) 이중 정체성의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에 대한 예측 효과에서 하위범주 정체성 상대적 중심성의 조절효과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이 남한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을 예측하는 효과에서 남한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남한동일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 상대적 중심성 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삼원상호작용효과의 해석을 위해, 남한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이 높거나(한민족정체성보다 남한정체성이 더 중요한 경우) 낮은(한민족정체성보다 남한정체성이 덜 중요한 경우) 경우 준거변수에 대한 이중 정체성의 효과를 검증하는 단순이원상호작용효과와, 한민족동일시를 조절변수로 하는 남한동일시의 단순단순주효과(기울기)를 검증했다. 분석에서 성별, 연령, 월소득수준의 인구통계변수 효과는 통제했고, 모든 예측변수는 평균중심화하여 투입했다.

먼저 남한 상대적 전형성 인식에서 남한동일시와 남한 상대적 중심성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남한동일시  $b=.25$ ,  $SE_b=.05$ ,  $t(1589)=4.99$ ,  $p<.001$ ; 남한 상대적 중심성  $b=.29$ ,  $SE_b=.04$ ,  $t(1589)=7.00$ ,  $p<.001$ . 즉 남한동일시 수준과 남한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 상대적 전형성 인식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b=.08$ ,  $SE_b=.02$ ,  $t(1589)=4.69$ ,  $p<.001$ . 그러나 가설과 달리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 남한 상대적 중심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01$ ,  $SE_b=.01$ ,  $t(1589)=-0.81$ ,  $p=.421$ . 본 결과는 <표 III-5>에 제시했다.

〈표 III-5〉 남한동일시, 한민족동일시, 남한 상대적 중심성의 남한 상대적 전형성에 대한 예측효과

	남한 상대적 전형성			
	<i>b</i>	<i>SE<sub>b</sub></i>	<i>t</i>	<i>R</i> <sup>2</sup>
성별	-.14	.07	-1.98*	.143**
연령	.01	.00	4.48**	
월소득수준	.01	.01	1.10	
남한동일시	.25	.05	4.99**	
한민족동일시	.05	.05	1.06	
남한상대적중심성	.29	.04	7.00**	
남한동일시×한민족동일시	.08	.02	4.69**	
남한동일시×상대적중심성	.06	.03	1.98*	
한민족동일시×상대적중심성	-.03	.02	-1.29	
남한동일시×한민족동일시×상대적중심성	-.01	.01	-0.81	
삼원상호작용효과 증분설명량( $\Delta t$ )=.000				

주: \*  $p < .05$ , \*\*  $p < .01$ ;  $N=1,600$ .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한 동일시와 남한 상대적 중심성의 주효과가 각각 유의했다, 남한동일시  $b=.10$ ,  $SE_b=.05$ ,  $t(1589)=2.29$ ,  $p=.022$ ; 남한 상대적 중심성  $b=.18$ ,  $SE_b=.04$ ,  $t(1589)=4.86$ ,  $p < .001$ . 즉 남한동일시 수준과 남한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을수록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b=.07$ ,  $SE_b=.02$ ,  $t(1589)=4.27$ ,  $p < .001$ .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연구가설과 일관되게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 남한 상대적 중심성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b=.03$ ,  $SE_b=.01$ ,  $t(1589)=2.53$ ,  $p=.011$ .

이어서 남한 상대적 중심성의 수준에 따라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다른지 검증하는 단순상호작용효과

분석 결과, 연구가설과 일관되게 남한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1SD=1.13)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다,  $b=.10$ ,  $p<.001$ . 반면 남한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서는(-1SD=-1.13)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4$ ,  $p=.068$ . 남한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유의한 단순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단순단순주효과(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1SD=1.27)에게서 남한동일시의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가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b=.28$ ,  $SE_b=.07$ ,  $t(1589)=4.00$ ,  $p<.001$ ,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은 사람들(-1SD=-1.27)에게서는 남한동일시의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03$ ,  $SE_b=.05$ ,  $t(1589)=0.56$ ,  $p=.573$ . 본 결과는 <표 III-6>과 <그림 III-10>, <그림 III-11>에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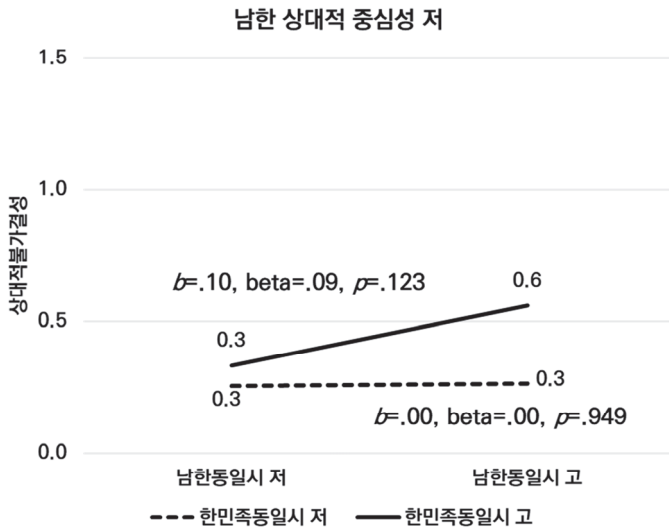
<표 III-6> 남한동일시, 한민족동일시, 남한 상대적 중심성의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b$	$SE_b$	$t$	$R^2$
성별	.09	.06	1.46	.070**
연령	.01	.00	2.27**	
월소득수준	.02	.01	2.06*	
남한동일시	.10	.05	2.29*	
한민족동일시	.02	.04	0.49	
남한상대적중심성	.18	.04	4.86**	
남한동일시×한민족동일시	.07	.02	4.27**	
남한동일시×상대적중심성	.05	.03	1.76	
한민족동일시×상대적중심성	-.05	.02	-2.38*	
남한동일시×한민족동일시×상대적중심성	.03	.01	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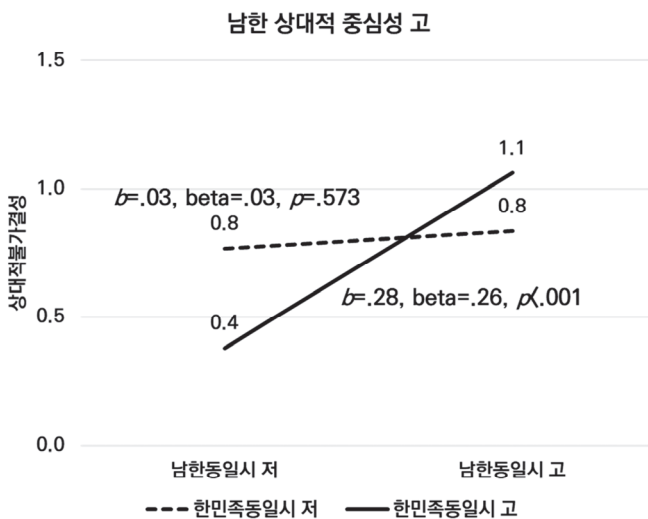
삼원상호작용효과 증분설명량( $\Delta R^2$ )=.003\*

주: \*  $p<.05$ , \*\*  $p<.01$ ;  $N=1,600$ .

〈그림 III-10〉 남한 상대적 중심성이 낮은 경우에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



〈그림 III-11〉 남한 상대적 중심성이 높은 경우에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남한 상대적 불가결성에 대한 예측효과





종합하면, 연구가설과 일관되게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을 예측하는 효과는 상위범주보다 하위범주 정체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서(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범주를 비교적 덜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서는(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이 낮은 경우)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한편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에서는 남한 상대적 중심성 수준에 관계없이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 라. 논의

### (1) 결과 요약 및 해석

남북한 관계에서 구성원들은 자신을 국가(남한)의 일원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고, 남북한을 포괄하는 보다 상위수준에서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하위수준과 상위수준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축소된 사회정체성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이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동시에 범주화/동일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내집단 투사(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및 불가결성 인식)가 발생하여 오히려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 인식과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 인식과 집단 간 관계 신념에서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검증하고, 나아가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경감하는 기제로서 하위범주와 상위범주 정체성 중심성(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의 역할을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 때(즉 이중 정체성이 존재할 때)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두 준거 변수에서 모두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을 강하게 예측했다. 반면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을 때는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을 예측하는 정도가 약했다. 연구가설에서는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낮을 때는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수준을 예측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본 연구에서 해당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유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의 기술통계치를 보면 한민족동일시(4.60점)와 남한동일시(5.07점) 수준이 모두 중간점(4점) 이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4점 기준으로  $t$ -test 검증 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수준의 유의도 순서대로  $t(1599)=18.95, p<.001$ ;  $t(1599)=36.10, p<.001$ ). 따라서 원자료에서 상대적 차이에 따라 한민족동일시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응답자들도, 한민족동일시 수준의 절대적 크기 자체는 작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한민족동일시 전체 평균에서  $-1SD=3.33, +1SD=5.87$ ). 이 경우에도 응답자들에게서 한민족이라는 상위범주가 남한의 하위범주를 인식하는데 참조집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남한동일시 수준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한 관계에서는 상위범주(한민족)동일시 수준과 관계없이 하위범주(남한)동일시 수준이 내집단 투사와 직접 상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주효과 가설). 나아가 이 경우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범주 정체성과 하위범주 정체성 중 더 우세한 정체성의 효과가 다른 정체성의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의 주효과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 낮을 때 보다 남한동일시가 내집단 투사를 강하게 예측했다는 점에서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가 유의미하게 관찰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연구가설과 일관되게 남북한 관계에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계 신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이 각각 북한에 대한 우호적(지원/협력대상) 인식은 부적으로, 적대적(경계/적대대상) 인식은 정적으로 예측했다. 또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이 각각 남북 간 합병 관계 신념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관되는 결과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이 높은 것은 내외집단 간의 차이 지각이 우세한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외집단 배척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 간 관계 신념을 예측하는 간접효과가 유의했다. 이는 이중 정체성이 집단 간 갈등에서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계 신념을 예측한다는 것으로,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완화하는 기제로 상위/하위범주 정체성 중심성의 역할을 검증했다. 그 결과, 구성원들에게 하위범주가 상위범주보다 중요하게 여겨질 때(하위범주 정체성의 상대적 중심성 수준이 높을 경우)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가 모두 강한 구성원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내집단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이 나타났다. 반면 구성원들이 하위범주를 덜 중시하는 경우에는 이중 정체성이 내집단 투사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성원들에게서 하위범주보다 상위범주 정체성을 중요시하도록 하는 것, 최소한 상위/하위범주 중심성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것을 통해서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하위범주 상대적 중심성의 조절효과가 내집단 투사의 두 단면 중 상대적 불가결성에서만 관찰되고 상대적 전형성에서는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다소 제약이 있다. 이처럼 두 변수에서 서로 다른 조절효과가 관찰된 것은 적어도 남북한 관계에서는 두 단면이 상관되지만(본 연구에서 변수 간 상관  $r=.51$ ) 독립적으로 작동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남북한 관계에서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간의 관계와 역할, 그리고 두 단면을 서로 다르게 예측하거나 두 단면에 의해 다르게 예측되는 차원들을 보다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 (2) 학술적 및 실용적 함의

공동 내집단 정체성 모형(Dovidio et al. 2007)에서는 내/외집단을 상위수준에서 공동 내집단으로 재범주화하고 동시에 하위범주에도 강하게 동일시할 때, 즉 이중 정체성이 존재할 때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행동이 예측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상위집단에 범주화/동일시함으로써 외집단을 (상위범주) 내집단으로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집단과는 구분되는 내집단 하위범주에 강하게 동일시함으로써 내집단의 독특성 욕구도 충족될 것으로 추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남북한과 같이 하위범주가 상위범주에 완전히 포섭되는 축소된 사회정체성 상황에서는,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가 모두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내집단 투사(내집단 상대적 전형성/불가결성 인식)가 발생하여 외집단을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내집단 투사 모형(Wenzel et al.

2007)의 주장과 일관되는 결과이며, 모순적이게도 상위범주인 한민족에 강하게 동일시하는 것이 하위범주 외집단인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적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남북한 구성원들에게 민족동일시와 국가동일시를 증진하는 것이 항상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구성원들의 사회정체성을 약화하거나 동일시를 줄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해석하면 남북한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을 민족 또는 국가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거나 상대방을 개인화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할 수도 있다(탈범주화). 외집단 구성원을 전형적인 집단 구성원이 아닌 개인으로 간주하게 하는 것은 집단 간 갈등 경감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Brewer 2007), 집단 성원으로서의 인식을 약화하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나 헌신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도 크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사회정체성을 유지 및 증진하면서도 그 역효과를 줄이고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하위범주의 상대적 중심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된 사회정체성 상황에서 개인에게 상위범주 중심성과 하위범주 중심성이 구분될 수 있으며, 구성원이 하위범주 내집단보다 상위수준의 공동범주를 더 중시한다면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호적인 남북한 간 상호인식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민족과 국가에 모두 강하게 동일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내외집단으로 구분되는 하위범주보다는 공동의 상위범주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하위범주-상위범주 중심성의 조절효과는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 인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대적 불가결성 인식에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단면에서 남북한에서 구성원들의 내집단 투사를 줄이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 간 중간 크기지만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67$ ).<sup>2)</sup> 이는 대다수의 남한사람이 두 정체성에 모두 강하게 동일시하거나 혹은 두 정체성에 모두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서 하나의 정체성(예: 한민족정체성)은 강화하고 다른 정체성(예: 남한정체성)은 약화하는 형태의 개입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남북한은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계승해왔다는 점에서도 두 정체성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 특히 현장연구를 통해서 두 정체성을 함께 증진하는 방안과, 이에 더해 한민족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범주로 여겨지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에 일관된 정책 입안, 교육과정의 운영, 그리고 사회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준거변수들은 남한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 간 협력 관계 신념으로,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에 대한 구성원들의 행동에 선행할 수 있는 외집단 인식 및 관계 신념에 해당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남북 간 협력 관계 신념 수준이 낮을수록 우호적 대북정책(지원,

---

2)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상관관계수 크기가 .80 아래라는 점에서 여전히 두 구성개념이 구분된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회귀분석에서 두 변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준거변수에 유의한 예측효과를 보였다. 이는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가 상관되지만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며, 특히 두 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는 점은 두 변수의 효과를 구분하고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협력 및 교류 정책 등)에 대해 지지적이고, 남북한 통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중국적으로 남북한 통일 지향 행동이 우세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최훈석 외 2021; Esses et al. 1998). 후속 연구에서는 이중 정체성과 상위/하위범주 중심성, 내집단 투사와 같은 사회정체성 유관 요인들이 실제 남북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예측하는지 확장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 (3) 정책적 함의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관계에서 구성원들의 사회정체성 경험은 단순히 자신을 국가나 민족에 범주화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사회정체성 동일시에 더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예를 들어 한민족은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들인지, 남북한의 성원들은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이들이 전형적인 한민족과 얼마나 유사하거나 혹은 한민족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민족과 국가정체성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내집단과 관계 맺고 있는 외집단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평가를 내리는지가 사회정체성 경험 과정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남북한 간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서 구성원들의 사회정체성 효과를 이해하는 데 종합적이고 다각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현대의 남북한 구성원들에게 다소 가상적이거나 추상적인 실체로 경험될 가능성이 높은 공동 내집단(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용적 제안이 가능하다. 먼저 교육현장 등에서 한민족이 어떤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유지되

거나 변화했는지, 남북한이 각각 한민족의 어떤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왜 한민족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함으로써 내집단 투사와 같은 역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북한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접촉 단면과 교류기회를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구성원들이 다양한 외집단 성원들과 직접 교류하고 그들의 속성을 파악하며 내/외집단에 대한 인식과 상위수준에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구성원 간 접촉이 외집단 고정관념과 편견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동 목표의 수립과 달성을 통해서 집단 간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할 때 집단 간 긍정적 접촉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갈등 관계에서 집단 간 접촉의 효과에 대한 개관은 Pettigrew 1998; Pettigrew and Tropp 2006을 참고). 남북한 관계에서도 구성원 간의 직/간접적 접촉 및 협력 경험, 그리고 이에 기반한 공동의 사회정체성 구축 과정을 통해서 집단 간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민족정체성의 구축에 더해서 고려해야 할 지점은 다문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구축이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과업 중 남북한 평화적 관계 수립만큼 중요한 것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다. 한민족공동체의 강조가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다인종/다문화 성원들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수준에서 (혹은 독립적 차원에서) 한반도 구성원들에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남북한 평화 관계 구축과 사회 통합이 긍정적 성과로서 다문화 사회로의 도약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북한에 대한 공감이 대북인식과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간은 실재성, 권위, 법적 기준, 사법 절차 혹은 성문법에 의존하기보다 증오, 사랑, 욕망, 분노, 슬픔, 기쁨, 희망, 공포, 환상을 비롯한 다른 내적 감정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기원전 106-43년)

### 가.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 (1) 고착화된 갈등의 완화와 화해에서 집단 간 독특한 감정의 역할

고착화된 갈등은 전쟁 상태의 집단 간의 강력하고, 위협적이며 고질적인 분쟁으로서 해당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물질적·심리적 투자를 요구하는 동시에 집단 간 화해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경향을 보인다(Bar-Tal 2013; Kriesberg 1993). 이와 같은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이와 유사하게 바람직한 과정과 결과를 실현하는 다른 해결 유형들과는 구분되는데, 갈등관리는 갈등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며 폭력과 여타 파괴적 갈등과 관련된 행동 및 집단 간 태도의 정도를 낮추는 데 주력한다. 반면, 갈등의 해결 및 화해는 유화 정책, 집단 간의 건설적 태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와 갈등 이후의 보상을 실현시킨다(Halperin and Tagar 2017).

갈등관리와 화해는 자주 밀접하게 연관되나 이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독특한 사회심리학적 과정을 수반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사회심리학적 구조는 해당 과정 및 결과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통일연구원이 2020년 수행한 본 과제의 3년차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정책을 더 지지하는 동시에 북한 외

집단과의 협력에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화·강혜석 외 2020). 그러므로 갈등관리 정책을 지지하는 심리적 과정이 언제나 집단 간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갈등해결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장벽으로 인식되는 갈등관리 및 화해와 연관된 사회심리학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한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연구에는 일반적인 세계관(예: 이데올로기), 사회적 신념(예: 집단에 대한 순응성), 갈등 지향적인 인지적 편향 혹은 인식(예: 제로섬 게임), 집단 간 감정 등이 망라되었다(Halperin and Bar-Tal 2011).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갈등의 가장 강력한 동인(動因) 중 하나인(Halperin 2015) 집단 간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집단 간 감정은 집단 간의 파괴적이거나 건설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고유한 과정을 평가하는 데 특히 관여한다. 여기서 감정은 행동의 동기가 된다고 정의될 수 있다(Gendolla 2017). 사회적, 정치적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 각각이며 집단 간 감정은 독특한 사회적, 개인적 반응을 결정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동기로 작용한다(Mackie and Smith 2015). 아울러 감정이 군사행동에 대한 지지, 위험 감수, 협상, 타협 등과 같이, 관련된 사안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영향이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정책 지지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를 통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축적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Halperin, Russell, Dweck et al. 2011; Maoz and McCauley 2005, 2008; Sabucedo and Vilas 2014; Rodríguez- Pérez et al. 2011).

갈등 상황에서의 감정에 대한 평가-기반 체계(Appraisal Based Framework)에 따르면(Halperin, Sharvit, and Gross 2011), 이데

올로지 및 감정적 사전 성향과 갈등과 관련한 사후 경험은 갈등과 관련한 평가를 형성하며 동시에 이들은 상호의존적으로 한 개인의 지배적인 주관적, 감정적 경험과 동기적 목표를 형성한다. 이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호 집단감정, 특히 연관된 감정적 목표 및 행동의 경향성은 특정 사회, 정치적 사건에 대한 독특한 반응을 유발한다. 집단 간 감정이 종종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상호 연관된 효과를 발휘하지만(Canetti-Nisim et al. 2008) 실제로 별개의 집단 간 감정은 집단 간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고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Mackie and Smith 2015).

고착화된 갈등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 중 상당수가 다양한 집단 간의 파괴적인 감정이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으나 갈등해결의 결과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집단 간 독특한 건설적 감정의 잠재적인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중요하다. 갈등해결의 건설적 결과를 증진하는 데 있어 특히 잠재적인 요인은 집단 간의 공감이다. 집단 간의 공감이 본질적인 도덕적 감정으로 간주되고 철학적 이론에서는 도덕적 행동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는 한편(예: Hume 1957), 다양한 실증적 맥락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예: Trommsdorff 2007; Zahn-Waxler et al. 1995) 고착화 된 집단 간 갈등 분야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개 간과되어 왔다.

교전 중인 갈등의 당사자들이 민족성, 언어, 역사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사회적, 감정적 양가성을 유발하는 한반도의 갈등 상황에서는 이들 집단 간 감정 중에서 어떤 것이 파괴적인 혹은 건설적인 집단 간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본고는 한국인들이 특정 유화적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

한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해 느끼는 공감도와 집단 간 협력 및 통일에 대한 이들의 지지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고 이와 같은 연관성의 강도가 다른 다양한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태도의 연관성을 압도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의 가설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집단 간의 파괴적인 혹은 건설적인 영향이 집단 간 갈등관리와 화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 (2) 고착화된 갈등에서 집단 간 감정의 역할

감정이 개인 수준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집단 간 감정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집단을 대표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된 바 있다 (Mackie et al., 2000). 맥키와 스미스는 집단 간 갈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집단 구성원의 정체성이 분명한 경우 사람들은 실제 집단 간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개인적 경험이 적거나 전무한 경우라도 집단의 입장 혹은 논의를 대변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Mackie and Smith 2017). 집단 간 감정 이론(Intergroup Emotion Theory: IET; Mackie et al., 2016)에 따르면 집단 간 감정은 자신이 속하고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 사회정체성 및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Tajfel and Turner 1979; Turner et al., 1987), 이 일반적 가설은 집단에 기반한 감정에 대한 최초의 이론화와 연구를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Doosje et al., 1998).

감정은 언제나 우리 생각과 행동의 중심이지만 사람들이 다양한 실존적 혹은 상징적 위협을 경험하는 지속적인 집단 간 갈등의 맥락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포, 분노,

증오와 같은 감정은 갈등관리, 갈등해결, 화해 등 모든 단계의 집단 간 갈등과 관련한 정책의 대중적 지지를 형성한다. 개인적 수준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집단 간 감정 역시 적과 접촉하려는 동기나 갈등과 관련한 집단행동 등과 같은 대중들의 개인적 행동경향에 영향을 미친다(Johnston and Glasford 2018). 이와 같은 다양한 갈등과 관련한 분야를 망라하는 감정의 영향력은 정치 이데올로기, 사회경제적 지위, 갈등에 관한 경험 등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예측인자를 고려한 이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Sabucedo and Vilas 2014; Rodríguez-Pérez et al. 2011).

집단에 기반한 감정은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태도(Hewstone et al. 2002; Stephan and Stephan 1985)로 이어지며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를 추동하는 한편, 집단 구성원에 기반한 편향을 유도한다(Cole et al. 2013). 집단 간 감정이 집단 간 공격성 혹은 화해에 미치는 영향은 이데올로기와 같은 여타 주요 요인(Halperin, Russell, Dweck et al. 2011; Maoz and McCauley 2008)과 사회경제적 조건(Maoz and McCauley 2008)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갈등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증오나 공포와 같은 집단 간 감정은 집단 간 적대감 및 공격성의 가장 강력한 예측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박주화·강혜석 외 2020). 이들의 유효성에 기반한 집단 간 감정들을 구별하는 것은 집단 간 감정의 맥락 속에서는 생산적이지 못한 분류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논평: Cohen-Chen et al. 2020) 이는 본고의 목적에 따라 필자는 집단 간 감정의 두 범주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집단적인 건설적 감정은 본질적·사회적으로 건설적이고 친사회적인 감정을, 집단적인 파괴적 감정은 파괴적인 사회적 결과와 반사회적 행동(혹은 회피)과 연관된 감정을 각각 지칭한다.

### (3) 집단에 기반한 파괴적 감정

합자들은 집단 간 감정을 집단 간 갈등 상황, 특히 지속되는 폭력적이고 고착화된 갈등에 적용함으로써 집단에 기반한 어떤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외집단을 향한 어떤 종류의 공격성을 유발하는지를 파악하려 했다(Pittinsky and Montoya 2016).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의 집단 간 감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집단 간 파괴적 감정에 집중했다(Rosler et al. 2017).

다양한 이론과 실증적 조사에서(예: Maoz and McCauley 2005; Halperin 2014) 집단 간 파괴적 감정이 사회와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힘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들 연구를 통해 갈등 지향적인 집단에 기반한 감정이 갈등의 핵심적 측면과 해결 가능성에 미치는 극적인 영향력이 파악되었다(Cole et al. 2013). 집단에 기반한 파괴적 감정이 종종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동시에 상호 맞물린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지만(Canetti-Nisim et al. 2008) 집단에 기반한 별개의 감정이 집단 간 태도와 행동에 서로 다른 고유한 영향을 유발한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특정 집단 간 감정이 특정 집단 간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광범위한 증거가 제시되었다(Yzerbyt and Kuppens 2013; Mackie and Smith 2015).

독특한 집단 간 감정은 고착화 된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독특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게 해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일반적인 그리고 특정 사건에 대한 집단 간 분노의 경험은 여타 감정과 비교했을 때 통상 접근, 대치, 공격성의 가능성을 높였고 집단 간 공포는 여타 감정과 비교했을 때 회피와 철회의 가능성을 높였으며 집단 간 증오는 여타 감정과 비교했을 때 상대를 절멸시키려는 동기와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Cohen-Chen,

Halperin, Porat et al. 2014; Halperin, Russell, Dweck et al. 2011; Iyer and Leach 2008; Nadler and Liviatan 2006; Parkinson et al. 2005). 따라서 집단 간 감정에 대한 연구는 예측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집단 간 감정에 대한 대부분의 실험 연구는 연구 초기단계에서 행동할 용의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집단 간 갈등의 맥락에서의 집단 간 실제적 행동으로 확장되었다(Van Zomeren, Postmes et al. 2008; Van Zomeren, Spears et al. 2008).

#### (4) 집단 간 건설적 감정

집단 간 건설적 혹은 파괴적 감정이 제로섬 게임이나 서로의 거울상이 아니라 독특한 과정에 따라 작용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Dijker et al. 1996). 감정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동기에 관여하므로 집단에 기반한 특정 건설적 감정이 집단 간 협력이나 집단 간 통일과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결과를 확정하는 데 있어 파괴적 감정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바로우 외(Barlow et al. 2019)에 따르면, 집단 간 분쟁 확대는 낮은 수준의 호의보다는 높은 수준의 분노와 연관성을 보이는 반면, 긍정적 접촉은 낮은 수준의 분노보다는 높은 수준의 호의와 연관성을 보인다.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의 영향은 집단 간 파괴적 감정 혹은 공포, 테러, 불안 등과 같은 위협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의 감정이 미치는 영향과 분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와 같은 감정은 대개 시야를 좁히고 집중도를 높여 다양한 선택지 중 생존에 가장 유리한 한두 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며 이때의 자동적인 반응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한 편협한 시각이나 선택지의 축소는

필요하지 않다(Pittinsky and Montoya 2016). 이때는 건설적인 감정이 보다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야를 제한하는 대신 감정을 통해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넓어진 시야는 우리가 놀고 배우면서 일생 동안 사용할 지속적인 지식과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자원은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심지어 정신적인 성격일 수 있으나, 자원의 본질과 관계없이 우리는 시야의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이들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건설적인 감정은 집단 간 연결고리 수립에 특히 중요하며(Fredrickson and Branigan 2005) 이들이 지원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자원(예: 우정)을 건설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행동의 강력한 예측인자라 할 수 있다(Tam et al. 2008). 건설적인 감정은 현재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넓혀주며 그 결과 개방성과 낙관론을 증진시켜 주는데(Fredrickson et al. 2003) 이는 유화적인 정책의 지지에 대한 공고하게 확립된 예측인자이다(Halperin and Bar-Tal 2011). 예를 들어, 집단 내 긍정적 감정이 확산되면 협력 증가, 갈등 감소, 과업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증대와 같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진다(Barsade 2002). 팀원 전체의 행복감은 팀원 개인의 과업수행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킨다(Totterdell 2000). 반면 일부 연구자는 집단 감정의 파괴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바르세이드는 비현실적인 낙관의 확산과 같은 긍정적 집단감정의 잠재적인 파괴적 효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Barsade 2002), 이는 집단사고와 집단적 합의에 대한 압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산-아슬리흐 외는 희망이 실제로는 소외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Hasan-Aslih, Pliskin et al. 2019).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의 유용한 효과를 처음으로 인지한 학자 중 한 명인 페티그루 외(Pettigrew 1998; Pettigrew and Tropp 2006)는 긍정적인 우정의 감정이 증가하고 외집단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는 것은 집단 간 접촉에 의한 편견이 감소하는 것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밀러, 스미스, 매키는 백인 대학생들과 흑인들 사이의 접촉이 편견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흑인에 대한 백인 대학생들의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Miller et al. 2004). 또한 하스 외는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애정이 접촉에 대한 개방성의 강력한 예측인자라는 사실을 규명했는데(Harth et al. 2008)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 내 인종 집단 간 관계에 대한 바로우 외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Barlow et al. 2019).

긍정적 감정은 긍정적 경험을 상기시킨다(Bower 1981). 긍정적 감정을 가진 개인은 사교적인 활동이나 교류를 가지려는 경향을 보이며(Clark and Watson 1988) 타인을 돕고(Isen et al. 1976) 친사회적 행동을 하며(George and Brief 1992) 더 많이 양보하고(Hollingshead and Carnevale 1990) 보다 호의적인 협상전술을 사용하면서 타인과 협력한다(Carnevale and Isen 1986).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 간 파괴적 감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은 서로 다른 집단 간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진다.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고 난 후에는 타인에 접근하거나 가까워지려는 경향을 보인다(예: Frijda 1986; Lazarus 1991). 신뢰는 광범위하게는 불완전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긍정적 편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Yamagishi and Yamagishi 1994)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밀러 외는 집단 간 접촉이 주로 외집단을 향한 특정한 종류의 집단 간 감정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냈으며(Miller et al. 2004) 내집단이 외집단을 용인하고 좋아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은 외집단에 대한 분노, 짜증, 불안과 같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호의, 자부심과 같은 올바른 감정이며 오직 이와 같은 감정을 유발하는 접촉만이 앞서 언급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집단 간 고착화 된 갈등(예: 교전국 간의 갈등)의 영역에서 집단 간 건설적 감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감, 희망, 신뢰 등과 같은 복잡한 감정구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집단 간 공감과 같은 기본적인 친사회적 감정은 편견과 다양성의 맥락에서 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보키(Voci 2006)에 따르면, 집단 간 건설적 혹은 파괴적 결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다. 건설적이고 파괴적인 인식과 행동은 서로 다른 특정 예측인자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갈등과 같이 두 집단이 동일한 민족성, 언어, 역사를 공유하며 양가적인 집단 간 태도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박주화·강혜석 외 2020).

서로 다른 감정은 서로 다른 집단 간 결과를 초래하므로 집단 간의 독특한 건설적 감정의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고 확장하는 것은 중요하다.<sup>3)</sup> 더구나 전통적인 감정 유형 분류체계에서는 대체로 빠져 있었던 희망, 감정이입, 신뢰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어 희망은 대개 욕구와 평가의 결합으로 묘사되는 반면, 감정이입은 관점을 취하고 감정적인 상태를 공유하는 것으로 묘사된다(Black and Barnes 2020).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일차적’ 감정에 비해 보다 정교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들이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감정 상태나 정서와는 다르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

3) 이후의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나 이 중요한 사안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일부 사회학자들은 이와 같은 다면적인 감정구조 평가에서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방법론적 우려를 제기한다(Mackie and Smith 2015). (다음 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 (5) 집단 간 공감

‘함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sym-’ 과 ‘느낌’ 혹은 ‘감정’을 의미하는 ‘-pathos’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sympathy(공감)’는 다른 사람에게 의해 감동을 받거나 혹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감정적 경험으로서 대개 타인의 고난을 인정할 때 생성된다(Myers and Hodges 2008). 공감은 타인의 고난에 대한 의식, 그리고 해당 고난을 감소시키려는 동기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Lazarus 1991) 종종 본질적인 도덕적 감정으로 인식된다(예: Hume 1957; Trommsdorff et al. 2007).

집단 간 공감은 종종 집단 간 감정이입과 연관되고 자주 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감정이입에 대한 연구는 고착화된 집단 간 갈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두 구조 사이에는 몇몇 본질적으로 독특한 특징이 존재한다. 집단 간 관계의 맥락에서 집단 간 감정이입은 종종 인지적인 것으로 외집단의 시각을 인식하는 능력(인지적 감정이입)이고, 동시에 감정적이어서 타인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감정적 감정이입)으로 지칭된다. 그 이유는 이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이들 감정이 관점을 취하는 인지적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유발되기 때문이다(Duan and Hill 1996; Finlay and Stephan 2000; Shechtman and Basheer 2005).

반면 공감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거나 당사자의 감정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대신 자신의 관점에서 타인의 고난을 인지하거나 그들의 감정적 유효성을 공유한다(Brown 2013).

따라서 감정이입과 대비되는 집단 간 공감에는 인지적(예: 관점을 취하는 것), 감정적(예: 타인의 느낌을 경험하고 동일시하는 것), 사회적(예: 집단 간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 노력이 적게 요구되며 따라서 집단 간 고착화된 갈등의 맥락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요컨대 감정이입이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적 상태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것(‘타인과 동일한 느낌’)을 지칭하는 반면, 공감은 타인의 고난을 인식하고 ‘타인을 위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한다(Black and Barnes 2020). 마지막으로 본 과제의 3년차 연구에 따르면(박주화·강혜석 외 2020), 공감은 감정이입에 비해 북한에 대한 협력적 태도와 통일지향성과의 상관성이 더 높았다(〈표 III-7〉).

〈표 III-7〉 2020년 측정변수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Mean	SD	1	2	3	4
1. 집단간 공감	3.4	.91	—			
2. 집단간 감정이입	3.3	1.22	.56**	—		
3. 북한과의 협력	5.8	2.3	.38**	.29**	—	
4. 한반도 통일	4.5	1.4	.3**	.18**	.43**	—

주: \*  $p < .05$ , \*\*  $p < .01$ .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다(Eisenberg et al. 2010). 대인관계의 수준에서 공감은 타인의 불행에 대한 지배적인 반응인 것으로 파악되는데(Weiner 1995), 타인의 고난에 집중함으로써 친사회적인 지원 활동에 동기를 부여한다(Batson et al. 2003). 집단 간 수준에서 죄의식, 희망 그리고 여타 집단 간 건설적 감정과 대비되는 공감은 외집단의 고난을 인지하는 데 기반한다. 아이어 외(Iyer et al. 2003)는 흑인들에게 공감을 보이는 백인들이 소외된 소수민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차별철폐 정책을 더 많이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양한 맥락(백인/흑인, 독일계/이민자, 부유층 학생/소외계층 학생)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하스 외(Harth et al, 2008)는 학생들이 자신의 외집단에 느끼는 공감(그러나 죄의식 혹은 자부심과 같은 모델에 포함된 여타 집단에 기반한 건설적 감정은 무관함)이 외집단에 보다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지지하도록 하며 내집단에 대한 편파적 이익에 반대하는 한편, 다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연구를 통해 공감이 지원과 동등한 기회를 지원에 일관된 역할을 수행하며 집단 간 건설적인 행동 촉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집단 간 공감이 집단 간 긴장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으나 집단 간 공감의 영향은 지속적인 집단 간의 고착화된 갈등의 맥락, 특히 한반도 갈등의 맥락에서 이처럼 광범위하게 연구된 적은 없었다. 여타 집단 간의 맥락에서 발견된 사실과 갈등 상황에의 감정에 대한 평가-기반 체계에서 도출된 내용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간 감정은 서로 다른 감정에 특별한 특정 행동 경향을 보인다. 둘째, 공감이 타인의 고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친사회적 감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단 간 공감은 다양한 이념적, 사회적, 갈등 지향적 신념과 그리 강하지 않은 친사회적 동기에 비해 집단 간 협력과 통일 같은 특정 집단 사이의 유화적 행동과 가장 강력한 연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 (6) 연구 목적

현행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갈등해소의 지지에 대하여 집단 간 공감

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집단 간 감정은 집단 간 독특한 정책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가장 강력한 감정적 동기로 추정되며, 과거(고착화되지 않은 맥락에서) 집단 간 건설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필자는 (1) 집단 간 공감이 여타 다양한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태도에 비해 집단 간 협력과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지지와 가장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 (2) 집단 간 공감이 이와 같은 집단 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에 기반한 파괴적인 감정을 포함하여 집단 간 갈등의 해소를 가로막는 여러 사회심리학적 장벽을 완전히 초월할 것으로 가정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미연합훈련의 시작으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2021년 5월에 한국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 나. 구성개념 및 측정 문항

이번 분석은 여성 611명, 남성 612명(Mage=44, SDage=13) 등 1,223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고유한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데이터 세트는 통일연구원이 2021년 5월말 한반도 갈등과 관련한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연례 메타분석의 일환으로 수집되었다. 필자는 우선 통제변수(공감이 이들 구조를 초월하는 중요성을 여전히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집단 간 공감의 잠재적 선례로 작용한 관련 이념적, 사회적 측정치에 대해 보고하고 이어 참가자들의 집단 간 공감 평가에 사용된 문항과 추가 통제변수로 사용된 여타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 간 공감의 측정치 등이 포함된 집단 간 감정 측정치를 묘사하였다. 끝으로 필자가 가정한 결과 측정치를 다루었다.

## (1) 통제 및 선행 변수

집단 간 공감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적 태도를 초월하여 집단 간 협력 및 통일과 강하고 긍정적인 연관관계를 보이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에 더하여 본 분석을 통해 이들 통제변수가 집단 간 공감의 잠재적 선례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했다. 집단 간 감정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에 기인하고 이데올로기와 맥락 내의 사회적 신념에 의해 형성되므로 필자는 집단 간 공감이 국가적 정체성에 비해 한국인들의 민족적 정체성, 보수에 비해 진보적 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통일 문제는 경제적 문제와 강력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바 중요한 갈등지향적 신념인 한국경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보다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인터넷 설문을 작성하도록 했으며 인구통계학적 평가지표에는 참가자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1~7점 문항 1개 ( $M_{political}=4.24$ ,  $SD_{political}=1.05$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1~7점 문항 4개 ( $MSKID=6.16$ ,  $SDSKID=1.5$ ,  $\alpha=.9$ ), 북한 주민과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1~7점 문항 3개 ( $METBL=5.66$ ,  $SDETBL=1.5$ ,  $\alpha=.84$ ), 한국경제 만족도에 대한 1~4점 문항 1개 ( $MEcos=2$ ,  $SDEcos=.71$ )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정체성 측정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인으로서의 국가적 정체성에 참가자가 생각하는 북한 주민과의 동질감을 뺀으로써 정체성 격차 변수를 생성했다 ( $Midgap=1.6$ ,  $SDidgap=1.3$ ).

## (2) 집단 간 감정

참가자들의 집단 간 공감을 측정하고 그것이 여타 집단 간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11개 문항에 걸쳐

북한 주민이라는 외집단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분노, 증오, 공포, 행복, 기쁨, 인정, 슬픔, 감동, 친밀함, 초조, 격분 등 다양한 느낌의 강도를(1~6점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했다. 이들 감정 중 3개는 필자의 집단 간 공감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공감의 동의어(인정, 감동, 친밀)이며 높은 신뢰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Msympathy=3.16, SDsympathy=.68,  $\alpha$ =.74).

### (3) 관여정책

끝으로 참가자는 북한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그들의 지지도를 1~10점 사이에서 평가했고(Mcooperate=5.68, SDcooperate=2.33) 남북한 국민이 통일을 통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을 1~5점 사이에서 평가했다(Munite=3.2, SDunite=.95).

## 다. 분석

### (1) 분석전략

집단 간 공감과 집단 간 행동적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필자는 3단계 분석 방법을 설계했다. 첫째, 집단에 기반한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갈등 관련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것이다. 이는 이들 변수들 중 어떤 것이 본고의 결과와 가장 강력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고 집단 간 공감의 가능한 선례들의 주요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중다회귀분석으로 본고의 결과에 대한 집단 간 공감의 고유한 기여도와 집단에 기반한 다양한 감정 및 태도에 대한 통제 정도를 분석한다. 아울러 어떤 선행변수가 집단 간 공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잠재적인 선례가 집단 간



공감과 관련된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SEM 경로분석 통해 본고의 다양한 집단 간 유화적 결과를 예측하는 동시에 이것을 대안적 모델과 비교한다.

## (2) 상관분석

상관분석을 통해 필자가 가정한 변수들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결과와 집단 간 파괴적 감정에 대한 공감과의 연관성을 비교하기 위해 분석에는 집단 간 중요가 포함되었다.<sup>4)</sup> <표 III-8>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집단 간 공감은 다양한 감정적, 이념적, 사회적 변수와 비교했을 때 집단 간 협력 및 통일과 가장 강력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더 나아가 추가 상관 분석을 통해 공감 및 협력과 통일 간의 상관관계가 계측된 집단 간 감정과 다양한 사회적, 인지적 신념의 상관관계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표 III-9>). 아울러 분석을 통해 공감과 필자가 가정한 선례와의 중요한 상관관계가 밝혀졌다. 진보적인 정치적 관점을 가진 참가자는 보수적인 참가자들에 비해 한국경제에 보다 만족하며 국가적 정체성보다 민족적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공감의 수준 역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예측한 것과 같이 이들 변수는 모두 집단 간 중요와 대비되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것은 과거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

4) 중요는 집단 간 파괴적 감정 중 결과변수와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과거 한반도 갈등에서의 공격적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감정적 예측인자라는 것이 규명되었다.

〈표 III-8〉 측정된 변수 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1	2	3	4	5	6	7	평균	표준편차
1. 집단 간 공감	—							3.17	.68
2. 집단 간 증오	-.12**							3.01	1.05
3. (국가-민족) 정체성 편차	-.31**	.12**	—					1.6	1.33
4. 경제에 대한 만족도	.16**	-.18**	.07*	—				2	.69
5. 정치 이데올로기	.2**	-.25**	.11*	.22**	—			4.26	1.02
6. 북한과의 협력	.36**	-.28**	.14**	.18**	.3**	—		5.73	2.24
7. 한반도 통일	.35**	-.21**	.15**	.19**	.2**	.37**	—	3.2	.95

주: \*  $p < .05$ , \*\*  $p < .01$ .

〈표 III-9〉 집단 간 감정, 믿음 이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집단 간 공감	—										
2. 집단 간 증오	-.12**	—									
3. 집단 간 공포	.03	.47**	—								
4. 집단 간 분노	-.17**	.81**	.47**	—							
5. 집단 간 행복	.67**	-.08**	.04	-.15**	—						
6. 집단본질에 대한 믿음	-.09**	.11**	.08**	.1**	-.1**	—					
7. 민족정체성	.26**	.01	.04	.01	.19**	.07**	—				
8. 국가정체성	.14**	.04	.08*	.07*	.02	.14**	.65**	—			
9. 이념	.25**	-.26**	-.11**	-.27*	.18**	.05	.07**	.01	—		
10. 북한과의 협력	.35**	-.28**	-.13**	-.3**	.28**	-.02	.23**	.16**	.3	—	
11. 한반도 통일	.36**	-.21**	-.16**	-.27**	.3**	.02	.31**	.25**	.2	.45	—

주: \*  $p < .05$ , \*\*  $p < .01$ .

### (3) 회귀분석

집단 간 공감과 유화적 정책 간의 연관성이 여타 감정의 영향력을 초월하는지, 아울러 이데올로기, 사회적 정체성, 국가 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같은 유화정책의 강력한 예측인자를 초월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따로 분석된 집단 간 협력과 통일을 결과변수로, 집단 간 공감을 포함한 열거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두 차례 수행했다.

〈표 III-10〉와 〈표 III-1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번 분석을 통해 공감이 증가하면 북한 주민 외집단과의 협력에 대한 지지( $b=.29$ ,  $SE=.09$ ,  $t=10.83$ ,  $p<.001$ )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염원( $b=.30$ ,  $SE=.04$ ,  $t=10.5$ ,  $p<.001$ )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 간 공감이 집단 간 협력 및 통일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변수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실질적이고 독보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표 III-10〉 협력적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협력적 태도		
	<i>b</i>	<i>SE<sub>b</sub></i>	<i>t</i>
집단 간 공감	.29	.09	10.83***
집단 간 증오	-.19	.06	-7.25***
국가-민족 정체성 편차	-.001	.05	-0.04
국가경제에 대한 만족도	.06	.08	2.15*
이념	.19	.06	7.02***

주: \*  $p<.05$ , \*\*  $p<.01$ , \*\*\*  $p<.001$ .

5) 앞서 언급된 변수들에 더하여 잔여 집단 간 감정과 다양한 추가 분쟁 및 집단 관련 태도(SDO, RWA, 여타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를 포함한 추가 회귀분석을 통해 집단 간 공감이 포함되면 이들 변수 중 결과변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Ⅲ-11〉 통일지향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통일지향성		
	<i>b</i>	<i>SE<sub>b</sub></i>	<i>t</i>
집단 간 공감	.3	.04	10.51***
집단 간 증오	-.14	.03	-5.13***
(국가-민족) 정체성 편차	-.02	.02	-.85
국가경제에 대한 만족도	.1	.04	3.56*
이념	.08	.03	2.88***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끝으로 세 번째 중다회귀분석은 참가자의 정치 이념( $b = .09$ ,  $SE = .02$ ,  $t = 5.02$ ,  $\beta = .14$ ,  $p < .001$ ), 국가경제에 대한 만족도( $b = .11$ ,  $SE = .03$ ,  $t = 4.03$ ,  $\beta = .11$ ,  $p < .001$ ), 국가-민족 정체성 편차( $b = -.15$ ,  $SE = .01$ ,  $t = -10.74$ ,  $\beta = -.29$ ,  $p < .001$ ) 등이 집단 간 공감의 중요한 예측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필자의 가정과도 부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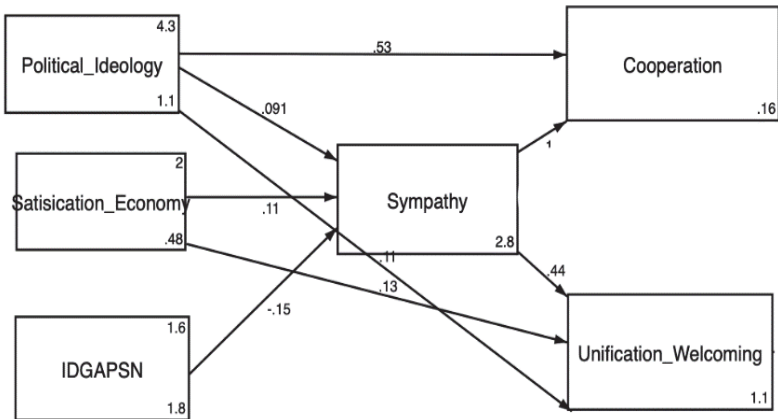
#### (4) SEM 경로 분석

마지막으로 STATA 16.1(2020)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최대 가능도 매개변수 추정을 통한 SEM(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필자의 가정모델 전반에 대하여 실시했다(Kline 2015). 현행 연구의 초점은 집단 간 공감이 집단 간 유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된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집단 간 유화정책에 대한 집단 간 공감의 압도적인 영향력과 잠재적 선례를 탐구하는 데 맞춰졌다. 그러나 필자의 선례가 집단 간 공감을 훌륭하게 예측하고 필자의 결과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며 집단 간 공감이 집단 간 협력 및 통일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개별적으로 입증된 이후에는 STATA 16.1(2020)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최대 가능도 매개변수 추정을 통한 SEM(구조방

정식 모델링) 분석을 가정보델 전반에 대하여 실시했다(Kline 2015). 경로분석 모델에서는 참가자의 정치 이데올로기, 정체성 편차, 경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집단 간 공감을 매개변수로, 그리고 집단 간 협력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결과변수로 각각 정의했다.

〈그림 III-12〉에서와 같이 보수와 대비되는 진보적 참가자들은 높은 수준의 집단 간 공감을 보였고 북한 주민 외집단과의 협력에 보다 많은 지지를 보냈으며 한반도의 통일을 더 강력하게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국가경제 수준에 만족했고 높은 수준의 집단 간 공감을 보였으며 이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높은 염원으로 이어졌다. 한국인 민족 집단이 아니라 북한 주민 외집단과 강렬한 정체성을 보인 참가자들 또한 높은 수준의 집단 간 공감을 보여주었다. 강한 집단 간 공감은 집단 간 협력에 대한 높은 지지와 통일에 대한 강력한 염원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필자의 가설을 증명하였으며 완료된 모델은 데이터와도 높은 일치하였다,  $\chi^2(3)=10.31$ ,  $p=n.s.$ , CFI > .99, RMSEA < .04, TLI > .95.

〈그림 III-12〉 구조 방정식 모델의 결과



끝으로 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확정하기 위해 필자의 모델과 세 개의 대안적 모델을 비교했는데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론적 근거가 있다. 이 네 모델에 대한 적합도 결과는 <표 III-12>에 요약되어 있다. 첫 번째 대안적 모델은 매개경로가 생략되고 직접경로만이 특정된 ‘직접 모델’로 집단 간 공감의 외생변수로 전환 되었다. 두 번째 대안적 모델에서는 집단 간 공감과 집단 간 협력에 대한 지지 및 통일에 대한 염원 사이의 인과적 방향을 역전시켰으며 그 결과 집단 간 협력과 통일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외집단에 대해 더 동정적이라는 사실을 제시했다. 마지막 대안적 모델에서 필자는 집단 간 공감을 집단 간 증오로 대체했다. <표 III-12>에서 볼 수 있듯 가설-검증 모델의 모든 적합도는 대안적 모델의 적합도에 비해 더 좋았다. 검증된 모델과 세 개의 대안적 모델에 대한 교차분석 변이(chi-square difference) 비교에서는  $p < .001$ 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안적 모델 중 2개(즉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원래 모델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적합도 측정, 즉 AIC 및 BIC를 실시했다. 이는 동일한 변수 세트를 포함하지만 포함관계에 있지 않은 모델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AIC와 BIC는 모든 대안적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가정모델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필자의 모델이 여타 모델들에 비해 데이터에 더 잘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II-12> 대안적 모델: 적합도 지수 및 모델 간 비교

	$\chi^2$	df	CFI	TLI	RMSEA	AIC	BIC
검증된 모델	10.31	2	.99	.96	.04	20854.44	20931.07
대안적 모델 1	19.1**	2	.97	.83	.08	20865.24	20946.98
대안적 모델 2	41.49**	3	.94	.78	.1	20885.62	20962.25
대안적 모델 3	30.84**	3	.94	.79		22134.95	22211.59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 라. 논의

고착화된 갈등의 해결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들과 심리 상담사들의 궁극적 목적은 집단 간 갈등에 따른 분쟁 확대 및 해결에 가장 강력한 사회심리학적 예측인자를 파악하는 것과 이후 조정하는 것이다. 감정이 본질상 행위 지향적인 동기를 포괄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집단 간 감정이 갈등해결에 우호적인 다양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사회적, 인지적, 맥락적 사회심리학적 태도를 압도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고착화 된 집단 간 갈등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의 대다수는 갈등관리의 결과(예: 증오가 집단 간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갈등 화해에 있어서 건설적이고 친사회적인 집단 간 감정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고착화된 갈등 맥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것과 같은 특정 인지적 노력을 요하는 집단 간 감정이입과 같은 복잡한 인지적/감정적 구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반해 가장 본질적인 친사회적 감정으로 추정되는 집단 간 공감이 고착화된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수행하는 영향은 지금까지 대개 간과되어 왔다.

집단 간 감정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사실(사람들은 사회 집단에 대해 모순되고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 간 감정이 서로 상응하는 동기에 따라 집단 간 독특한 행동적 태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두 가지 사실을 감안할 때 교전 중인 집단의 구성원이 표면적으로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갈등의 관리 및 화해 정책을 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요컨대 구성원은 동일 외집단에 대해 공포와 감정이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공격적인 군사정책과 평화협약을 동시에 강하게 지지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 간 파괴적 감정이 갈등관리 및

완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보완작업으로 독특한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이 특히 고착화된 집단 간 갈등의 맥락에서 집단 간 화해를 활성화시키는 기제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행 연구는 빈번하게 간과되었던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의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수행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확장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 간 파괴적 감정이 집단 간 폭력 및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들이 고착화된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이 유화적 정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들이 집단 간 화해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현행 연구를 통해 고착화된 집단 간 화해에 있어 집단 간 공감의 잠재적 역할이 확립되었다. 집단 간 공감은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 외집단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집단 간 공감이 집단 간 화해에 미치는 영향은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이념적, 맥락적 태도를 초월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마도 집단 간 공감이 집단 간 증오를 초월하는 집단 간 협력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이며 각 감정이 고유한 해소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독특한 동기기제를 보여준다는 사실일 것이다.

현행 연구가 집단 간 공감이 집단 간 갈등 및 화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확증해줄 후행 연구가 요구된다. 필자의 분석은 관찰에 따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어 필자의 가설에 대한 인과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 따라서 실험적 설계를 통해 집단 간 공감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갈등의 양 당사자는 민족성, 언어, 역사



등과 같은 다양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감과 같은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끝으로 집단 간 공감이 집단 간 화해의 가장 강력한 결정인자라고 가정한다면 잠재적인 선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고착화된 갈등 맥락에서 집단 간 공감을 촉진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 IV. 국내 차원 요인의 메커니즘 : 통일태도 및 사회적 규범 지각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 1. 연구 배경 및 연구 문제

남북통일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더불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남북관계의 변화 및 국제 정세,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따라 변화해왔다. 최근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국민들의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크게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나, 2021년 4월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이상신 외 2021). KBS에서 실시한 2021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최근 3년 중 올해 통일필요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KBS 남북교류협력단 2021.8.14.). 2018~2021년 동안의 국내외 남북 관련 주요 사건들과 연결시켜 보면, 2018년 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9년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북미 간, 남북 간 관계에서 다시 긍정적인 기대를 일으키면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및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대다수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에 대한 태도를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통일에 얼마나 찬성하십니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개개인이 구성한 인지적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으로서의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에 큰 한계가 있다. 즉, 개인이 떠올리는 남북통일의 형태 및 방식에

대한 지각, 통일로 인해 기대하는 긍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한 개인의 평가 및 통일의 당위성 지각 등 통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없으며, 통일에 대한 양가적 경험 등 태도를 구성하는 복잡한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인지적, 정서적 하위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속성을 지니며(Eagly and Chaiken 1993), 따라서 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태도의 복잡한 구조 및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박주화·최훈석 외(2020)는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통일태도의 측정 방법을 비판적으로 개관한 후, 태도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을 바탕으로 통일태도의 구성요소들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Unification of Korea: ATU-K) 척도를 개발하였다. ATU-K 척도는 통일을 ‘남북한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ATU-K 척도는 통일태도와 관련된 개인차 변수들(예: 정치적 가치, 사회적 지배성향, 정치성향)과 개념적으로 변별되면서, 기존에 사용되어 온 통일태도 측정 방법과 비교해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 통일지향 행동의도를 더 강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통일태도를 다룬 일부 선행연구들은 통일태도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하기보다는 독립적인 두 준거변수로서 개인차 변수가 통일태도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각각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구본상 2020; 남희은 외 2014; 이내영 2014; 이준웅 2004). 그러나 ATU-K 통일태도는 통일의 결과로서 발생할 사건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정서적 반응들로 구성된 비교

적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책이 적용되는 장면이나 범위, 정책의 내용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반영하는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기존에 지닌 통일태도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및 지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최훈석 외(2021)의 연구에서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정적으로,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태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결과를 보여, 대북정책의 내용에 따라 통일태도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TU-K 통일태도가 대북정책 지지를 예측하는지 재검증하는 동시에, 기존에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과 같은 개인차 변수들과 비교하여 ATU-K 통일태도가 더 강력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측정 도구로서 ATU-K 척도의 유용성 및 예측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이 대북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대다수의 통일의식조사들은 개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남북통일과 같은 현상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현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규범 지각 또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 더해 개인이 지각하는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그에 더불어, 한국인들의 ‘실제’ 통일태도와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태도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인 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가. ATU-K 통일태도

박주화·최훈석 외(2020)가 개발한 통일에 대한 태도(ATU-K) 척도는 타당화 과정을 통해 개발된 최초의 통일태도 척도로, 남북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ATU-K 척도의 인지 차원은 남북통일을 지지/반대하는 이유를 묻은 선행연구(김학재 외 2020; Lee and Lee 2019)를 참고로 하여, 남북통일이 야기할 결과를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1) 각각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기대)과 2) 각각의 결과를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정도(가치)를 측정하였다. 앞서 거론하였듯이 통일을 지지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일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만을 묻는 것은 통일태도의 복잡한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국내에서 통일에 대한 담론은 대표적으로 통일편익담론, 민족주의담론, 보편가치담론으로 구분되는데, 통일편익담론은 통일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 민족주의담론은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 보편가치담론은 통일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이석희·강정인 2017). ATU-K 척도에 반영된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측면은 세 가지의 통일담론(통일편익담론, 민족주의담론, 보편가치담론)과 각각 관련성이 높은 차원으로, 개인이 통일을 지지하는 주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전체 국민들 및 특정 집단들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통일담론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대 집단별로 우세하게 나타나는 통일담론을 비교할 수 있으며, 정치성향 등 개인차 변수와 통일담론 간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 예를 들어, 청년 세대의 경우 남북 분단을 직간

접적으로 경험한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의 당위성을 약하게 지각하며, 민족적 정체성 및 감정의 문제가 아닌 이해득실의 문제로 통일의 필요성을 평가한다(권영승·이수정 2011). 이처럼 통일로 인해 기대하는 결과를 평가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세대 및 사회집단 간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다를 수 있다.

한편, 태도를 구성하는 주요 하위 차원인 정서 경험은 통일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인식에 비해 통일태도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태도의 인지적 요인은 태도 대상에 관해 개인이 지닌 다양한 신념들과 지식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 및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험에 따라 새로운 신념을 추가하거나 기존 신념의 일부가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되는 등 변화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상에 대한 정서적 경험은 보다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한 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Edwards 1990; Eagly and Chaiken 1993). 예를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통일 과정에 소요될 비용보다 통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높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통일에 대한 인지적 평가는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통일을 떠올리면 공포스러운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통일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온다는 신념은 공포 정서의 경험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태도의 정서적 요소는 인지적 요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하위요소를 민감하게 측정하는 것은 복잡한 통일태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나. ATU-K 통일태도와 대북정책 지지의 관계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와 함께 통일의 식조사 및 통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변수이다(김학재 외 2020; 이상신 외 2021; KBS 남북교류협력단 2021.8.14.). 북한에 대한 인식(태도) 및 통일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개개인의 마음속에 형성되는 개인 수준의 심리적 구성개념인 반면, 대북·통일 정책은 정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가 수준의 개념으로, 국민 개개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심리적 거리감이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제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며,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할 때 추진력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이해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선행연구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유형은 정책의 쟁점을 경제, 안보, 사회 등의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대북제재 등 세분화된 정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북한에 대한 반응 및 관계 구축에서의 긍정성/부정성 차원을 구분한 ‘유화’ 대 ‘강경’ 정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마지막으로 과거에 시행되었던 특정 대북 교류 사업 및 정책(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구본상 2020; 김학재 외 2020; 최훈석 외 2021; 이상신 외 2021; KBS 남북교류협력단 2021.8.14.). 두 번째 유형에서

구분하는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 등의 차원들은 일반적으로 ‘유화’ 정책으로 구분되고, 대북제재와 같은 차원은 ‘강경’ 정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기도 한다.

대규모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측정 방식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가 반영하는 의미는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또는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가장 간명한 측정 방식이지만, 정부에서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 이외에도 현 정부에 대한 태도가 강하게 혼입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경우 이 응답값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보다는 정부에 대한 태도에 더 가까울 수 있다. 한편, 대북정책을 세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세분화된 하위차원에 대한 개인 선호가 다를 수 있고,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권수현 2017).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 및 태도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민감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하위 차원 및 주요 쟁점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차원의 정책에 대한 태도와 이를 예측하는 요인들의 관계를 직접 검증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반복적 검증을 통해 대북정책의 하위 차원들의 예측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화’ 대 ‘강경’ 정책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식은 두 번째 방식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를 민감하게 잡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비교적 간명한 방식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태도와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는 서로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강경정책이 어느 정도의 무력제재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과 남북 간 갈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북 유화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강경정책에 찬성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두 유형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는 일직선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의 태도라기보다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비교적 독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협력’에 대한 선호와 ‘무력 사용’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독립적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관된다(박주화 외 2018). 마지막으로, 특정 대북지원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선호를 측정하는 방식은, 정부의 대북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특정 시기의 태도를 파악하는 목적이 있을 때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및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보다는 시기와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를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일에 대한 태도와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는 일부 연구에서 동일한 예측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서로 독립적인 준거변수로 다뤄지기도 하였으나(구본상 2020; 이준웅 2004), 두 구성개념은 앞서 언급한 차이에 더해 구체성 및 안정성 수준에서 서로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먼저, 통일에 대한 태도는 남북통일이 가져올 다양한 결과 사건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정서적 반응들로 구성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부의 세부적인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일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다양한 개인 내적·사회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변수로서

특정 행동 및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대북·통일 정책의 방향성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지지 또는 정책에 대한 태도는 그만큼 상황에 따른 가변성이 높다. 따라서 두 구성개념을 서로 동등하면서 독립적인 준거변수로 다루는 대신, 더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통일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인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지지 행동을 예측하는지 두 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이론적·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시사할 수 있다.

사회적 현상 및 대상에 대한 태도와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태도 간의 인과관계는 다양한 장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한 태도는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였으며(Rauwald and Moore 2002), 흑인 수감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일반 수감자들에 대한 더 강한 처벌을 지지하도록 만들었고(Peffley and Hurwitz 2002),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 아메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적 태도가 강할수록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 철폐 조치 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ies)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amasubramanian 2010). 국내 연구에서도 AI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AI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였고(이자연 2021),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였으며(임동진·박진경 2012),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 정책지지를 강하게 예측하는 것은 정책 인지도가 아닌 정책 필요성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동기 2021).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가 대북·통일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지만, 최훈석 외(2021)의 선행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ATU-K)가 대북·통일 정책지지 및 통일 관련 행동 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의 인지적 차원과 긍정정서, 부정정서가 각각 강하게 예측하는 준거변수의 차원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체성 보존과 평화 증진 차원에서의 인지적 태도는 다양한 차원의 대북·통일 정책지지를 예측하였으나, 국력 강화 차원에서의 인지적 태도는 경제협력과 통일 교육에 관련된 정책지지만을 예측하였다. 또한, 긍정정서는 다른 차원들에 비해 정책 지지와 통일 관련 행동 지향성을 더 강하게 예측하였으며, 특히 통일 관련 개인행동과 집단행동에 참여할 의도는 긍정정서에 의해서 강하게 예측되었다. 반면에,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는 태도의 부정정서 차원에 의해서 강하게 예측되었다. 이화행 외(2015)의 연구에서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태도)이 정부의 대북정책 및 평화통일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등 인구통계변수가 아닌 가치, 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공정성 인식, 평등지향 가치정향 등 개인의 이념, 가치, 정체성과 같은 심리변수의 예측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구본상 2020; 권수현 2017; 김혜숙 2002; 송영훈·권수현 2013; 윤광일 2019; 이준용 2004; 장승진 2020). 개인의 정치적 신념 및 정체성과 같은 개인 심리변수들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 및 대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정서 경험, 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북통일이라는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장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통일지향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구성개념에 비해, 개인이 통일에 대해 형성한 태도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더 근접한 변수로서, 다른 개인차 변수들에 비해 더 강한 예측력을 가질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ATU-K 척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통일이 야기할 미래 사건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통일을 떠올릴 때 경험하는 구체적인 정서들로 구분하여 세밀하게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더 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대북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ATU-K 통일태도가 개인의 정치적 이념 및 정체성 변수와 비교하여 더 강한 설명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최훈석 외(2021)의 선행연구에서는 협력적 대북정책을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정책, 통일교육의 다섯 차원으로 구분하고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여 대북정책의 세부적 차원을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들이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협력적 대북정책(유화정책)과 적대적 대북정책(강경정책)을 간명하게 구분하여 선행연구에서 검증한 통일에 대한 태도(ATU-K)의 준거타당도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인의 정치적 이념 및 정체성 변수들에 비해 ATU-K 통일태도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얼마나 강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 다. 통일에 대한 태도의 사회적 규범 지각

앞서 기술한 본 연구의 주목적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통일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지각이 개인의 통일태도에 더해 대북정책을 예측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에이젠(Ajzen 1991)의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따르면, 어떤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그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 그 행동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신념(주관적 규범), 개인이 그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평가하는지(지각된 행동 통제)가 포함된다. 통일에 대한 태도(ATU-K) 척도에는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주위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각은 개인의 태도 및 통일 관련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적 지향성이나 세대 간 구분에 따라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개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통일태도의 예측력에 더해 주관적 규범 지각이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관찰하기 용이한 타인의 공적 행동(public behaviors)으로부터 사회적 규범을 추론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규범을 지지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규범과 실제 구성원들이 내재하고 있는 사적 태도(private attitude) 간에는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라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는 자신의 공적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동일하지만 자신의 사적 태도는 다르다는 신념으로부터 발생한다(Miller and McFarland 1991). 즉, 나의 사적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에 실제로 찬성할 것이라고 잘못 지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 태도와 사회적 규범 간에 불일치를 지각하며 그에 따른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지각된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internalization)하여 자신의

사적 태도를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사적 태도와 일관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 혁신을 꾀하거나, 집단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의 사적 태도가 분명하거나 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집단 또는 사회에 더 강하게 동일시하고 규범에 순응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규범의 내재화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Prentice and Miller 1993).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ATU-K)를 측정하는 것에 더해 개인이 지각하는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실제 지니고 있는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와 한국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태도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한국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규범과 실제 한국인들의 사적 태도 간에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면,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통일에 관한 인식이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이며, 이는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괴리를 확인하고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작업은 앞으로의 통일 교육 및 사회적 대화에 필요한 부분이다.

## 2. 구성개념 및 측정 문항

### 가. 예측변수

#### (1)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박주화·최훈석 외(2020)가 개발한 ATU-K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TU-K 척도의 인지 차원은 통일이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국력 강화’와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 세 개 하위차원으로 구분하여 총 아홉 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기대×가치)를 측정한다. 국력 강화 차원의 문항은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정체성 보존 차원의 문항은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평화 증진 차원은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결과에 대하여 ‘발생가능성(1점=매우 낮다, 5점=매우 높다)’과 ‘바람직성(1점=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5점=매우 바람직하다)’에 응답하였으며, 발생가능성(기대)과 바람직성(가치)을 곱한 값(범위: 1~25점)을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ATU-K 척도의 정서 차원은 긍정 정서 다섯 가지, 부정정서 다섯 가지의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응답자들은 통일을 떠올렸을 때 각 정서가 느껴지는 정도에 대해 1점(전혀 느껴지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였다.

## (2)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

계획된 행동 이론(Ajzen 1991)에서는 행동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함께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을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핵심 변수로 다룬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들 또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니는 태도에 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의미하고, 대상 또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태도와 독립적으로 개인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Manning 2009). 한편, 기존 이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에이젠(Ajzen 2012)은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는 문항을 구성할 때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과 지시적 규범(injunctive norm)을 각각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을 응답자들의 가족,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이 남북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의 지각을 묻는 두 문항(‘내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직장동료)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 같다’, ‘내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직장동료)은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과,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남북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의 지각을 묻는 두 문항(‘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 같다’, ‘내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을 이용하여 5점(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척도로 측정하였다.

## 나. 준거변수: 대북정책 지지

선행연구(박주화 외 2019)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참고하여, 협력적 대북정책을 기술한 다섯 문항(‘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북한의 취약 계층(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남북단일팀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한다’, ‘대북살포전단 금지법은 적절한 입법조치이다’,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과 적대적 대북정책을 나타내는 다섯 문항(‘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

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먼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한 선제공격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약간의 인명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과 무력충돌을 해야 한다’)을 구성하고, 응답자들에게 각각의 정책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6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다. 통제변수

### (1) 정치성향

정치성향은 다양한 정치적 이슈 및 남북통일 관련 인식, 태도, 행동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인차 변수로, 선행연구에서도 더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개인일수록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협력정책에 반대하고 강경정책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수현 2017; 윤광일 2019; 장승진 2020).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지각하는 정치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네 문항(‘귀하는 사회적 이슈(예: 낙태법 폐지, 교육 평준화 등)에 있어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귀하는 경제적 이슈(예: 세금법, 복지제도 등)에 있어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귀하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귀하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까?’)을 사용(Skitka et al. 2002)하였고, 1점(매우 보수)부터 7점(매우 진보)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2) 사회적 지배성향

사회적 지배성향은 사회집단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태도로, 사회적 지배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집단들이 평등한 것은 아니며, 우월한 집단이 열등한 집단보다 더 상위의 서열에 있어야 한다고 믿고 불평등한 상태를 선호한다. 반면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집단들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이 평등하며 서열 차이가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인종차별주의 이념이나 군사계획 정책을 지지하는 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약자집단에 대한 공감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 수준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Pratto et al. 1994). 선행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을수록 대북 유화정책에 찬성하고, 대북 강경정책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윤광일 2019).

본 연구에서는 호 외(Ho et al. 2015)가 개발한 척도의 8문항(‘열등한 개인, 집단과 계층은 자신들의 주제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우월한 계층 또는 집단이 상위에 있고 열등한 계층과 집단은 하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집단간 위계가 분명해야 한다. 어떤 계층은 상위에, 다른 계층은 하위에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남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개인과 계층에게 동일하게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역)’, ‘우리는 모든 사람과 계층에게 동일한 삶의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역)’,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살면서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역)’, ‘사람 간, 계층 간 평등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역)’)을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6점(매우 동의한다)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한민족·남한 동일시

사회정체성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범주를 기반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정체성을 의미하며, 개인의 사회정체성은 집단 내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집단 간 갈등, 편견 및 차별 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Tajfel and Turner 1986). 특히 한국 국민들의 경우 한민족이라는 상위수준의 민족정체성과 남한 국민이라는 하위수준의 국가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 사회정체성(dual social identity)을 갖는다(Jung et al. 2016).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 수준(민족정체성)과 남한에 대한 동일시 수준(국가정체성)이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및 남북 간 화해 의도 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민족 동일시는 통일을 지향하는 행동의도와 남북 간 화해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남한 동일시 수준은 유의한 예측효과를 보이지 않았다(최훈석 외 2019; Ju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호그와 하인스(Hogg and Hains 1996)의 정체성 척도를 수정하여 한민족에 대해 동일시하는 수준(‘귀하는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니까?’, ‘귀하는 한민족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당신이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귀하는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과 남한에 대해 동일시하는 수준(‘귀하는 남한 국민으로서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니까?’, ‘귀하는 남한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당신이 남한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귀하는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을 측정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부터 7점(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사이의 숫자로 응답하였다.

### 3. 분석

#### 가. 기초 분석

먼저 기초분석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19개 개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선행연구(최훈석 외 2021)와 마찬가지로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이 구분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과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요인 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하위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연령별 하위집단 간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및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심층 분석에서는 ATU-K 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가 개인의 정치적 이념 및 정체성에 비해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더 잘 예측하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태도 및 하위 요인들과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각각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통일태도와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을 탐색적 목적으로 비교하였다.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및 요인분석 결과

##### (가) 통일에 대한 태도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ATU-K 척도 19문항 (인지 9문항, 정서 10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에는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태도를 이루는 하위 요소들 간에 상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Oblimin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전체 19개 문항은 세 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1요인(요인 설명량 54.04%; 9개 문항 Cronbach's  $\alpha = .94$ )은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 2요인(요인 설명량 11.76%; 5개 문항 Cronbach's  $\alpha = .92$ )은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 3요인(요인 설명량 9.65%; 5개 문항 Cronbach's  $\alpha = .96$ )은 '통일에 대한 긍정정서'로 해석하였다.

전체 1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인지적 태도를 측정한 9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나, 최훈석 외(2021)의 연구에서도 증명된 것처럼 인지적 태도를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 요인으로 구분할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인지적 태도 9문항에 대하여 3요인을 지정하여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 직교회전)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론적으로 구성한 것과 일관된 방식으로 3요인이 추출되었으며, 1요인(요인 설명량 68.53%; 3개 문항 Cronbach's  $\alpha = .91$ )은 '평화 증진', 2요인(요인 설명량 7.96%; 3개 문항 Cronbach's  $\alpha = .91$ )은 '정체성 보존', 3요인(요인 설명량 6.15%; 3개 문항 Cronbach's  $\alpha = .86$ )은 '국력 강화'로 해석하였다.

<표 IV-1>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12.05	6.84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13.89	6.69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13.36	6.45
(4)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14.59	6.57
(5)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13.00	6.47
(6)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3.63	6.53
(7)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16.17	7.08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14.66	6.78
(9)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15.07	6.63
전체 평균	14.05	5.52

주: 각 문항에 대한 발생가능성(기대)×바람직성(가치) 값으로 계산; 원문항 응답 범위: 1점(매우 낮다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 5점(매우 높다 / 매우 바람직하다).

〈표 IV-2〉 통일에 대한 정서적 태도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설렌다	2.97	1.09
(2) 즐겁다	2.86	1.04
(3) 반갑다	3.10	1.09
(4) 기쁘다	3.02	1.12
(5) 행복하다	2.85	1.06
(6) 거부감이 든다 (역)	3.23	1.02
(7) 화가 난다 (역)	3.59	1.02
(8) 불안하다 (역)	3.14	1.12
(9) 무섭다 (역)	3.43	1.08
(10) 역겹다 (역)	3.80	1.06
전체 평균	3.20	0.85

주: (역)=역문항; 응답 범위: 1점(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 5점(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표 IV-3〉 통일에 대한 태도 (19문항)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및 요인부하량			신뢰도
	인지	부정 정서	긍정 정서	
(9)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894	-	-	α=.942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879	-	-	
(4)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852	-	-	
(7)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848	-	-	
(6)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807	-	-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778	-	-	
(5)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769	-	-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726	-	-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611	-	-	
(4) 무섭다	-	.912	-	α=.916
(2) 화가 난다	-	.877	-	
(3) 불안하다	-	.841	-	
(5) 역겹다	-	.836	-	
(1) 거부감이 든다	-	.798	-	
(7) 즐겁다	-	-	.962	α=.960
(10) 행복하다	-	-	.916	
(9) 기쁘다	-	-	.900	
(6) 설렌다	-	-	.863	
(8) 반갑다	-	-	.852	

주: 문항 순서는 요인부하량의 크기순으로 정렬; 3요인 설명량: 75.44%.



〈표 IV-4〉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 (9문항)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및 요인부하량			신뢰도
	평화 증진	정체성 보존	국력 강화	
(8) 남북한 통일은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814	-	-	α=.907
(9) 남북한 통일은 국제사회의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	.807	-	-	
(7)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시킨다	.806	-	-	
(5)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	.844	-	α=.907
(6)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755	-	
(4) 남북한 통일은 한민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	.726	-	
(1)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	-	.835	α=.861
(2)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	-	-	.757	
(3) 남북한 통일은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	.661	

주: 3요인 지정; 문항 순서는 요인부하량의 크기순으로 정렬; 3요인 설명량: 82.65%.

#### (나)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을 측정하는 4문항에 대하여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주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 4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수렴되었다(요인 설명량 65.88%; 4개 문항 Cronbach's  $\alpha = .83$ ). 규범 지각의 준거 대상에 따라 가족, 친구 등 주위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지각되는 태도와 대다수의 한국인들의 지각된 태도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두 개의 요인을 지정하여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요인(1요인 설명량 65.88%, 2요인 설명량 20.56%)이 추출되었으나, 준거 집단 별로 요인이 구분될 것으로 기대한 것과는 달리 규범의 종류(기술적 규범 대 지시적 규범)에 따른 요인이 구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통일에 대한 기술적 규범과 지시적 규범 지각에서 차이를 예상하고 있지 않

있고, 두 규범 간 상관인 .526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4개 문항의 평균을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의 지표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V-5〉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내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직장동료)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 같다	2.90	0.99
(2) 내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직장동료)은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	2.45	0.97
(3)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 같다	2.90	1.01
(4) 내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	2.47	0.97
전체 평균	2.68	0.80

주: 응답 범위: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표 IV-6〉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부하량	신뢰도
(4) 내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	.837	α=.827
(3)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 같다	.819	
(1) 내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직장동료)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 같다	.796	
(2) 내가 남북한 통일을 지지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예: 가족, 친구, 직장동료)은 나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	.793	

주: 문항 순서는 요인부하량의 크기순으로 정렬; 1요인 설명량: 65.88%.

#### (다)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10개의 문항은 개념적으로 협력적 대북정책과 적대적 대북정책을 기술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두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구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1요인(요인 설명량 41.65%, 5개 문항 Cronbach's  $\alpha = .85$ )은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5개 문항은 각각 2요인(요인 설명량 19.57%, 5개 문항 Cronbach's  $\alpha = .80$ )과 3요인(요인 설명량 10.90%, 2개 문항 Cronbach's  $\alpha = .88$ )으로 구분되었다. 3요인에 해당하는 2개 문항은 2요인의 3개 문항에 비해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대북 무력충돌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대북정책 중에서도 간접적인 정책과 직접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와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1요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에 반해 2요인과 3요인 간 상관이 .449로 나타났다. 개념적 구분에 근거하여 2요인을 지정한 후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 직교회전)을 추가 실시한 결과, 개념과 일관되게 두 개의 요인(1요인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 요인 설명량 41.65%, 5개 문항 Cronbach's  $\alpha = .85$ ; 2요인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요인 설명량 19.57%, 5개 문항 Cronbach's  $\alpha = .81$ )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북한의 취약계층(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3.86	1.14
(2)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남북단일팀을 추진해야 한다	3.21	1.28
(3)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한다	3.69	1.15
(4) 대북살포전단 금지법은 적절한 입법조치이다	3.60	1.35
(5)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3.53	1.34
전체 평균	3.58	1.00

주: 응답 범위: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6점(매우 동의한다).

〈표 IV-8〉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측정 문항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3.28	1.21
(2)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4.07	1.24
(3)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4.08	1.24
(4) 북한이 먼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한 선제공격도 고려해야 한다	2.96	1.44
(5) 필요하다면 약간의 인명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과 무력 충돌을 해야 한다	2.71	1.49
전체 평균	3.42	1.00

주: 응답 범위: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6점(매우 동의한다).

〈표 IV-9〉 대북정책 지지 요인분석 결과 (3요인)

문항	요인 및 요인부하량			신뢰도
	1	2	3	
(3)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한다	.830	-	-	α=.854
(2)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남북단일팀을 추진해야 한다	.809	-	-	
(1)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북한의 취약계층(어린이, 임신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796	-	-	
(5)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790	-	-	
(4) 대북살포전단 금지법은 적절한 입법조치이다	.670	-	-	
(7)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	.876	-	α=.804
(8)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	.863	-	
(6)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	.651	-	
(10) 필요하다면 약간의 인명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과 무력충돌을 해야 한다	-	-	.920	α=.875
(9) 북한이 먼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한 선제공격도 고려해야 한다	-	-	.898	

주: 문항 순서는 요인부하량의 크기순으로 정렬; 3요인 설명량: 72.12%.

〈표 IV-10〉 대북정책 지지 요인분석 결과 (2요인 지정)

문항	요인 및 요인부하량		신뢰도
	협력적	적대적	
(2) 도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남북단일팀을 추진해야 한다	.825	-	α=.854
(3) 남북관계 개선은 북미관계 개선을 촉진한다	.812	-	
(5)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801	-	
(1)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북한의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788	-	
(4) 대북살포전단 금지법은 적절한 입법조치이다	.667	-	
(9) 북한이 먼저 공격해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한 선제 공격도 고려해야 한다	-	.803	α=.812
(10) 필요하다면 약간의 인명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북한과 무력충돌을 해야 한다	-	.779	
(6)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	.727	
(8)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	.706	
(7)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될 것이다	-	.688	

주: 문항 순서는 요인부하량의 크기순으로 정렬; 2요인 설명량: 61.22%.

### (라) 통제변수

통제변수로서 정치성향(4문항, α=.899), 사회적 지배성향(8문항, α=.810), 한민족 동일시(4문항, α=.956), 남한 동일시(4문항, α=.955) 각각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통제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IV-11〉에 제시하였다.

〈표 IV-11〉 통제변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정치성향	4.20	1.02	α=.899
사회적 지배성향	2.67	0.95	α=.810
한민족 동일시	4.60	1.27	α=.956
남한 동일시	5.07	1.19	α=.955

## (2) 주요 변수들 간 상관분석

### (가) 통일에 대한 태도 하위 차원 간 상관

ATU-K 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 총점과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 점수 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통일에 대한 태도의 총점 값은 19개 개별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Fisher's z-score)를 평균하여(부정정서의 경우 역점수화하여 사용) 계산하였다(19개 전체 문항 Cronbach's  $\alpha = .95$ ). 상관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긍정정서, 부정정서 간의 상관은 각각 .603, -.538로 이론과 일관된 방향의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간의 상관은 -.547로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차원과 긍정정서 차원, 부정정서 차원은 상위수준의 통일태도를 측정하는 서로 관련된 차원이면서 동시에, 개념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12〉 통일에 대한 태도 하위 차원 간 상관

구성개념	1	2	3	4
1. 통일태도: 총점	-	.903**	.826**	-.780**
2. 통일태도: 인지		-	.603**	-.538**
3. 통일태도: 긍정정서			-	-.547**
4. 통일태도: 부정정서				-
평균 (표준편차)	.00 (.73)	14.05 (5.52)	2.96 (1.00)	2.56 (.92)

주: \*\*  $p < .01$ ; 통일태도 총점은 19개 개별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Fisher's z-score)를 평균하여 계산

### (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연구 변수들 간 상관

통일에 대한 태도와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통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에는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  $r=.510$  ), 진보적 정치성향이 강할수록(  $r=.309$  ),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r=-.373$  ), 한민족 동일시(  $r=.427$  )와 남한 동일시(  $r=.347$  )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태도와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 간의 상관(  $r=.543$  ),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와의 상관(  $r=-.327$  )로, 통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협력적 대북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은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와는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  $r=.409$  )을 보이는 반면,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와는 약한 부적 상관(  $r=-.084$  )을 보여, 통일에 대한 규범 지각과 대북정책 지지 간의 관계는 정책의 특성 및 방향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냈다. 진보적 정치성향이 강할수록(  $r=.428$  ),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r=-.239$  ), 한민족 동일시(  $r=.328$  )와 남한 동일시(  $r=.201$  )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났으며, 반대로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r=-.296$  ), 사회적 지배성향이 강할수록(  $r=.269$  ), 한민족 동일시(  $r=-.060$  ) 수준이 낮을수록 적대적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와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간의 상관(  $r=-.366$  )의 약한 부적 상관을 보여, 두 유형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서로 상반되지만 개념적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표 IV-13〉 통일에 대한 태도 및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기술통계치 및 구성개념 간 상관

구성개념	1	2	3	4	5	6	7	8
1.통일태도	-	.510**	.309**	-.373**	.427**	.347**	.543**	-.327**
2.주관적 규범		-	.175**	-.055*	.372**	.221**	.409**	-.084**
3.정치성향			-	-.234**	.119**	.065**	.428**	-.296**
4.사회적 지배성향				-	-.179**	-.190**	-.239**	.269**
5.한민족 동일시					-	.668**	.328**	-.060*
6.남한 동일시						-	.201**	-.026
7.협력적 대북정책 지지							-	-.366**
8.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
평균 (표준편차)	.00 (.73)	2.68 (.80)	4.20 (1.02)	2.67 (.95)	4.60 (1.27)	5.07 (1.19)	3.58 (1.00)	3.42 (1.00)

주: \*\*  $p < .01$ , \*  $p < .05$ ; 통일태도 총점은 19개 개별 문항의 표준화된 점수(Fisher's z-score)를 평균하여 계산

#### (다) 하위 집단(성별/연령별) 간 통일태도 비교

ATU-K 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에서 성별과 연령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기 위해 하위집단에 대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의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남성( $M=.08$ )이 여성( $M=-.08$ )에 비해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F(1, 1598)=18.24, p < .001$ . 구체적으로, 남성은 인지적 태도( $M=14.35$ )에서도 여성( $M=13.72$ )에 비해 통일에 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F(1, 1598)=5.25, p < .05$ , 통일을 떠올렸을 때 느끼는 정서 역시 남성( $M=3.31$ )이 여성( $M=3.08$ )에 비해 더 긍정적이었다.  $F(1, 1598)=29.77, p < .001$ . 성별에 따른 일원 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4〉에 제시하였다.



〈표 IV-14〉 성별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유의도
성별	9.704	1	9.70	18.24	.000
오차	850.058	1598	0.53		
전체	859.762	1599			

연령별 하위집단에 대해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집단 간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4, 1595)=25.39$ ,  $p<.001$ . 개별 하위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ukey의 HSD (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 방식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 $M=-.24$ )와 30대( $M=-.22$ )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40대( $M=.07$ ), 50대( $M=.18$ ), 60대( $M=.15$ )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20대와 30대는 40대 이상의 연령 집단들에 비해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 차원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패턴이 나타났다 ( $ps <.001$ ). 즉, 20대와 30대는 40~60대 연령 집단에 비해 통일이 가져올 미래 사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통일을 떠올렸을 때 더 부정적인 정서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연령별 하위집단에 대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5〉에 제시하였다.

〈표 IV-15〉 연령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일원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유의도
연령대	51.472	4	12.868	25.393	.000
오차	808.290	1595	0.507		
전체	859.762	15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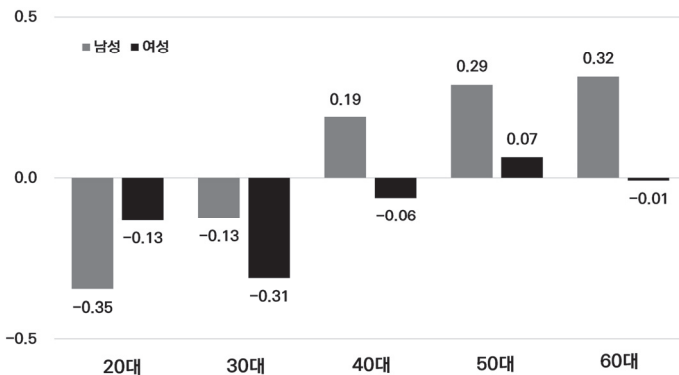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성별과 연령 집단 간 상호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4, 1590)=6.75, p < .001$ .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s < .05$ . 그러나 연령 집단별 성차의 양상을 비교해보면, 20대에서만 남성( $M=-.35$ )이 여성( $M=-.13$ )보다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30~60대의 집단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이원 분산분석 결과는 <표 IV-16>에,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그래프는 <그림 IV-1>에 제시하였다. 통일에 대한 태도 전체 점수 및 태도 하위 차원 점수에서의 하위 집단 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IV-17>에 제시하였다.

<표 IV-16>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원 분산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유의도
성별(A)	9.466	1	9.466	19.186	.000
연령(B)	50.859	4	12.715	25.771	.000
A*B	13.325	4	3.331	6.752	.000
오차	784.450	1590	0.493		
전체	859.762	1599			

<그림 IV-1>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



〈표 IV-17〉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일에 대한 태도의 기술통계치

태도 차원	연령	성별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태도 점수 (표준화)	20대	-.35	.71	-.13	.55
	30대	-.13	.62	-.31	.62
	40대	.19	.74	-.06	.73
	50대	.29	.75	.07	.78
	60대	.32	.67	-.01	.75
인지적 태도: 국력 강화	20대	10.59	5.47	11.75	4.67
	30대	12.27	5.20	11.05	4.98
	40대	14.87	6.23	12.68	6.03
	50대	14.80	6.06	13.95	5.92
	60대	14.97	5.65	13.06	6.18
인지적 태도: 정체성 보존	20대	11.41	5.72	13.62	5.25
	30대	12.27	5.52	11.82	5.38
	40대	14.91	6.20	13.55	6.07
	50대	15.03	5.94	14.66	6.29
	60대	15.27	5.68	14.12	6.18
인지적 태도: 평화증진	20대	12.97	6.58	13.42	5.50
	30대	14.31	5.41	13.19	5.58
	40대	16.55	6.15	15.22	6.70
	50대	16.96	6.14	16.38	6.54
	60대	16.93	5.96	16.04	6.05
정서적 태도	20대	2.84	.84	3.09	.64
	30대	3.10	.72	2.85	.73
	40대	3.38	.83	3.10	.84
	50대	3.57	.85	3.20	.91
	60대	3.60	.80	3.13	.87

## 나. 심층 분석

### (1)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본 연구의 주 목적은 ATU-K 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가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개인의 정치적 이념 및 정체성 변수들에 비해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더 강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인구통계변수 및 개인차 변수(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남한 동일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ATU-K 통일태도를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가)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먼저, 1단계에서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를 투입한 결과, 성별과 소득수준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의 예측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2단계에서 개인 이념 및 정체성 변수(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남한 동일시)를 투입한 결과, 인구통계변수의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개인 이념 및 정체성 변수들이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증분설명량 26%). 구체적으로는,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강할수록,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예측하였다. 남한 동일시의 예측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예측변수인 ATU-K 통일태도 점수를 투입하여 인구통계변수와 개인 이념 및 정체성 변수의 효과를 통제된 후 통일태도의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태도는 인구통계

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와 개인 이념 및 정체성 변수(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남한 동일시)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일태도의 증분설명량 12%). 특히, 2단계에서 가장 강한 설명력을 보인 정치성향 변수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통일에 대한 태도는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표 IV-18>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		
		$\beta$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3	1.16	.01***
	연령	0.11	4.55***	
	소득수준	-0.02	-0.88	
2단계	성별	0.01	0.53	.27***
	연령	0.03	1.26	
	소득수준	-0.03	-1.41	
	정치성향	0.37	16.87***	
	사회적 지배성향	-0.10	-4.53***	
	한민족 동일시	0.28	9.62***	
	남한 동일시	-0.04	-1.35	
2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26***				
3단계	성별	0.07	3.56***	.39***
	연령	-0.01	-0.40	
	소득수준	-0.05	-2.58*	
	정치성향	0.28	13.36***	
	사회적 지배성향	0.01	0.37	
	한민족 동일시	0.17	6.16***	
	남한 동일시	-0.07	-2.78**	
	통일에 대한 태도	0.42	17.58***	
3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1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N=1,600$ .

(나)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마찬가지로,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와 개인 이념 및 정체성 변수(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남한 동일시)의 효과를 통제한 뒤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적대적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19>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beta$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2	-4.73***	.02***
	연령	-0.09	-3.67***	
	소득수준	-0.03	-1.36	
2단계	성별	-0.08	-3.60***	.14***
	연령	-0.08	-3.27**	
	소득수준	-0.03	-1.35	
	정치성향	-0.25	-10.35***	
	사회적 지배성향	0.20	8.08***	
	한민족 동일시	-0.02	-0.63	
	남한 동일시	0.07	2.23*	
2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12***				
3단계	성별	-0.12	-5.34***	.19***
	연령	-0.06	-2.35*	
	소득수준	-0.02	-0.80	
	정치성향	-0.19	-7.79***	
	사회적 지배성향	0.13	5.08***	
	한민족 동일시	0.05	1.67	
	남한 동일시	0.09	3.04**	
	통일에 대한 태도	-0.28	-9.94***	
3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05**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N=1,600$ .

먼저 인구통계변수 중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적대적 대북정책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투입된 개인 이념 및 정체성 변수들 중에서는 정치성향과 사회적 지배성향, 남한 동일시 수준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념 및 정체성 변수들의 증분설명량 12%).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을수록, 남한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예측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통계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와 개인 이념 및 정체성 변수(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남한 동일시)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일에 대한 태도의 예측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통일태도의 증분설명량 5%).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ATU-K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였다.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한 최훈석 외(2021)의 선행연구에서는 ATU-K 척도로 측정한 통일태도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온 태도 척도들에 비해 더 강력하게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더해, 본 연구의 결과는 ATU-K 통일태도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개인의 정치적 이념 및 정체성 변수에 비해 더 강력한 예측변수라는 것을 나타낸다. 정치적 이념은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 및 인지적 평가, 정서 경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체성 역시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의 맥락에서 다양한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은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특수한 주제와는 비교적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한 상위수준의 추상적인 개인차 변수인

반면,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측정된 통일태도는 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및 북한 관련 행동의도나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지지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치성향 및 이념, 정체성 등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통일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며, ATU-K 척도는 통일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척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2)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통일태도 하위차원 및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의 효과 분석)

ATU-K 통일태도의 예측타당성을 개인의 정치적 이념 및 정체성과 비교하여 검증하는 주요 연구 목적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통일태도의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긍정정서, 부정정서)이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미치는 차별적인 효과를 더 상세하게 검증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태도의 하위 차원들을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이 개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의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대북정책 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 탐색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을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의 1단계에서 인구통계 변수(성별, 연령, 소득수준)를 투입한 후, 2단계에서는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의 하위 세 차원(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 평화 증진)과 정서적 태도의 두 차원(긍정정서, 부정정서)을 분리하여 투입하였고,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 점수를 투입하여 대북정책 지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가)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 하위차원 및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의 회귀분석

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통일태도 중에서도 국력강화, 정체성보존 차원과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예측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통일태도의 증분설명량 31%).

<표 IV-20>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 하위차원 및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의 회귀분석 결과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		
		$\beta$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03	1.16	.01***
	연령	0.11	4.55***	
	소득수준	-0.02	-0.88	
2단계	성별	0.10	4.74***	.32***
	연령	-0.03	-1.21	
	소득수준	-0.05	-2.26*	
	통일태도(인지): 국력강화	0.12	3.30**	
	통일태도(인지): 정체성보존	0.19	5.25***	
	통일태도(인지): 평화증진	0.02	0.52	
	통일태도(정서): 긍정정서	0.30	10.34***	
	통일태도(정서): 부정정서	-0.05	-2.04*	
2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31***				
3단계	성별	0.12	5.54***	.34***
	연령	-0.05	-2.52*	
	소득수준	-0.04	-1.75	
	통일태도(인지): 국력강화	0.09	2.58*	
	통일태도(인지): 정체성보존	0.17	4.71***	
	통일태도(인지): 평화증진	0.03	0.96	
	통일태도(정서): 긍정정서	0.22	7.15***	
	통일태도(정서): 부정정서	-0.07	-2.66**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	0.17	6.72***	
3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02***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N=1,600$ .

구체적으로, 통일을 통해 국력강화와 정체성 보존을 기대하고 이 결과 사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통일을 떠올렸을 때 긍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덜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협력적 통일정책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가적으로, 인구통계변수와 통일태도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은 협력적 통일정책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주관적 규범 지각의 증분설명량 2%). 즉, 다른 사람들이 통일을 지지한다고 지각할수록 협력적 통일정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긍정정서의 예측력이 가장 높았고 정체성 보존 차원과 주관적 규범 지각의 예측 효과가 그 다음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 (나)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 하위차원 및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의 회귀분석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점수에 대해 동일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통일태도의 설명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증분설명량 15%)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 중에서도 부정정서만이 유의한 예측력을 보였다. 통일태도의 효과를 통제한 후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은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서의 통일태도 하위 차원들의 예측타당도는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최훈석 외(2021)의 연구에서도 ATU-K 통일태도를 하위 차원들로 분리해서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예측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북지원 정책의 속성(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군사정책, 통일교육)에 따라 인지적 태도 차원들의 예측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다른 문항을 구성하여 대북정책 지지를 측정할 점을 고려

하였을 때, 협력적 대북정책 또는 대북지원정책이 반영하는 이슈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의 특정 차원이 더 강하게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태도의 하위 차원들이 각각 잘 예측하는 대북정책의 주제를 확인하고 둘 간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IV-21〉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통일태도 하위차원 및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의 회귀분석 결과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		
		$\beta$	$t$	adjusted $R^2$
1단계	성별	-0.12	-4.73***	.02***
	연령	-0.09	-3.67***	
	소득수준	-0.03	-1.36	
2단계	성별	-0.14	-6.22***	.17***
	연령	-0.04	-1.53	
	소득수준	-0.01	-0.56	
	통일태도(인지): 국력강화	-0.06	-1.60	
	통일태도(인지): 정체성보존	0.03	0.78	
	통일태도(인지): 평화증진	-0.05	-1.34	
	통일태도(정서): 긍정정서	0.02	0.56	
통일태도(정서): 부정정서	0.36	12.54***		
2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15***				
3단계	성별	-0.14	-6.03***	.17***
	연령	-0.04	-1.76	
	소득수준	-0.01	-0.45	
	통일태도(인지): 국력강화	-0.07	-1.74	
	통일태도(인지): 정체성보존	0.03	0.66	
	통일태도(인지): 평화증진	-0.05	-1.25	
	통일태도(정서): 긍정정서	0.00	0.00	
	통일태도(정서): 부정정서	0.36	12.37***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	0.04	1.35	
3단계 증분설명량( $\Delta R^2$ )=.00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N=1,600$ .

한편, 적대적 대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통일태도 중 부정정서만이 유의하게 예측한 결과는 최훈석 외(2021)의 연구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관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차원에 의해 설명되지 않았고, 부정정서의 강한 예측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있어서는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보다 부정정서의 역할이 크다는 일관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다. 탐색적 분석: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연구 문제는 사람들이 지닌 통일에 대한 태도와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통일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성별·연령 집단 별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 상관분석 결과, 모든 하위집단에서 .3 ~ .5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한국인의 통일태도와 ‘실제’ 통일태도가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통일태도에서의 지각된 사회적 규범과 실제 태도 간에 괴리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각 상관계수를 <표 IV-22>에 제시하였다.

<표 IV-22> 성별/연령 하위집단 별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 상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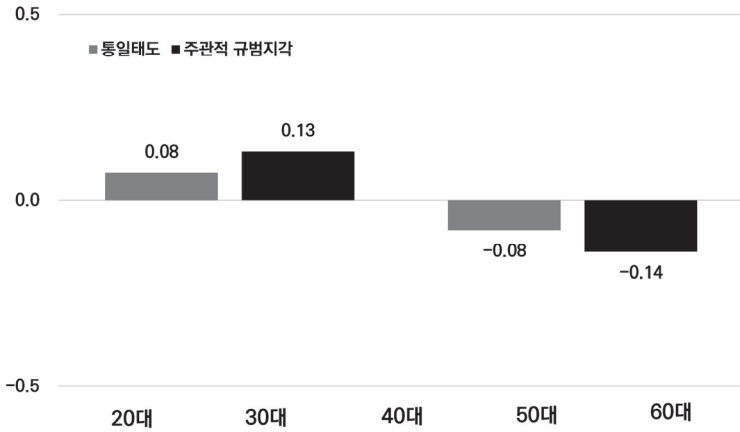
분류	하위집단	N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 상관계수
성별	남성	816	.529**
	여성	784	.470**
연령	20대	292	.400**
	30대	291	.369**
	40대	354	.435**
	50대	370	.545**
	60대	293	.571**

주: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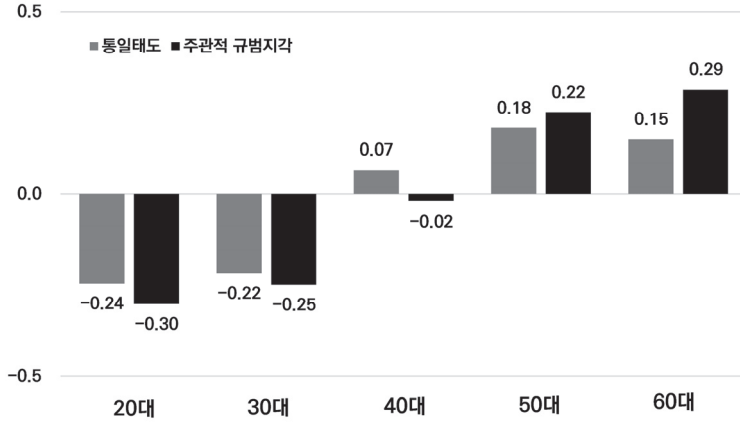
다음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일태도와 지각된 규범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 때 통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척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을 측정한 척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태도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598)=8.99, p < .01$ .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남성은 개인 통일태도( $M=.08$ )에 비해 주관적 규범( $M=.13$ )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  $F(1, 1598)=4.40, p < .05$ , 여성은 개인 통일태도( $M=-.08$ )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통일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지각( $M=-.14$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1598)=4.58, p < .05$ . 성별과 태도 변수 간 상호작용 그래프를 <그림 IV-2>에 제시하였다.

연령 집단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태도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4, 1595)=4.25, p < .01$ . <그림 IV-3>에 제시한 것처럼, 20대와 30대가 동일한 패턴을 보였고, 50대와 60대가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대와 30대는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50대와 60대는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고, 자신의 태도에 비해 다른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령대는 40대와 60대였다.

〈그림 IV-2〉 성별에 따른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의 관계



〈그림 IV-3〉 연령에 따른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의 관계



## 4. 논의

### 가. 결과요약 및 해석

본 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ATU-K)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통일태도가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지 재검증하면서, 일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개인의 정치적 이념 및 정체성 요인과 비교하여 ATU-K 통일태도의 강력한 예측력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통일태도에 관한 사회적 규범 지각이 대북정책 지지를 예측하는지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ATU-K 통일태도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선행연구(박주화·최훈석 외 2020; 최훈석 외 2021)의 결과와 일관되게 통일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차원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차원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인지적 태도는 통일로 인해 기대되는 결과로서 평화증진, 정체성 보존, 국력 강화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인지적 차원, 긍정정서, 부정정서 차원은 서로 중간 정도의 상관( $r = .54 \sim .60$ )을 보였는데, 이는 세 가지 하위요소들이 통일태도라는 상위 개념을 구성하는 서로 관련된 요소이면서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 차원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ATU-K 척도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하나의 지표로써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척도인 동시에, 연구 장면에 따라 인지와 정서의 하위 요소들을 구분하여 통일태도의 본질을 더 세밀하게 탐색할 수 있는 척도라는 점에서 유용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성별과 연령 하위집단 간 ATU-K 통일태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였다. 흥미롭게도 30~60대의 연령대에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통일에 대해 더 부정적이었으나, 20대에서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부정적인 통일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을 통해 살펴보니, 성별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30~60대 연령대에서는 대북정책 지지에서의 성차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20대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 응답자들이 협력적 대북정책을 덜 지지하고 적대적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인차 변수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른 연령대에서는 응답자의 정치성향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대 집단에서만 남성이 여성보다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20대 남성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보수화 현상과 함께 남녀 간, 세대 간 심화되는 사회집단 간 갈등과 불만족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군복무가 의무인 20대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도 일견 맥을 같이 한다. 탐색적인 목적으로 통일태도의 인지적 차원 세 가지와 긍정정서/부정정서를 구분하여 성별과 연령 하위집단 간 응답값을 비교한 결과, 30~60대 응답자들은 모든 하위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하거나 눈에 띄는 성차가 없었다. 반면, 20대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국력 강화와 정체성 보존에 관한 인지적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고, 부정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성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차원은 평화증진에 관한 인지적 태도와 긍정정서 차원이었다.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대 남성들은 특히 남북통일이 야기할 긍정적인 결과로서 국력 강화와 정체성 보존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낮으며, 통일을 떠올리면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담론의 측면에 있어서 단순히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의



20대 남성이라는 하위 집단 내에서 공유되는 통일에 대한 인식이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집단에 대하여 보다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ATU-K 통일태도와 개인의 정치적 이념(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및 정체성(한민족 동일시, 남한 동일시), 대북정책지지 간의 상관 분석 결과, 진보적인 정치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진보적 정치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협력적 대북정책을 지지하였고, 통일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을수록,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낮을수록 적대적 대북정책을 더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는 약한 부적 상관을 보여,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두 개념이 서로 양극단에 있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비교적 독립적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ATU-K 통일태도가 정치적 이념 및 정체성 변수와 비교하였을 때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더 신뢰롭고 강하게 예측하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정치성향과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수준은 선행연구와 일관된 방향으로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를 예측하였다. 즉, 정치성향이 더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강할수록 북한에 대한 협력적 정책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남한 동일시가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남한 동일시에 통일지향 행동의도나 남북 간 화해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와도 일관된다(Jung et al, 2016; 최훈석 외 2019). 더 중요한 결과는, 정치적 이념 및 정체성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ATU-K 통일태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정치성향에 의해 강하게 예측될 수밖에 없는데, ATU-K 통일태도는 정치성향의 예측력보다도 더 강한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정치성향이 더 보수적일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을수록, 남한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예측하였으나, 이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ATU-K 통일태도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 다른 개인차 변수들보다도 더 강하게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남한 동일시 수준이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각각 유의하게 예측하는 결과도 흥미로운데, 두 정체성 지표 간의 상관이 .668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정책과 적대적 정책에 대한 지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는 추후 연구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ATU-K 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재검증하는 것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ATU-K 통일태도의 하위차원들과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이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통일태도의 인지적 차원 중 국력강화와 정체성 보존 차원, 긍정정서 차원이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부정정서 차원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통일태도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지각, 즉 주관적 규범 지각은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

태도의 부정정서 차원에 의해서만 강하게 설명되었으며, 주관적 규범 지각은 추가적인 예측력을 보이지 않았다.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와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를 예측하는 변수들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는, 특정한 대북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협력적 대북정책의 경우 남북 양방 간에 얻게 될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자원과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 사건들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적대적 대북정책은 긍정적인 결과 외에도 남북 간 무력충돌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체계적인 인지적 처리과정에 의해 적대적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보다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강한 부정 정서가 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대다수 한국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파악하고 지각된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 역시 인지적·동기적인 처리 과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인지-정서의 이중 과정에 관해 더 깊게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정책의 속성·차원에 따라 더 강력한 예측력을 보이는 태도의 하위 차원을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TU-K 통일태도의 준거타당도를 재검증하고 ATU-K 척도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주목적에 더해,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의 역할 및 개인의 통일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인 수준의

분석 결과이지만, 본 결과는 사람들이 가진 개인의 통일태도와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통일태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개인의 통일태도와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통일태도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자료는 두 개념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각된 규범이 개인의 통일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개인의 통일태도가 사회 규범의 지각에 투사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두 개념 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 또는 실험연구 등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두 개념은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국민들의 통일태도와 그들이 ‘지각’하는 한국인들의 통일태도 간에는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특히 성별과 연령에 따라 그 방향성과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통일태도의 방향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회적 규범을 더 과장되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과장된 규범 지각은 유사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 내에서의 대화로 인한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의 결과일 수도 있고, 개인이 선호하는 미디어로부터 정보를 편향되게 수집하고 자신의 태도를 더 공고화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의 결과일 수도 있다. 문제는 서로 다른 통일태도를 가진 사회 집단들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해 각자의 집단에서 지각된 ‘과장된 규범’이 집단 간 갈등 및 단절을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통일 관련 정보를 편향되지 않게 습득·처리하도록 돕는 것에 더해, 서로 다른 사회집단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통일교육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ATU-K 척도로 측정된 통일태도는 남북통일을 ‘남북한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단일한 국가를 이루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통일태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척도에 응답할 때 응답자들이 인지적으로 구성하는 남북통일의 표상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다만, 통일을 ‘두 체제의 유지’나 ‘평화 공존’ 등 다른 방식으로 표상하는 경우의 태도는 ATU-K 통일태도로는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선호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는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는 증가세를 보여, 통일과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 간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양상을 보인다(이상신 외 2021). 평화공존 선호는 전통적으로 정의하는 남북통일의 형태에는 찬성하지 않는 응답이지만, 그렇다고 통일에 반대하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다. ‘통일이 곧 평화’이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당위적 목표로 간주했던 과거에 비해,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통일의 형태가 아닌 방법으로도 평화 달성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관점이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 통일담론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평화에 대한 정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평화공존 선호는 통일에 대한 태도에 비해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태도 및 통일 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예측변수가 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평화공존은 남북한이 전쟁 없이 두 국가 체제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는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인식, 미래 사건에 대한 평가 등을 반영하여 나타

난다기보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강력하고 기본적인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단순한 반응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국가로서의 통합’을 의미하는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는 북한 정부 및 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정서, 통일이 야기할 결과 사건들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기대와 평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ATU-K 척도로 측정하는 통일태도는 통일에 대한 표상을 특정한 형태로 제한하지만, 그럼으로써 통일태도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준거변수들을 신뢰롭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에 더해, ‘평화적 공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남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남과 북의 평화공존이 단순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가까운지 또는 새로운 형태의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가까운지, 평화공존에 대한 선호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본연적인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 또는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경우와 유지하는 경우에 발생할 결과 사건들에 대한 정교화된 인지적 처리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인지 등, 전통적인 통일의 형태에서 벗어난 ‘남북 간 평화’라는 목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나. 정책적 함의

본 장에서 다룬 연구 문제 및 분석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 이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다차원적인 구성개념이며, 통일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정서적 하위요소들을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복잡한 통일태도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에는 통일을 추진하여 이루어냈을 때 기대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해석 및 통일을 떠올렸을 때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경험들이 반영되어 있다. 국민들의 통일태도를 통일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의 단순한 질문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통일태도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즉,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과 통일의 당위성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과 통일의 비용과 편익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유사한 통일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TU-K 통일태도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의 통일태도를 더 정교하게 파악하고 개인 및 집단 간 우세하게 나타나는 통일담론을 비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일부 제시된 것처럼, 성별과 연령별로 응답자 집단을 구분하여 통일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타났다. 통일로 인해 기대되는 결과 중 국력 강화, 정체성 보존에 비해 평화 증진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통일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집단의 경우 국력 강화와 정체성 보존의 측면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낮은 기대·가치를 보였으나 평화 증진의 측면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다른 하위집단들에 비해 특히 부정적인 통일태도를 보인 20대 남성 집단의 경우에도 보편가치담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사회 하위집단들 간의 통일태도를 세분화하여 비교함으로써 각 집단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담론을 파악할 수 있고, 통일문제에 관한 집단 간 갈등의 이면에 존재하는 집단 간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장에

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진보·보수 집단 간 존재하는 첨예한 남남갈등의 문제 역시 다차원적인 통일태도에서의 차이를 탐색함으로써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ATU-K 통일태도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개인의 정치성향 등 정치적 이념과 한민족·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예상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였으나, 통일태도는 그보다 더 강력한 예측력을 보였다. 특히 개인의 정치성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이라는 특수한 장면에서는 개인의 정치성향보다 통일태도의 예측력이 더 높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큰 함의가 있다. 이는 개인의 정치성향과 정부에 대한 지지와는 비교적 별개로, 통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에 따라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및 지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성향이나 정부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키는 방식 외에도 통일태도를 구성하고 있는 신념과 정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

특히, 대북정책의 성격(협력적/적대적)에 따라 인지태도의 하위 차원들이 정책지지를 상이하게 예측하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협력적 대북정책 지지는 통일에 대한 인지적 신념들과 정서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적대적 대북정책 지지는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에 의해 강력하게 예측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및 반응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북정책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정책에 대한 평가 과정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에서도



정책의 성격에 따라 더 효과적인 교육 및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는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신념과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높일 수 있는 반면,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통일 정책 입안이나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개인의 통일태도의 하위 차원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끝으로, 본 장에서는 개인이 이미 지니고 있는 통일태도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지각, 즉 주관적 규범 지각의 역할을 일부 확인하였다. 남북통일은 본연적으로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내적태도가 어떻게 발현되며,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가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 등 통일태도에 대한 사회적 접근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의 영향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 내에서의 통일담론 등이 개인의 통일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집단 간 발생, 심화되는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통일 및 평화 교육에서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는 통일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돕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회집단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시켜 통일태도에서의 인식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통일과 대북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들을 조사하여 남북화해 및 평화의 심리적 조건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네 편의 연구를 통해 가치관, 사회정체성, 사회적 신념, 개인주의-집단주의, 통일에 대한 태도,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의 지각과 평가 등을 핵심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서, 통일과 남북화합에 대한 태도와 정책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의 구조 등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팬데믹 시기에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대북지원 및 통일 관련 정책과 행동의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2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한국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의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지향성이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3에서는 국가정체성과 한민족정체성이 내집단 투사와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남북관계에 관한 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4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감의 역할을 구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5에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ATU-K)를 활용하여 통일태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에 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에 가까웠다. 대북지원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사회 내에 차등이 존재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심리변수들이 대북지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인구통계변수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는 반면, 성별 및 소득수준은 정책지지와 유의

미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보면 20대와 30대 간, 그리고 40대, 50대, 60대 간에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20~30대는 40~60대보다 정책지지 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20~30대가 40~60대에 비해 사회적 지배성향이 높고, 한민족 동일시와 국가 동일시 수준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정치성향만으로는 국민들의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지배성향이나 한민족 및 국가 동일시와 같은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령대별 차이에 더하여, 20대 남성의 보수화 현상이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관찰되었다. 20대 남성은 20대 여성에 비해 대북지원정책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보수적이고, 사회적 지배성향은 높고 국가 동일시 수준은 낮았다. 그러나 한민족 동일시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20대 남성의 강한 반대는 민족의식의 부재보다는 보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관련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대북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도 해당 하위집단의 역할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관련 대북정책지지를 예측하는 개념모형 검증 결과,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한민족 동일시가 높을수록, 그리고 국가동일시가 낮을수록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을 강하게 지지했다. 따라서 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한민족 동일시 및 국가동일시의 개인특성변수군이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변수군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예측력이 높았다. 반면에, 국가 경제에 대한 염려, 본인의 감염 취약성 지각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은 예측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부가 투명하고 진정성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각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에 더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도움행동의도에 대한 분석에서도 전반적으로 대북지원정책지지에 관한 분석 결과와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다.

ATU-K 통일태도에 대한 기초분석 결과 통일에 대한 태도의 인지차원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차원이 반복검증되어 통일 관련 연구에서 ATU-K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ATU-K 총점으로 보았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30~60대의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2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성별과 연령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관찰되었다. 즉, 20대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협력적 대북정책은 덜 지지하고 적대적 대북정책은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에게서 관찰된 이 현상은 연구 1과 일관되게 20대 집단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보수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ATU-K 점수에서 20대 남성들은 남북통일이 야기할 긍정적인 결과로서 국력 강화와 정체성 보존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낮고 통일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20대 남성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독특함을 알 수 있다.

ATU-K로 측정된 통일태도와 개인의 심리특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보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적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한민족 동일시와 국가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 지지에서 ATU-K 척도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정치성향, 사회적 지배성향 및 국가 동일시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ATU-K 통일태도 점수는 협력적 정책에 대한 찬성, 그리고 적대적 정책에 대한 반대를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특히 ATU-K 통일태도는 다른 개인차 변수들보다 강하게 적대적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 태도를 예측했다.

ATU-K 통일태도의 인지 및 정서 하위차원과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이 협력적/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한 결과, 인지 차원 중 국력강화와 정체성 보존 차원, 그리고 긍정 정서 차원이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태도를 예측했고, 부정 정서 차원은 반대태도를 예측했다. ATU-K 태도점수를 통제한 후에도 주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지각(즉 주관적 규범 지각)은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태도를 예측한 반면,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찬성태도는 여전히 통일태도의 부정정서 차원에 의해서만 강하게 설명되었다.

이 결과는 협력적 대북정책의 경우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정책시행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수반되므로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과 주변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참조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관여되는 반면, 적대적 대북정책은 이러한 체계적인 인지 처리 과정보다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강한 부정정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관계에서 내집단 투사는 남한이 북한보다 한민족의 전형성을 지닌다는 신념인 ‘전형성 인식’과 한민족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데 있어서 남한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신념인 ‘불가결성 인식’을 수반한다. 한국인의 층소된 사회정체성(민족 정체성 - 국가정체성) 구조에서 상위범주(한민족)와 하위범주(남한)에 동시에 강하게 동일시하는 경우 내집단 투사가 발생하여 외집단이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관계에 관한 신념이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이에

더해서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경감하는 기제로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사회정체성 중심성(social identity centrality)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 수준이 모두 높을 때 내집단 투사가 높은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높을 때는 가설과 일관되게 남한 동일시가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을 강하게 예측했다. 반면에,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낮을 때에도 남한 동일시는 내집단 투사를 약하지만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내집단 투사와 북한에 대한 인식 및 남북관계 신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내집단 상대적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은 각각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부적으로, 적대적 인식은 정적으로 예측했다. 또한 내집단의 전형성과 불가결성 인식은 각각 남북 간 합병관계 신념을 정적으로 예측했다. 보다 중요하게,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의 상호작용이 내집단 불가결성 인식을 매개로 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 간 관계 신념을 예측하는 모형이 유의했다. 높은 수준의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가 내집단 투사를 매개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합병 관계 신념을 예측한다는 이 결과는 한반도 상황에서 이중 정체성이 지니는 역효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중 정체성의 역효과를 완화하는 기제로서 상위/하위범주 정체성 중심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남한을 한민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응답자들은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 동일시가 모두 강할 때 내집단 투사를 강하게 보였다. 반면에, 상위범주를 하위범주보다 더 중요시 하는 응답자들에게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남북관계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경감시키는 데 있어서 민족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위/하위 범주 중심성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들에 대한 편견을 왜곡된 불평등 신념을 반영하는 ‘집단-초점 악감정(Group-Focused Enmity: GFE)’으로 개념화하고, 한국에서 GFE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포함하는 여섯 개 하위 요인들은 상위수준에서 GFE라는 구성개념으로 포괄됨을 확인하여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로 GFE 구조를 관찰하였다.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은 서로 분리되고 구분된 대기보다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연구에서 확인된 GFE 구조로부터, 한국에서 노숙자에 대해 편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여성, 난민과 북한이탈주민, 노인과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과 같은 한국의 저지위 낙인집단들에 대해서도 편견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에서 저지위 낙인집단들에 대한 편견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불평등에 관한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심리적 토대로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GFE 총점이 높을수록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지원의도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나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차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GFE의 개념적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흥미롭게도 한국사회에 유입되어 있는 난민 집단과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의 속성과 유입 배경,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정 등에서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편견은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편견과 동일한 요인을 구성했다.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편견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하나의 동일한 요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은 소수자나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왜곡된 불평등 신념이라는 공통의 근원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개인의 문화적 지향성과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의 공통구조인 GFE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높고 독립적 자기관을 우세하게 지니고 있는 응답자들이 낮은 수준의 GFE를 보였다. 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을 평가절하하고 불평등 상황을 고착시키는 차별적 신념이 GFE의 현상적 특징임을 감안하면, 집단주의 가치를 숭상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성숙, 발전에 대해 심리적으로 몰입하고 자기-개념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강하게 지각하여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범으로부터 자신을 심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동시에 충족될 때 GFE를 경감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 간 감정은 고착화된 갈등에 직면한 집단 구성원들에게 극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격성이나 적대감 같은 다양한 최종적 집단 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정된 사실이다.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의 집단 간 파괴적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이와 같은 갈등에서의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현행 연구의 목표는 한반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집단 간 공감의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집단 간 공감은 협력이나 통일과 같은 집단 간 건설적 결과와 가장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집단 간 공감과 유화정책 간의 연관성은 세계관(예: 이념),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신념, 인지적 평가, 그리고 집단 간 파괴적 감정 등 관련성이 높은 다양한 여타 사회심리학적 요인 감정을 초월하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현행 연구는 집단 간 건설적 감정의

역할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확장하는 한편, 고착화된 갈등 상황에서조차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집단 간 공감의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집단 간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자들과 심리 상담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응용방법 역시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로부터 전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강하게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중도층에 대한 정책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평등주의, 공동체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팬데믹 시기 남북 화해와 협력에 우호적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20~30대 남성들의 심리특성을 고려한 정책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일반적인 교육과 재난 상황에서 정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황 특수적인 정책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지원정책에 대한 소극적 지지층과 적극적 지지층을 구분하는 것이 정책 홍보 및 담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통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ATU-K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통일태도의 인지 차원과 정서 차원의 차별적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의 통일태도를 정교하게 파악하고 연령과 성별, 교육 수준 등에 따른 사회 하위집단들 간의 통일태도를 세분화하여 정책 수립 및 홍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의 정치성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이라는 특수한 장면에서는 개인의 정치성향보다도 통일태도의 예측력이 더 높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태도를 구성하는 신념과 정서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일 수 있다. 즉, 협력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는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신념과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는 통일에 대한 부정정서를 감소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역할을 고려하여 미디어의 영향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 내에서의 통일담론 등이 개인의 통일태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민족정체성과 국가(남한) 정체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사회정체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통일 교육 및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우호적인 남북한 간 상호인식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민족과 국가에 모두 강하게 동일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내외집단으로 구분되는 하위범주보다는 공동의 상위범주가 더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 및 홍보에서 두 정체성을 함께 증진하는 방안과 이에 더해 한민족공동체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범주로 여겨지도록 교육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예: 한민족정체성)은 강화하고 다른 정체성(예: 남한정체성)은 약화하는 형태의 개입 전략은 효과가 크지 않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단순히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성 교류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남북한이 한민족이고 공동범주에 포함되어있다는 인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민족이 어떤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유지되거나 변화했는지, 남북한이 각각 한민족의 어떤 고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왜 한민족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들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며, 사회의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신념의 교정과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타파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저지위 낙인집단을 평가절하하고 불평등 상황을 고착시키는 차별적 신념이 GFE의 현상적 특징임을 감안하면, 집단주의 가치를 숭상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성숙, 발전에 대해 심리적으로 몰입하고 자기-개념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강하게 지각하여 저지위 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범으로부터 자신을 심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동시에 충족될 때 GFE를 경감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사회의 소수 약자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사회의 통합과 안녕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 그리고 평등과 정의, 통합이 이 시대를 규정하는 시대정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GFE에서 관찰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관의 긍정적 상승효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의 다양한 저지위 낙인집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공동체 가치를 고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 각자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의 교육과 계몽이 요구된다. 이는 장차 남북의 심리적 통합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체로서 평화와 화해를 증진하는 데에도 요구되는 심리적 조건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김범수 외. 2021. 『2020 통일의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

김학재 외. 2020. 『2019 통일의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

박주화 외. 2018.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 연구원.

박주화·강혜석·Steven Sloman·Eran Halperin·Babak Hemmatian·Nimrod Nir. 2020.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 연구원.

박주화·이민규·최훈석·권영미·Steven Sloman·Eran Halperin. 2019.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서울: 통일연구원.

박주화·최훈석·권영미·이하연. 2020.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백낙청. 2009.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파주: 창비.

\_\_\_\_\_. 2012. 『2013년 체제 만들기』. 파주: 창비.

이상신·민태은·윤광일·구본상. 2021. 『KINU 통일의식조사 2021: Executive Summary』. 서울: 통일연구원.

Aiken, Leona S., Stephen G. West, and Raymond R. Reno.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Ajzen, Icek, and Martin Fishbein. 2005. "The Influence of Attitudes on Behavior." In *The Handbook of Attitudes*, edited by

- Dolores Albarracín, Blair T. Johnson and Mark P. Zanna, 173–221.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llport, Gordon.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London: Pearson.
- Bar-Tal, Daniel. 2013. *Intractable Conflicts: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and Dynam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al, Daniel, Eran Halperin, and Ruthie Pliskin. 2015. “Why Is It So Difficult to Resolve Intractable Conflicts Peacefully? A Sociopsychological Explanation.” In *Handbook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edited by Mauro Galluccio, 73–92.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Batson, C. Daniel., and Adam A. Powell. 2003. “Altruism and Prosocial Behavior.” In *Handbook of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edited by Theodore Millon and Melvin J. Lerner, vol. 5, 463–484. Hoboken: John Wiley & Sons.
- Brewer, Marilynn B. 2007.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Social Categorization, Ingroup Bias, and Outgroup Prejudice.” In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2nd ed., edited by Arie W. Kruglanski and Tory E. Higgins, 695–715. New York: Guilford.
- Brown, Rupert. 2011. *Prejudice: Its Social Psychology*. Oxford: John Wiley & Sons.
- Chun, Yeung-Pyung. 2010. *South Korea’s Policy on Social Minoriti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Crisp, Richard J., and Miles Hewstone. 2007. “Multiple Social Categorization.”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edited by Mark P. Zanna, vol. 3, 163–254.

Cambridge: Academic Press.

- Dovidio, John F., and Samuel L. Gaertner. 2010. "Intergroup Bias." In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Susan T. Fiske, Daniel T. Gilbert, and Gardner Lindzey, vol. 2, 1084–1121. Hoboken: John Wiley & Sons.
- Dovidio, John F., Samuel L. Gaertner, and Tamar Saguy. 2007. "Another View of 'W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Perspectives on a Common Ingroup Identity." I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Wolfgang Stroebe and Miles Hewstone, vol. 18, 296–330. New York: Psychology Press.
- Eagly, Alice H., and Shelly Chaiken.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 Ellemers, Naomi, and S. Alexander Haslam. 2012. "Social Identity Theory." In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Paul A. M. Van Lange, Arie W. Kruglanski, and E. Tory Higgins, vol. 2, 379–398.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Frijda, Nico. H. 1986. *The Emo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lperin, Eran. 2015. *Emotions in Conflict: Inhibitors and Facilitators of Peace Making*. New York: Routledge.
- Halperin, Eran, Keren Sharvit, and James J. Gross. 2011. "Emotion and Emotion Regulation in Intergroup Conflict: An Appraisal-Based Framework." In *Intergroup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edited by Daniel Bar-Tal, 83–103. New York: Psychology Press.



- Heitmeyer, Wilhelm. 2002. "Gruppenbezogene Menschenfeindlichkeit: Die Theoretische Konzeption und Erste Empirische Ergebnisse [Group Focused Enmity: Theoretical Conception and First Empirical Results]." In *Deutsche Zustände [German Conditions]*, edited by Wilhelm Heitmeyer, 15–34. Frankfurt: Suhrkamp.
- Hogg, Michael A. 2004. "Uncertainty and Extremism: Identification with High Entitativity Groups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In *The Psychology of Group Perception: Perceived Variability, Entitativity, and Essentialism*, edited by Vincent Yzerbyt, Charles M. Judd, and Olivier Corneille, 401–418. New York: Psychology Press.
- Hu, Li-Tze, and Peter M. Bentler.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edited by Rick H. Hoyle, 76–99.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ume, David. 1957. *An Enquir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ited by Charles W. Mandel. Indianapolis: Liberal Arts.
- Huo, Yuen J. 2020.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Together Apart: The Psychology of COVID-19*, edited by Jolanda Jetten, Stephen D. Reicher, S. Alexander Haslam, and Tegan Cruwys, 113–118.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 Kitayama, Shinobu, Sean Duffy, and Yukiko Uchida. 2007. "Self as Cultural Mode of Being." In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Shinobu Kitayama and Dov Cohen, 136–17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line, Rex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üpper, Beate, and Andreas Zick. 2014. "Group-Focused Enmity: Prevalence, Correlations and Causes of Prejudices in Europe." In *The Palgrave Handbook of Global Political Psychology*, edited by Paul Nesbitt-Larking and Tereza Capelos, 242-262. London: Palgrave Macmillan.
- Mackie, Diane M., Angela T. Maitner, and Eliot R. Smith. 2016. "Intergroup Emotions Theory." In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edited by Todd D. Nelson, 149-174. New York: Psychology Press.
- Mackie, Diane M., and Eliot R. Smith. 2015. "Intergroup Emotions." In *APA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 Group Processes, edited by Mario Mikulincer and Philip R. Shaver, vol. 2, 263-29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iller, Dale T., and Cathy McFarland. 1991. "When Social Comparison Goes Awry: The Case of Pluralistic Ignorance." In *Social Comparis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Jerry Suls and Thomas Ashby Wills, 287-313. Mahwah: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yers, Michael W., and Sara D. Hodges. 2008. "Making It Up and Making Do: Simulation, Imagination, and Empathic Accuracy." In *Handbook of Imagination and Mental Simulation*, edited by Keith D. Markman, William M. P. Klein, and Julie A. Suhr, 281-294. New York: Psychology Press.
- Oakes, Penelope S., Alexander Haslam, and John C. Turner. 1998. "The Role of Prototypicality in Group Influence and Cohesion: Contextual Variation in the Graded Structure

- of Social Categories.” In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ited by Stephen Worchel, 75–92. London: Sage Publications.
- Parkinson, Brian, Agneta H. Fischer, and Antony S.R. Manstead. 2005. *Emotion in Social Relations: Cultural, Group, and Interpersonal Processes*. New York: Psychology Press.
- Tajfel, Henri, and John C. Turner.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33–47. Monterey: Brooks/Cole.
- 
- \_\_\_\_\_. 1986.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4th ed., edited by William G. Austin and Stephen Worchel, 7–24. Chicago: Nelson–Hall.
- Triandis, Harry.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Westview Press.
- Triandis, Harry C., and Michele J. Gelfand. 2012.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Paul A. Van Lange, Arie W. Kruglanski, and Tory E. Higgins, 498–520.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Turner, John C. 1987. “A Self–Categorisation Theory.” In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sation Theory*, edited by John C. Turner, Michael A. Hogg, Penelope J. Oakes, Stephen D. Reicher, and Margaret S. Wetherell, 42–67. New Jersey: Blackwell.
- Turner, John C., and Katherine J. Reynolds. 2012. “Self–Categorization Theory.” In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 Psychology*, edited by Paul A. M. Van Lange, Arie W. Kruglanski, and E. Tory Higgins, vol. 2, 399–417.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Turner, John. C., Michael A. Hogg, Penelope J. Oakes, Stephen D. Reicher, and Margaret Wetherell.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Basil Blackwell.
- Weiner, Bernard. 1995. *Judgments of Responsibility: A Foundation for a Theory of Social Conduct*. New York: Guilford Press.
- Wenzel, Michael. 2004. “A Social Categorisation Approach to Distributive Justice.” I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Wolfgang Stroebe and Miles Hewstone, vol. 15, 219–257. Oxford: Taylor & Francis.
- Wenzel, Michael, Am lie Mummendey, and Sven Waldzus. 2007. “Superordinate Identities and Intergroup Conflict: The Ingroup Projection Model.” In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edited by Wolfgang Stroebe and Miles Hewston, vol. 18, 331–372. Oxford: Taylor & Francis.
- Wenzel, Michael, Sven Waldzus, and Melanie C. Steffens. 2017. “Ingroup Projection as a Challenge of Diversity: Consensus about and Complexity of Superordinate Categories.” In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Prejudice*, edited by Chris G. Sibley and Fiona K. Barlow, 65–8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zerbyt, Vincent, and Toon Kuppens. 2013. “From Group-Based Appraisals to Group-Based Emotions.” In *Changing Emotions*, edited by Dirk Hermans, Bernard Rim, and Batja Mesquita, 97–104. London: Psychology Press.

## 2. 논문

- 구본상. 2020. “공정성 인식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평화연구』 28(2): 77-111.
- 권수현. 2017.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통일정책연구』 26(1): 177-204.
- 권영승·이수정. 2011.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38.
- 김갑식. 2007. “한국사회 남남갈등: 기원, 전개과정 그리고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23(2): 31-59.
- 김혜숙. 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35-50.
- 김혜숙·김도영·신희천·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남희은·김선희·배은석. 2014. “대학생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에 따른 탈북자에 대한 태도 및 통일인식 영향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86-109.
- 박순성. 2012.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한 두 개의 접근.” 『경제와 사회』 94: 13-38.
- 송영훈·권수현. 2013. “대북정책에 대한 개인선호 결정요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 『아세아연구』 56(1): 153-182.
- 유연재·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 윤광일. 2019.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국방연구』 62(4): 25-66.

- 이내영. 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평화연구』 22(1): 167-206.
- 이동기. 2021. “정책 인지도 및 정책 필요성 태도가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의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4(4): 273-295.
- 이석희·강정인. 2017.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연구』 26(2): 1-27.
- 이자연. 2021. “AI의 혜택 및 위험성 인식과 AI에 대한 태도, 정책 지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193-204.
- 이준웅. 2004. “언론 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8(1): 28-56.
- 이화행·정성호·강경수·최진호·이정기. 2015. “통일보도, 평가, 사회 심리적 변인이 통일 관련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통일세금 납부의도, 햇볕정책/평화통일지지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투표 의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1): 62-89.
- 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29-62.
- 장승진. 2020. “보수적이지 않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주의자: 이념성향, 정책 선호, 그리고 가치 정향.” 『한국정당학회보』 19(1): 129-156.
- 정영철. 2018. “국가 - 민족 우선의 통일론에 대한 성찰.” 『통일인문학』 74: 227-260.
- 채진원. 2017. “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 『통일인문학』 69: 161-198.
- 최장호·최유정. 2021.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1(2): 1-24.

- 최훈석·이하연·권영미·박주화. 2021.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59-284.
- 최훈석·이하연·정지인. 2019.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45-59.
- Ajzen, Icek.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r-Tal, Daniel. 2007.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11): 1430-1453.
- Bar-Tal, Daniel, and Yigal Rosen. 2009. “Peace Education in Societies Involved in Intractable Conflicts: Direct and Indirect Model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9(2): 557-575.
- Barlow, Meaghan, A., Carsten Wrosch, Jean-Philippe Gouin, and Ute Kunzmann. 2019. “Is Anger, but Not Sadness, Associated with Chronic Inflammation and Illness in Older Adulthood?” *Psychology and Aging* 34(3): 330-340.
- Barsade, Sigal, G. 2002. “The Ripple Effect: Emotional Contagion and Its Influence on Group Behavio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4): 644-675.
- Black, Jessica E., and Jennifer L. Barnes. 2020. “Fiction and Moralit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s Between Reading Exposure, Empathy, Morality, and Moral Judgment.” *Psychology of Popular Media* 10(2): 149-164.
- Bond, Michael Harris 2004. “Culture and Aggression—From Context

- to Coerc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8(1): 62–78.
- Bower, Gordon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2): 129–148.
- Brewer, Marilynn B., and Ya–Ru Chen. 2007. “Where (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114(1): 133–151.
- Cameron, James E. 2003. “A Three–Factor Model of Social Identity.” *Self and Identity* 3(3): 239–262.
- Canetti–Nisim, Daphna, Gal Ariely, and Eran Halperin. 2008. “Life, Pocketbook, or Culture: The Role of Perceived Security Threats in Promoting Exclusionist Political Attitudes toward Minorities in Israel.”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1(1): 90–103.
- Carnevale, Peter. J., and Alice M. Isen. 1986. “The Influence of Positive Affect and Visual Access on the Discovery of Integrative Solutions in Bilateral Negoti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7(1): 1–13.
- Choi, Hoon–Seok, and Hyun Euh. 2019. “Being Nice Isn’t Enough: Prosocial Orientation and Perceptions of Self–Uniqueness Jointly Promote Outgroup Reparatio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22(8): 1215–1234.
- Choi, Hoon–Seok, Jeong–Gil Seo, Jeewon Hyun, and Myriam Bechtoldt. 2019. “Collectivistic Independence Promotes Group Creativity by Reducing Idea Fixation.” *Small Group Research* 50(3): 381–407.



- Choi, Hoon-Seok, Sun-Joo Cho, Jeong-Gil Seo, and Myriam N. Bechtoldt. 2018. "The Joint Impact of Collectivistic Value Orientation and Independent Self-Representation on Group Creativity."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21(1): 37-56.
- Choi, Hoon-Seok, and Young-Jae Yoon. 2018. "Collectivistic Values and an Independent Mindset Jointly Promote Group Creativity: Further Evidence for a Synergy Model."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2(4): 236-248.
- Clark, Anna Lee, and David Watson. 1988. "Mood and the Mundane: Relations between Daily Life Events and Self-Reported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2): 296-308.
- Cohen-Chen, Smadar, Eran Halperin, Roni Porat, and Daniel Bar-Tal. 2014. "The Differential Effects of Hope and Fear on Information Processing in Intractable Conflict."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Psychology* 2(1): 11-30.
- Cohen-Chen, Smadar, Ruthie Pliskin, and Amit Goldenberg. 2020. "Feel Good or Do Good? A Valence-Function Framework for Understanding Emo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9(4): 388-393.
- Cole, Shana, Emily Balcetis, and David Dunning. 2013. "Affective Signals of Threat Increase Perceived Proximity." *Psychological Science* 24(1): 34-40.
- Cross, Susan E., Erin E. Hardin, and Berna Gercek-Swing. 2011. "The What, How, Why, and Where of Self-Constru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5(2): 142-179.

- Croucher, Stephen M., Thao Nguyen, and Diyako Rahmani. 2020. "Prejudice toward Asian American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Effects of Social Media Use in the United States." *Frontiers in Communication* 5(39): 1-12. <https://doi.org/10.3389/fcomm.2020.00039>. Accessed September 3, 2021.
- Dijker, Anton, J., Willem Koomen, Hentietje van den Heuvel, and Nico H. Frijda. 1996. "Perceived Antecedents of Emotional Reactions in Inter-Ethnic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2): 313-329.
- Doosje, Bertjan, Nyla R. Branscombe, Russell Spears, and Antony S. Manstead. 1998. "Guilty by Association: When One's Group Has a Negative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4): 872-886.
- Duan, Changming, and Clara E. Hill. 1996. "The Current State of Empath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3): 261-274.
- Edwards, Kari. 1990. "The Interplay of Affect and Cognition i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2): 202-216.
- Eisenberg, Nancy, Natalie D. Eggum, and Laura Di Giunta. 2010. "Empathy-Related Responding: Associations with Prosocial Behavior, Aggression, and Intergroup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4(1): 143-180. <https://doi.org/10.1111/j.1751-2409.2010.01020.x> Accessed September 3, 2021.
- Esses, Victoria M., John F. Dovidio, Lynne M. Jackson, and Tamara L. Armstrong. 2001. "The Immigration Dilemma: The Role of Perceived Group Competition, Ethnic Prejudice,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389-412.

- Esses, Victoria M., Lynne M. Jackson, and Tamara L. Armstrong.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Finlay, Krystina A., and Walter G. Stephan. 2000.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e Effects of Empathy on Racial Attitude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8): 1720–1737.
- Fredrickson, Barbara L., and Christine Branigan. 2005. "Positive Emotions Broaden the Scope of Attention and Thought-action Repertoires." *Cognition & Emotion* 19(3): 313–332.
- Fredrickson, Barbara L., Michele M. Tugade, Christian E. Waugh, and Gregory R. Larkin. 2003.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in Crisi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s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65–376.
- Gendolla, Guido H. 2017. "Comment: Do Emotions Influence Action? – Of Course, They Are Hypo-Phenomena of Motivation." *Emotion Review* 9(4): 348–350.
- George, Jennifer M., and Arthur P. Brief. 1992. "Feeling Good–Doing Good: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Mood at Work–Organizational Spontaneity Relationship." *Psychological Bulletin* 112(2): 310–329.
- Halperin, Eran. 2014. "Emotion, Emotion Regul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Emotion Review* 6(1): 68–76.
- Halperin, Eran, Alexandra G. Russell, Carol S. Dweck, and James J. Gross. 2011. "Anger, Hatred, and the Quest for Peace:

- Anger Can Be Constructive in the Absence of Hatr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5(2): 274–291.
- Halperin, Eran, and Daniel Bar–Tal. 2011. “Socio–Psychological Barriers to Peace Making: An Empirical Examination within the Israeli Jewish Society.” *Journal of Peace Research* 48(5): 637–651.
- Halperin, Eran, and Michal Reifen Tagar. 2017. “Emotions in Conflicts: Understanding Emotional Processes Sheds Light on the Nature and Potential Resolution of Intractable Conflict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7: 94–98.
- Harth, Nicole Syringa, Thomas Kessler, and Colin Wayne Leach. 2008. “Advantaged Group’s Emotional Reactions to Intergroup Inequality: The Dynamics of Pride, Guilt, and Sympath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4(1): 115–129.
- Hasan–Aslih, Siwar, Ruthie Pliskin, Martjin van Zomeren, Eran Halperin, and Tamar Saguy. 2019. “A Darker Side of Hope: Harmony–Focused Hope Decreases Collective Action Intentions among the Disadvantag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5(2): 209–223.
- Hatemi, Peter K., John R. Alford, John R. Hibbing, Nicholas G. Martin, and Lindon J. Eaves. 2009. “Is There a ‘Party’ in Your Gen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2(3): 584–600.
- Hewstone, Miles, Mark Rubin, and Hazel Willis. 2002. “Intergroup Bia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575–604.
- Ho, Arnold et al. 2015. “The Nature of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orizing and Measuring Preferences for Intergroup Inequality Using the New SDO 7 Scale.”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9(6): 1003–1028.
- Hogg, Michael A., Dominic Abrams, and Marilynn B. Brewer. 2017. “Social Identity: The Role of Self i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20(5): 570–581.
- Hogg, Michael A., and Sarah C. Hains. 1996.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95–309.
- Hollingshead, Andrea B., and Peter Carnevale. 1990. “Positive Affect and Decision Frame in Integrative Bargaining: A Reversal of the Frame Effect.” In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1990(1): 385–389.
- Isen, Alice M., Margaret Clark, and Mark E. Schwartz. 1976. “Duration of the Effect of Good Mood on Helping: Footprints on the Sands of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3): 385–393.
- Iyengar, Shanto, Yphtach Lelkes, Matthew Levendusky, Neil Malhotra, and Sean J Westwood. 2019.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129–146.
- Iyer, Aarti, and Colin Wayne Leach. 2008. “Emotion in Inter-Group Relation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9(1): 86–125.
- Iyer, Aarti, Colin Wayne Leach, and Faye J. Crosby. 2003. “White Guilt and Racial Compensation: The Benefits and Limits of Self-Focu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1): 117–129.

- Johnston, Brian M., and Demis E. Glasford. 2018. "Intergroup Contact and Helping: How Quality Contact and Empathy Shape Outgroup Helping."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1(8): 1185–1201.
- Jost, John T., Mahzarin R. Banaji, and Brian A. Nosek. 2004. "A Decade of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ccumulated Evidence of Conscious and Unconscious Bolstering of the Status Quo." *Political Psychology* 25(6): 881–919.
- Jung, Jiin, Michael A. Hogg, and Gary J. Lewis. 2018. "Identity Uncertainty and UK–Scottish Relations: Different Dynamics Depending on Relative Identity Centrality."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21(6): 861–873.
- Jung, Jiin, Michael A. Hogg, and Hoon–Seok Choi. 2016.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37(3): 341–350.
- Kriesberg, Louis. 1993. "Intractable Conflicts." *Peace Review* 5(4): 417–421.
- Lazarus, Richard S. 1991. "Cognition and Motivation i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4): 352–367.
- Lee, Hayeon, and Hoon–Seok Choi. 2020. "Independent Self–Concept Promotes Group Creativity in a Collectivistic Cultural Context Only When the Group Norm Supports Collectivism."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37/gdn0000129>. Accessed September 3, 2021.
- Lee, Woo–Young, and Hayeon Lee. 2019. "The Perception of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Historical Social*

*Research* 44(4): 293–307.

- Mackie, Diane M., and Eliot R. Smith, 2017. “Group-Based Emotion i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0(5): 658–668.
- Mackie, Diane M., Thierry Devos, and Eliot R. Smith, 2000. “Intergroup Emotions: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4): 602–616.
- Manning, Mark, 2009. “The Effects of Subjective Norms on Behaviour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 Meta-Analysi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8(4): 649–705.
- Maoz, Ifat, and Clark McCauley, 2005. “Psychological Correlates of Support for Compromise: A Polling Study of Jewish-Israeli Attitudes toward Solutions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Political Psychology* 26(5): 791–808.
- \_\_\_\_\_. 2008. “Threat, Dehumanization, and Support for Retaliatory Aggressive Policies in Asymmetric Conflict.”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2(1): 93–116.
- Mason, Lilliana, 2018. “Ideologues without Issues: The Polarizing Consequences of Ideological Identities.” *Public Opinion Quarterly* 82(S1): 866–887.
- Miller, Daniel A., Eliot R. Smith and Diane M. Mackie, 2004.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and Political Predispositions on Prejudice: Role of Intergroup Emo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7(3): 221–237.
- Mummendey, Amelie, and Michael Wenzel, 1999. “Social

- Discrimination and Tolerance in Intergroup Relations: Reactions to Intergroup Dif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2): 158–174.
- Nadler, Arie, and Ido Liviatan. 2006. “Intergroup Reconciliation: Effects of Adversary’s Expressions of Empathy, Responsibility, and Recipients’ Tru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4): 459–470.
- Ng Tseung-Wong, Caroline, and Maykel Verkuyten. 2010. “Intergroup Evaluations, Group Indispensability and Prototypicality Judgments: A Study in Mauritius.”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13(5): 621–638.
- Oyserman, Daphna, Heather M. Coon, and Markus Kimmelmeier.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Paluck, Elizabeth Levy, Roni Porat, Chelsey S. Clark, and Donald P. Green. 2021. “Prejudice Reduction: Progress and Challeng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2: 533–560.
- Peffley, Mark, and Jon Hurwitz. 2002. “The Racial Components of ‘Race-Neutral’ Crime Policy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23(1): 59–75.
- Pettigrew, Thomas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1): 65–85.
- Pettigrew, Thomas F., and Linda Tropp.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Pittinsky, Todd L., and R. Matthew Montoya. 2016. “Empathic Joy in Positive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511–523.

- Pratto, Felicia, Jim Sidanius, Lisa M. Stallworth, and Bertram F. Malle.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741–763.
- Prentice, Deborah A., and Dale T. Miller. 1993. "Pluralistic Ignorance and Alcohol Use on Campus: Some Consequences of Misperceiving the Social Nor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2): 243–256.
- Ramasubramanian, Srividya. 2010. "Television Viewing, Racial Attitudes, and Policy Preferences: Exploring the Role of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Emotions in Influencing Support for Affirmative Ac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77(1): 112–114.
- Rauwald, Kimberly S., and Colleen F. Moore. 2002. "Environmental Attitudes as Predictors of Policy Support across Three Countries." *Environment and Behavior* 34(6): 709–739.
- Rigoli, Francesco. 2020. "Opinions about Immigration, Patriotism, and Welfare Policies during the Coronavirus Emergency: The Role of Political Orientation and Anxiety." *The Social Science Journal*.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80/03623319.2020.1806583>. Accessed September 3, 2021.
- Rodríguez-Pérez, Armando, Naira Delgado-Rodríguez, Veronica Betancor-Rodríguez, Jacques-Philippe Leyens, and Jerown Vaes. 2011. "Infra-Humanization of Outgroups throughout the World. The Role of Similarity, Intergroup

- Friendship, Knowledge of the Outgroup, and Status.” *Anales de Psicología* 27(3): 679–687.
- Rosler, Nimrod, Smadar Cohen–Chen, and Eran Halperin. 2017. “The Distinctive Effects of Empathy and Hope in Intractable Conflic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1(1): 114–139.
- Różycka–Tran, Joanna, Paweł Boski, and Bogdan Wojciszke. 2015. “Belief in a Zero–Sum Game as a Social Axiom: A 37–Nation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4): 525–548.
- Sabucedo, José Manuel, and Xiana Vilas. 2014. “Anger and Positive Emotions in Political Protest.” *Universitas Psychologica* 13(3): 829–838.
- Shechtman, Zipora, and Ola Basheer. 2005. “Normative Beliefs Supporting Aggression of Arab Children in an Intergroup Conflict.”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1(4): 324–335.
- Skitka, Linda J., Elizabeth Mullen, Thomas Griffin, Susan Hutchinson, and Brian Chamberlin. 2002. “Dispositions, Scripts, or Motivated Correction? Understa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in Explanations for Soci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470–487.
- Stefaniak, Anna, Robyn K Mallett, and Michael JA Wohl. 2020. “Zero-sum Beliefs Shape Advantaged Allies’ Support for Collective Ac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6): 1259–1275.
- Stephan, Walter G., and Cookie W. Stephan. 1985.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41(3): 157–175.

- Tagar, Michal Reifen, Christopher M. Federico, and Eran Halperin. 2011. "The Positive Effect of Negative Emotions in Protracted Conflict: The Case of Ang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1): 157–164.
- Tajfel, Henri.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2): 65–93.
- Tam, Tania, Miles Hewstone, Jared B. Kenworthy, Ed Cairns, Claudia Marinetti, Leo Geddes, and Brian Parkinson. 2008. "Postconflict Reconciliation: Intergroup Forgiveness and Implicit Biases in Northern Ireland." *Journal of Social Issues* 64(2): 303–320.
- Totterdell, Peter. 2000. "Catching Moods and Hitting Runs: Mood linkage and Subjective Performance in Professional Sport Team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6): 848.
- Trommsdorff, Gisela, Wolfgang Friedlmeier, and Boris Mayer. 2007. "Sympathy, Distress, and Prosocial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in Four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3): 284–293.
- Van Zomeren, Martijin, Russell Spears, and Colin Wayne Leach. 2008. "Exploring Psychological Mechanisms of Collective Action: Does Relevance of Group Identity Influence How People Cope with Collective Disadvantag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7(2): 353–372.
- Van Zomeren, Martijin, Tom Postmes, and Russell Spears. 2008. "Toward an Integrative Social Identity Model of Collective Action: A Quantitative Research Synthesis of Three Socio-psychological Perspectives." *Psychological Bulletin* 134(4): 504–535.

- Verkuyten, Maykel, Borja Martinovic, and Anouk Smeekes. 2014. "The Multicultural Jigsaw Puzzle: Category Indispensability and Acceptance of Immigrants' Cultural Righ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11): 1480–1493.
- Voci, Alberto. 2006. "The Link between Identification and In-Group Favouritism: Effects of Threat to Social Identity and Trust-Related Emo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2): 265–284.
- Waldzus, Sven, Am lie Mummendey, Michael Wenzel, and Franziska Boettcher. 2004. "Of Bikers, Teachers and Germans: Groups' Diverging Views About Their Prototypica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3): 385–400.
- Wilkins, Clara L., Joseph D. Wellman, Laura G. Babbitt, Negin R. Toosi, and Katherine D. Schad. 2015. "You Can Win but I Can't Lose: Bias against High-Status Groups Increases Their Zero-Sum Beliefs about Discrimi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7: 1–14.
- Yamagishi, Toshio, and Midori Yamagishi.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 Zahn-Waxler, Carolyn, Pamela M. Cole, Jean Darby Welsh, and Nathan A. Fox. 1995. "Psychophysiological Correlates of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s in Preschool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 27–48.
- Zick, Andreas, Carina Wolf, Beate Küpper, Eldad Davidov, Peter Schmidt, and Wilhelm Heitmeyer. 2008. "The Syndrome

of Group-Focused Enmity: The Interrelation of Prejudices Tested with Multiple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Journal of Social Issues* 64(2): 363-383.

### 3. 기타 자료

KBS 남북교류협력단. 2021. “2021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결과(요약).” 2021.8.14. [https://news.kbs.co.kr/datafile/2021/08/20210814\\_nlRzR5.hwp](https://news.kbs.co.kr/datafile/2021/08/20210814_nlRzR5.hwp) (검색일: 2021.8.26.).

Ajzen, Icek. 2012. “Constructing a Theory of Planned Behaviour Questionnaire.” [http://people.umass.edu/aizen/pdf/tpb\\_measurement.pdf](http://people.umass.edu/aizen/pdf/tpb_measurement.pdf). Accessed March 5, 2021.

Brown, Brené. (2013). “Empathy vs Sympathy. Twenty One Toys.” <https://twentyonetoys.com/blogs/teaching-empathy/brene-brown-empathy-vs-sympathy>. Accessed March 5, 2021.

Dennison, James, and Andrew Geddes. 2020. “Why COVID-19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Will Become More Negative.” *IOM Policy Paper*. <https://publications.iom.int/system/files/pdf/why-covid19.pdf>. Accessed September 3, 2021.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보고서

### 2019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을 결정요인 분석	정은이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창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 2020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 <Study Series>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 2021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과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감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	--------------------------------	-------

###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 북한인권백서

---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 정기간행물

---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10,000원

## 기타

---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위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회원자격 갱신 시 보유기간은 1년 연장)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5.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업체(수탁업체)	업무내용
(주) 코리아디엠	발간물 발송 업무 처리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십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